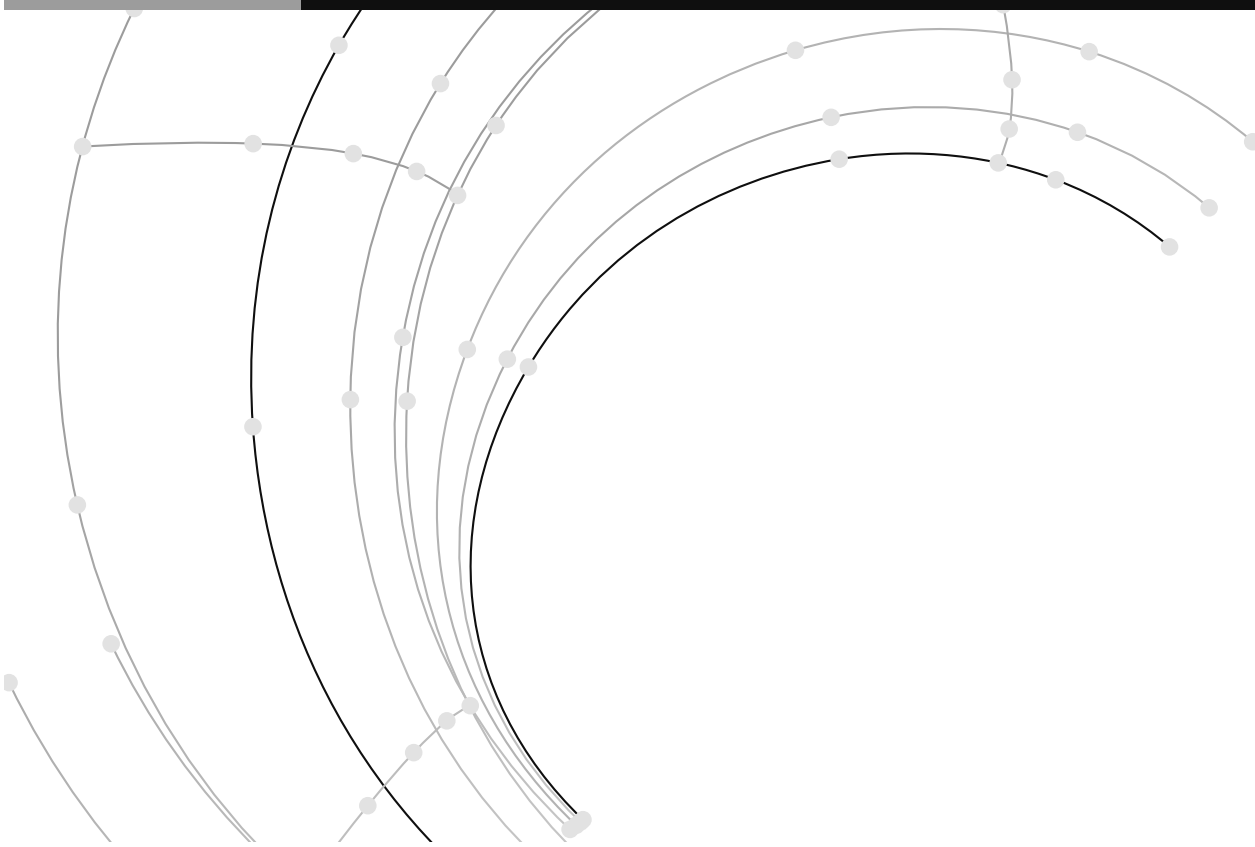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Assessment and Restructuring Strategy of  
Population Policies in Gyeonggi Province

유정균 외  
jkryu@gri.re.kr



정책연구 2025-41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Assessment and Restructuring Strategy of  
Population Policies in Gyeonggi Province

**인쇄** 2025년 7월  
**발행** 2025년 7월  
**발행인** 강성천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5  
**ISBN** 979-11-6853-427-8 93330

**연구책임**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기태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김재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신한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건의

-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개편 방안 및 인구정책 방향 제안
  - 추진전략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 등의 추진 전략을 개편하는 방안 필요
  -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이 연구에서는 2025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들을 재구조화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인구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구조화 방안
  -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전환) 결혼-출산-양육-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주기 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정책 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로 큰 틀에서 정책을 분류하되, 동일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거나 제외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경기도 인구정책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다섯 가지 정책 목표 및 중점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 제시
  - (비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정책 방향 설정

- (정책목표 1)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성 강화
- (정책목표 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의 공백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목표 3)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 건강관리,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중심으로 후기 노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정책목표 4)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 경제적 지원, 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
- (정책목표 5)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
  - 실질적 정주를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 반영 시스템 구축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추진체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구전략실' 신설 제안
  - 정책 기획, 집행, 조정, 평가 기능을 통합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인구전략실」 설치 및 운영
  - 산하에 기능별 전문 부서를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
  -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기반 강화
  -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 지원 체계 강화
  - 정책 추진 실무자의 인구정책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지역 간 인구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 인구정책 성과의 체계적 평가 및 정책 환류 반응을 통한 정책 운영 강화

**키워드** 저출생, 고령화, 인구정책, 재구조화, 추진체계

## 정책건의

## 제1장 | 서론 \_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 인구정책 동향 및 사례 \_ 7

- 1. 중앙정부 인구정책 ..... 9
  - 1)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 9
  - 2) 분야별 정책과제 변화 ..... 14
  - 3) 2024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 23
- 2. 경기도 인구정책 ..... 28
  - 1)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 ..... 28
  - 2)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30
- 3. 저출생 사업 유형화 ..... 38
  - 1) 현금성 지원 사업 ..... 38
  - 2) 서비스 지원 사업 ..... 41
- 4. 고령화 사업 유형화 ..... 45
  - 1) 현금성 지원 사업 ..... 45
  - 2) 서비스 지원 사업 ..... 47
- 5. 소결 ..... 51
  - 1) 저출생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51
  - 2) 고령화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51

## 제3장 | 경기도 인구정책 특성 및 현황 \_ 53

- 1. 경기도 인구정책 유형 분석 ..... 55
  - 1)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현황 ..... 55
  - 2)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 현황 ..... 58
  - 3)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 60

2.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 분석 .....	70
1)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예산 .....	70
2) 2024~2025년 사업 분야 및 지원 성격별 예산 비교 .....	71
3. 소결 .....	77
1) 지원 성격 및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검토 결과 .....	77
2) 예산 분석 결과 .....	79

## 제4장 | 경기도 인구정책 진단 및 평가 \_ 81

1. 인구정책 관련도 및 동태 분석 .....	83
1)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 분석 .....	85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 분석 .....	93
3)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 분석 .....	103
4)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략 분석 .....	112
5) 전략별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121
2.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	123
1) 조사 개요 .....	123
2) 저출생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	125
3)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	139
3. 소결 .....	154
1) 저출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54
2) 고령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56

## 제5장 |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_ 159

1.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	161
1) 경기도 인구정책 종합 진단 및 개선 방향 .....	161
2)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	163
3)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정밀화 .....	167
4)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 .....	172
2.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	177
1) 인구정책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 방향 .....	177
2)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	178
3)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구성 방안 .....	189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_ 195**

- 1. 결과 요약 ..... 197
- 2. 정책 제언 ..... 199

**참고문헌 \_ 203**

**Abstract \_ 205**

**부록 \_ 207**

## 표차례

[표 2-1] 기본계획 차수별 주요 경과 .....	9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4차) .....	11
[표 2-3] 연차별 소요자원 추계 .....	13
[표 2-4] 기본계획 차수별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	15
[표 2-5] 기본계획 차수별 고령사회 대책 주요 내용 .....	18
[표 2-6] 기본계획 차수별 미래역량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	20
[표 2-7] 기본계획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요 내용 .....	23
[표 2-8] 2024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	25
[표 2-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	28
[표 2-10]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재정계획 .....	29
[표 2-11]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도 시행계획 비전 및 전략 .....	32
[표 2-12]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	32
[표 2-13] 2025 경기도 시행계획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의 과제 .....	33
[표 2-14] 2025 경기도 시행계획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의 과제 .....	34
[표 2-15] 2025 경기도 시행계획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의 과제 .....	35
[표 2-16] 2025 경기도 시행계획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략의 과제 .....	36
[표 2-17] 저출생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	39
[표 2-18] 저출생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 사업 .....	42
[표 2-19] 고령화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	46
[표 2-20] 고령화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 사업 .....	48
[표 3-1]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영역별 사업 유형 현황 .....	55
[표 3-2]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중점분야별 분류 .....	56
[표 3-3] 2025년 시행계획 담당 부서별 분류 .....	57
[표 3-4] 2025년 분야 및 영역별 유형 현황 .....	58
[표 3-5] 2025년 추진전략, 분야 및 영역별 유형 현황 .....	59
[표 3-6] 2025년 경기도 저출생 정책 생애주기별 .....	63
[표 3-7] 2025년 경기도 고령화 정책 생애주기별 대상 .....	67
[표 3-8] 2025년 경기도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생애주기별 대상 .....	69
[표 3-9]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전체 예산 현황 .....	71

[표 3-10]	2025년 분야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예산액 .....	72
[표 3-11]	2025년 지원 성격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예산액 .....	73
[표 3-12]	2025년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추진전략 및 사업별 예산액 .....	74
[표 3-13]	2025년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추진전략 및 분야별 예산액 .....	76
[표 4-1]	인구정책 평가 결과 등급 분류 기준 .....	84
[표 4-2]	4분면 분류 및 전략 .....	84
[표 4-3]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	89
[표 4-4]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	89
[표 4-5]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	90
[표 4-6]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	90
[표 4-7]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	91
[표 4-8]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IPA 분석 결과 .....	91
[표 4-9]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	97
[표 4-10]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	98
[표 4-11]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	99
[표 4-1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	99
[표 4-13]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	100
[표 4-14]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IPA 분석 결과 .....	101
[표 4-15]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	107
[표 4-16]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	108
[표 4-17]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	108
[표 4-18]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	109
[표 4-19]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	109
[표 4-20]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IPA 분석 결과 .....	110
[표 4-21]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	116
[표 4-22]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	117
[표 4-23]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	117
[표 4-24]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	118
[표 4-25]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	118
[표 4-26]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IPA 분석 결과 .....	119
[표 4-27]	전략별 관련도 분석 결과 요약 .....	121
[표 4-28]	저출생 영역 및 주요 내용 .....	124

[표 4-29] 고령화 영역 및 주요 내용 .....	124
[표 4-30] 응답자 주요 특성 .....	125
[표 4-31] 결혼에 대한 가치관 .....	126
[표 4-32] 자녀에 대한 가치관 .....	127
[표 4-33]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	127
[표 4-34] 이상 자녀수 .....	128
[표 4-35]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	129
[표 4-36] 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	130
[표 4-37] 저출산의 주된 원인(1+2순위) .....	132
[표 4-38] 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	133
[표 4-39]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134
[표 4-40]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135
[표 4-41] 저출생 정책 대상의 우선 순위 .....	136
[표 4-42]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1순위+2순위) .....	137
[표 4-43] 응답자 주요 특성 .....	139
[표 4-4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	140
[표 4-45] 부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	141
[표 4-46]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	142
[표 4-47] 고령화 정책 시 우선 순위 .....	143
[표 4-48]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	144
[표 4-49] 고령화 대응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2순위) .....	145
[표 4-50]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46
[표 4-51] 노년기 돌봄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47
[표 4-52] 노년기 일자리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48
[표 4-53] 노년기 여가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49
[표 4-54]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50
[표 4-55] 노년기 교통 정책 수요(1순위+2순위) .....	151
[표 4-56]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 .....	152
[표 5-1] 경기도 인구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주요 내용 .....	163
[표 5-2] 생애주기 및 인구정책 분야 재구성 .....	173
[표 5-3] 경기도 인구정책 제외 사업 .....	176
[표 5-4] 재구조화 전략을 반영한 경기도 인구정책 체계 .....	179

[표 5-5] 영역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분류 .....	183
[표 5-6] 추진전략별 인구정책 분류 .....	183
[표 5-7] 분야별 인구정책 분류 .....	184
[표 5-8]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 .....	185
[표 5-9]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	186
[표 5-10]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고령 친화 정책 체계 구축 .....	187
[표 5-11]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	188
[표 5-12]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	188

[그림 1-1] 연구흐름도 .....	5
[그림 3-1] 2025년 분야 및 생애주기별 사업 분류 .....	61
[그림 4-1] 경기도 2025년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도 .....	83
[그림 4-2]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평가 항목 및 기준 .....	85
[그림 4-3]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85
[그림 4-4]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86
[그림 4-5]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87
[그림 4-6]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	88
[그림 4-7]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	88
[그림 4-8]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평가 항목 및 기준 .....	93
[그림 4-9]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93
[그림 4-10]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94
[그림 4-11]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95
[그림 4-1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	96
[그림 4-13]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	96
[그림 4-14]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	103
[그림 4-15]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103
[그림 4-16]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104
[그림 4-17]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105
[그림 4-18]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	106
[그림 4-19]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	106
[그림 4-20]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	112
[그림 4-21]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112
[그림 4-22]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113
[그림 4-23]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114
[그림 4-24]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	115
[그림 4-25]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	115
[그림 5-1]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 .....	189
[그림 5-2] 서울시 저출생 대응 관련 조직도 예시 .....	190

[그림 5-3]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안) .....	191
[그림 6-1] 재구조화 실행 위한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	200



# 01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저출생·고령화 동시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전환 가속
  -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출산의 고착화 상태에 놓여 있음
  - 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중(65세 이상)은 2024년 기준 16.6%이며,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인구 감소, 복지 재정 부담 증가, 지역소멸 위험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 인구 정책 추진의 성과 미흡 및 효과성 분석의 어려움
  -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양적 확대와 예산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으며,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효과성과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합적 평가 시스템 부재와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저출생 대응 정책은 생애주기 및 자녀 연령대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출산 장려금·돌봄·주거 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단절되어 운영됨
  -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연령대별·생활양식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정책은 노인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함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재구조화 필요성 제기

- 단순히 신규사업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
- 정책 간 통합, 실행 체계 개편, 수요자 맞춤형 전략 마련 등 전반적인 체계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재구조화
- 경기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
- 특히 정책 대상의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정책체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
- 기존 정책의 중복·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정책 간 통합성과 전략성을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정책 재구조화 방안 제시
-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 개선을 통해 경기도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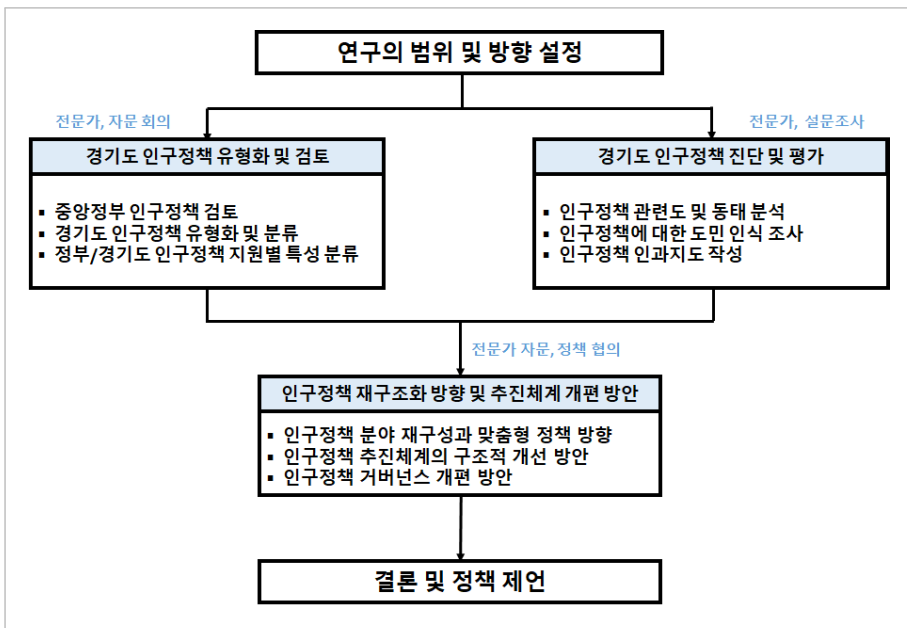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5년을 기준으로 시행계획 검토
  - 내용적 범위

- 인구정책 관련 출산, 고령화 등 핵심 목표의 정책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전 방향 제안
-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성, 필요도, 효율성 평가 및 분석
- 기존 인구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재구조화 방안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선행연구, 법·제도 검토 및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조사
- 전문가 조사: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평가 및 수요 파악

[그림 1-1] 연구흐름도



## □ 연구 진행 및 흐름도

### ○ 정책 진단

- 정책 유형화 및 분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영역, 분야, 대상, 지원 방법별로 맵핑 작업
- 정책 성과 분석: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수요자 관점 분석: 도민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 평가 및 수요 파악

### ○ 정책 재구조화 전략

- 생애주기 관점: 생애주기별 통합 정책 체계 전환
-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정밀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 반영
- 효율성 향상: 유사 정책 통합 및 효과 낮은 정책 제외
- 거버넌스 재편: 사업 담당 부서 및 영역 중심으로 거버넌스 재편 및 컨트롤 타워 강화

# 02

## 인구정책 동향 및 사례

1. 중앙정부 인구정책
2. 경기도 인구정책
3. 저출생 사업 유형화
4. 고령화 사업 유형화
5. 소결



## 제2장 인구정책 동향 및 사례

### 1) 중앙정부 인구정책

#### 1)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5년 주기)

[표 2-1] 기본계획 차수별 주요 경과

연도	주요 경과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li>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li> <li>-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05.9.1.)</li> </ul>
1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li> <li>•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li> <li>•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 구축</li> </ul>
2차: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li> <li>• 육아휴직급여 정률제('11~), 무상보육 실시('13~) 등</li> </ul>
3차: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 시도</li> <li>•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li> </ul>
3차 수정: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li> <li>-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li> </ul>
4차: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li> <li>-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li> <li>-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사회 각 분야의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의 순조롭고 유연한 이행 지원</li> </ul>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9page, 40page 참고.

-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흐름의 반전을 도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에 걸쳐 총 23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체계를 마련하며,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확산과 미래세대 양성에 중점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의료와 건강 관리의 내실화, 노인 참여 확대 및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여성과 고령층 등 미활용 인력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반 조성
  - 정책성과 관리체계 구축,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전략적 홍보와 교육 추진 등 정책 거버넌스 측면의 기반 정비
  - 2008년 11월,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1차 계획을 보완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
-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
  -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활력 확보,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집중
  -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잠재인력 활용 기반 마련,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경제사회 제도의 구조적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략적 교육·홍보 활동 전개, 민간참여 확대, 범국민 캠페인 전개,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 분위기 조성 병행
- 제3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개별적·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인구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전략 전환을 시도
-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및 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용 및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정부 단독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및 지역과의 협력,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강화
  -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등 구조적 여건 개선,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천 중심의 문화 혁신, 연금 확대 및 실버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적 대응력 제고
  - 국가-지방-민간의 협력 기반 강화,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청사진 마련

-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 국가 중심 전략에서 탈피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사회구조 혁신과 가족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접근으로 전환
  - ① 아동·2040·은퇴세대 삶의 질 향상, ② 평등한 일터·가정의 성평등 구현, ③ 인구  
 변화 대비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
  - 정책 목표와 연관되나 이전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들도 과제로 포함하되,  
 특히 중대한 영역은 전략과제로 격상하여 명확히 부각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4차)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b>비전</b>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li> <li>• 2006~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li> <li>• 2016~30: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삶의 질 향상</li> <li>2. 성 평등 구현</li> <li>3. 인구변화 적극 대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의 삶의 질 향상</li> <li>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li> <li>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li> </ol>
<b>추진전략 (정책 과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li> <li>②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li> <li>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과 가정의 양립 임상화</li> <li>②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li> <li>③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li> <li>②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li> <li>③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li> <li>④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li> <li>⑤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기반 (일·주거·교육) 조성</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li> <li>②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li> <li>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li> <li>⑤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li> <li>②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보장</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li> <li>②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li> <li>② 준비: 新중년</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li> <li>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li> </ol> </li> </ol>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③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④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③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③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④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⑤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①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기반 구축 ②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③ 고령친화사업 육성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①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③ 고령친화산업 육성	3. 인구변화 적극 대비 ①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② 지역: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④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	-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 고령친화사회의 도약
추진 기반 및 체계	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② 정책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추진 기반] ①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 ②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	① 거버넌스: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② 서비스/재정: 공공 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①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②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2020).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기본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는 5년간 약 21조 원이 늘어나며, 2020년 62.6조 원에서 2025년 83.4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연평균 약 5.9% 증가한 수치
-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추계)를 기반으로, 기존 예산 중 일부를 절감하고 이를 다시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병행함.
  - 직접지원 중심의 사업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기존 재원의 절감 효과를 고려해 예산 체계를 재편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표 2-3] 연차별 소요재원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1~'25년 계
계	626,467	705,603	741,719	763,244	793,971	833,622	3,838,158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33,112	364,027	386,820	385,123	398,045	423,516	1,957,531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	205,716	232,130	247,025	259,662	272,941	287,795	1,299,552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3,986	91,261	85,645	97,492	102,078	101,385	477,861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3,653	18,185	22,229	20,967	20,907	20,926	103,214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 분야별 정책과제 변화

### □ 저출산 대책

- 1차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출산은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선택임을 존중하되, 육아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며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
-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핵심 기조인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구축 방향을 유지
  -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강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질의 인력 확보라는 부가적 효과까지 고려
  - 특히 출산·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지향
  - 건강보험 범위 확대, 아동수당 증액,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 권리를 일·생활의 일부로 정착시키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육아문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 시설 중심에서 가정 내 돌봄까지 전 연령대 아동을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확충, 차별 없는 보호 환경 조성, 포용적 가족문화 구축 등을 통해 출산 이후의 양육 여건을 개선
  - 아울러 청년과 여성의 안정된 삶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역량 발달을 위한 일자리·주거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
- 4차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 경력에 부담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향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회복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경력 유지와 성장을 위한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에 중점
- 모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발달 단계에 맞춘 공공 돌봄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
-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 주체로 존중하고, 모든 정책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되는 아동 중심 사회로의 전환 추진
- 성·재생산권의 전 생애적 보장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마련 포함

[표 2-4] 기본계획 차수별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b>전략</b>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b>추진과제 항목</b>	<b>[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b> ① 모성보호 강화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②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b>[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b> 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②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③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b>[비용]</b> ① 의료비 제로화 ② 안전한 출산 ③ 건강 관리 ④ 아동수당 지급 ⑤ 다자녀 지원 확대 ⑥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⑦ 출산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 개편	<b>[모두가 누리는 워라벨]</b> ①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②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벨 실현 ④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⑤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⑥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⑦ 생애 전반성·재생산권 보장
	<b>[건전한 미래세대 육성]</b> 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② 아동·청소년의	<b>[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b> 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②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b>[시간]</b> ①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② 남성 육아참여 확대 ③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b>[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b> 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②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p>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p> <p>③ 시스템 확립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p>	<p>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p> <p>③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p>	<p>④ 육아휴직 개편</p>	<p>③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p>
	<p><b>[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b></p> <p>①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p> <p>②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p> <p>③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p> <p>④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p>	<p><b>[돌봄]</b></p> <p>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p> <p>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p> <p>③ 온종일 돌봄</p> <p>④ 가정 내 돌봄 지원</p> <p>⑤ 지역 협력체계 구축</p> <p>⑥ 아동이 안전한 환경</p>	<p><b>[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b></p> <p>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p> <p>②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p> <p>③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p>
		<p><b>[문화]</b></p> <p>① 모든 아동 차별 없는 보호 여건 마련</p> <p>②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p>	<p><b>[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b></p> <p>①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p> <p>②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p> <p>③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p>
		<p><b>[기반]</b></p> <p>① 안정된 일자리</p> <p>② 차별없는 일자리</p> <p>③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p> <p>④ 교육혁신</p>	<p><b>[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b></p> <p>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p> <p>② 생애 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한 예방</p> <p>③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p>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2020).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고령사회 대책

- 1차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에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전략 목표로 설정
  -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아실현과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참여 확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노후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일상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 개선
-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지향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고려한 사전 대응 체계를 강조
  - 현 세대 노인,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
  -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사전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
  -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추진
  - 주거, 교통 등 생활기반시설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
- 3차에서는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를 전략으로 설정
  - 은퇴와 고령화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준비와 지원체계 정비
  -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고, 신중년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인생 2막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 등,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실질적 문제를 다층적으로 대응
- 4차에서는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지향
  -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책임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주도적인 선택과 역할 수행을 적극 지원

- 고령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를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
-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

[표 2-5] 기본계획 차수별 고령사회 대책 주요 내용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b>전 략</b>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함께 만들어 가는 노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b>추진과제 항목</b>	<b>[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b> ①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②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b>[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b> 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②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③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④ 노후생활 설계강화	<b>[소득]</b> ① 다층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② 공적연금 역할 강화 ③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b>[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b> 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②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③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b>[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b> ①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② 공적 노인요양보장 체계 확립 ③ 노인 권익 증진	<b>[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b> ① 일자리 사업 내실화 ②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③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④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제공	<b>[준비]</b> ①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②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b>[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b> ①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②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
	<b>[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b> ① 노인일자리 창출 ②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 조성 ③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	<b>[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b> 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②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b>[참여]</b> ① 노인일자리 확대: 80만개 창출·지원 ② 인프라 확충 ③ 고령자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	<b>[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b>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③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b>[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b> ①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②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b>[건강]</b> ① 의료·건강관리 ② 돌봄·요양 ③ 주거·환경	<b>[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b> ①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 ②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
-	-	<b>[마무리]</b>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b>[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b> ①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②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2020).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미래 역량(성장동력)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잠재적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용과 산업구조를 고령사회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기반 마련에 중점
  -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학습을 통해 인적자원을 적극 육성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등으로 노동력 손실을 줄여 경쟁력과 활용도를 높임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유인책 마련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
  - 노후 대비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적합한 금융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 인력, 교육, 주택, 금융, 재정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시적 제도개선을 본격화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질 저하에 대응하여, 잠재인력의 활용 기반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 특히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이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3차에서는 ‘미래 역량(성장동력)’이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개혁, 여성 및 외국인력 활용,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다른 항목에 배치
-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신중년 세대의 경력 전환과 창업 지원, 은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여성과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와 핵심 여성 인력 양성, 외국인 인력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과 학습기회 확대 추진
  -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기술개발 활성화, 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자 맞춤형 식품산업 등 산업 영역 다변화를 통해 대응
  - 이 외에도 교육혁신, 주택 및 금융제도 개선,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화 등 경제·사회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도 병행
  - 아울러 청년기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짐
- 4차에서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전략으로 제시
- 인구구조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서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대응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청년들이 기회의 보장을 통해 자립, 결혼, 출산 등 주요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정책을 강화

[표 2-6] 기본계획 차수별 미래역량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전략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기반 조성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추진과제 항목	<b>[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b>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②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③ 외국적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b>[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b>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② 외국 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③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④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b>[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b>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③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b>[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b> ①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②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b>[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b>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②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③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b>[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b> ①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③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b>[고령친화산업 육성]</b>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②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③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④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b>[고령친화산업 육성]</b> 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② 국내·외 시장 활성화 ③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b>[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b> ①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②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③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	<b>[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b> ①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②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③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	-	-	<b>[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b> 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③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2020).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3차에서는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구변화에 대비’를 전략으로 설정

-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며 분야별로 집중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
  - 1단계: 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안 연구<sup>1)</sup> 수행
  - 2단계: 분야별 실행 방안 마련 및 사회적 논의 거쳐 시행
-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통합 및 재생 전략 수립
  - 1단계: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재생모델 수립
  - 2단계: 해당 모델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정착 유도

### ○ 4차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지향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세대가 변화에 대응하며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역량 강화 체계 마련
- 특히, 청년층이 자립, 결혼, 출산과 같은 주요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 자립 기반과 기회 보장 체계 강화

1) 연령별 패턴분석,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사회시스템개편과제(교육, 국방 등)에 따른 소요자원 조달방안 등.

[표 2-7] 기본계획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요 내용

	3차(2016-2020)	4차(2021-2025)	
<b>전략</b>	인구변화에 대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b>추진과제 항목</b>	<b>[사회 시스템 및 지역]</b> ①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비 ② [지역]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b>[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b>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b>[연령통합적 사회 준비]</b> ①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②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③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b>[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b> ①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②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③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b>[지역상생 기반 구축]</b> ①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②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③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b>[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b> ①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②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④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2020).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3) 2024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 (1) 2024년 시행계획 추진 방향 및 예산

##### □ 추진 방향

- 「저출생 반전 대책」의 기조에 부합하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
  -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금, 세액공제, 인력 채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강화
  - (돌봄환경 조성) 돌봄기관 확충<sup>2)</sup>, 서비스격차 해소<sup>3)</sup>를 통한 돌봄공백·부담완화 등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관행 개선을 병행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육 친화적 사회 실현을 위한 전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
  - (육아 관련 관행 개선) 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해소(차일드 패널티 제거) 등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을 추진
-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건강한 고령화 지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기반 의료·돌봄서비스 통합체계 구축<sup>4)</sup> 및 노인친화 주거·이동권 보장
  - (경제적 자립 지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과 더불어,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도 중점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마련
  - (사회보험 개편) 사회보험의 보장성 유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과 급여 구조의 전반적 개편 방향 검토
  - (연령통합 사회 전환) 연령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 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전체 예산(지방비 포함)은 전년 대비 4조 3천억 원(5.4%) 증가한 총 83.2조 원으로 편성
-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육아휴직급여 지원(+2,905억 원)
  - 늘봄학교 운영 확대(+6,994억 원)
  - 부모급여(+1조 8,773억 원) 및 첫만남이용권(+869억 원)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1,682억 원)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용자 지원(+1조 원)

2) 직장어린이집(1,333개→1,373개), 시간제보육기관(1,030개→2,315개), 아이돌봄서비스(8.5만→11만 가구) 확대. 및 늘봄학교 전국(초1) 도입 등.

3) 유보통합 정상추진, 교사·아동비를 적정화, 교사·교원 처우개선 등.

4) ① 「통합돌봄지원법」(24.3.26 공포, '26.3.27. 시행) 제정, ②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종합계획」 수립, ③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25.12.).

- 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기초연금 예산 확대(+1조 8,200억 원)
  -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9,704억 원)
- 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0.39조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760억 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동결 및 상환 유예 제도 유지(+456억 원)
- 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1조 원(전년과 동일)
  -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17억 원)

[표 2-8] 2024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단위: 조원

추진전략	'24년 예산(비율)	'23년 예산(비율)
합계	83.2(100.0%)	78.9(100.0%)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42.8(51.5%)	39.8(50.5%)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0.2(36.3%)	27.4(34.8%)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5.8(7.0%)	6.6(8.4%)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3(5.2%)	5.0(6.3%)

자료: 관계부처·지자체 협동(2020). 『202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2) 2024년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 □ 영유아 및 아동

- 현금성 지원: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제공
  -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30만 원, 15만 원 인상된 수준임
  - 출생 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
- 서비스 지원: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민간 어린이집의 전환 포함)
  - 늘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전국 확대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는 395개소에서 435개소로 확대

## □ 청소년 및 청년

- 현금성 지원: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재정 지원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6.7만 명), 청년내일저축계좌(12.7만 명),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9.8만 명 → 12.5만 명)
- 서비스 지원: 주거 및 건강분야 지원 강화
  - 임대주택 3.1만 호, 금융지원 8만 가구 포함 총 11만 호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 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

## □ 여성

- 현금성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 여성청소년(9~24세,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제공
  -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7,777명, 1인당 380만 원 수준)
- 서비스 지원: 여성 건강관리 및 경력단절 예방
  - 임신부 및 영아 건강관리 시범기관 확대(59개소 → 75개소)
  - 난임 관련 심리지원 강화(상담센터 8개소 → 10개소)
  - 새일센터를 통한 특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제공(42개소 → 47개소)

## □ 양육부모

- 현금성 지원: 육아휴직 지원 신설·확대 및 대학등록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0만 원, 3개월간 지급
  - 셋째아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첫째·둘째에 대한 등록금 부담 완화
- 서비스 지원: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대상 주거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대상 임대주택 3.7천 호 공급
  - 한부모 가정 대상 임대주택 266호 → 306호 확대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지원연령 상향, 소득기준 완화,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확대 등

## □ 중장년 및 고령자

- 현금성 지원: 기초연금 및 고령자 고용 지원 확대
  -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원 지급(70% 대상, 약 701만 명)
  -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확대(8천 명 → 1.1만 명)
- 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 및 건강 서비스 강화
  - 노인일자리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확대
  - 고령자 임대주택 2천 호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도 2천 호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4.6만 명 대상
  -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55만 명까지 확대

## □ 전국민

- 현금성 지원: 의료 및 복지 지원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로 확대되며, 신규 4개 지역이 추가
  -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7만 5천 명까지 확대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만 8천 명에게 지속적으로 운영
- 서비스 지원: 고용 및 보험제도 개선
  -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할 계획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대리운전기사 등 약 362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

## 2) 경기도 인구정책

### 1)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

#### □ 수립 목적 및 근거

- 인구 자연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인구정책 수립 시 시군별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를 근거로 수립
  - 경기도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2023년)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표 2-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등에 관한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7.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사항 [신설 2025.3.12.]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예산 및 구성

- 5년간 총 예산액은 3조 8,107억 원으로, 연도별 재정은 2024년 7,146억 원, 2025년 7,257억 원, 2026년 7,565억 원, 2027년 7,863억 원, 2027년 8,280억 원으로 계획
-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9개 중점분야, 110개 실행과제로 구성
  - 청년 삶의 질 강화(17개 실행과제)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40개 실행과제)
  - 함께하는 노후생활(26개 실행과제)
  - 인구구조변화대응(27개 실행과제)

[표 2-10]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전략/실행과제	연도별 재정계획					
	합계	'24	'25	'26	'27	'28
합계	3,810,723	714,650	725,749	756,045	786,315	827,964
청년 삶의 질 강화(17개)	697,860	180,174	130,694	130,664	128,164	128,164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40개)	1,031,761	195,801	213,446	209,992	205,679	206,843
함께하는 노후생활 (26개)	2,036,064	332,087	372,462	406,006	442,639	482,870
인구구조변화 대응 (27개)	45,038	6,588	9,147	9,383	9,833	10,087

자료: 경기도(2024),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

□ 비전 및 추진 방향

- 비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로, ①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②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③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④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를 목표로 함
-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청년이 불확실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확대

- ① 경기도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청년사업 인큐베이팅 지원, ② 청년 네트워크 지원 규모 확대 등
-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임신·출산, 양육, 아동돌봄 등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추진
  - ① 양육과 돌봄의 전 과정 맞춤형 정책 마련, ② 돌봄 공백 문제 최소화 위해 수혜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전반 인식개선 주력
-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활동, 돌봄 확대
  - ① 베이비붐 세대, 신중년의 사회적 활동 기반 마련, ② 노인의 일자리 창출, 소통 기회 확대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 확산 인식개선 전개
  -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변화 사회에 대한 준비, ②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발생할 갈등 상황에 대해 선제적 인구교육 연구 등, ③ 인구변화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1) 2024년의 경기도 인구정책 성과

#### □ 청년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기회 확대

- ‘경기청년 기회패키지’를 통해 취업·창업, 경험 확대, 역량 강화 등 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
  - 경기청년 사다리(329명), 깎이어(765명), 역량강화 프로그램(32,121명) 등 운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추진
  - 매입임대주택 공급(450호),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1,793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7,932호)
- 2024년 설립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통해 청년·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 강화

## □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임신·출산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난임 가정 및 임신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3,479건),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29,851명)
- 가정 상황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높은 돌봄정책을 실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아동 1인당 월 30만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안심돌봄, 방학 중 급식 지원(11,851명), '언제나돌봄' 체계 구축

## □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생활

- 중장년층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은퇴 전후에도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베이비부머 일자리(455명),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100명)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생산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노년 활력 유지와 지역사회 기여 확대
  - 노인일자리 참여(4,619명), 명절 및 축제 시 생산물 판매, 온라인 마케팅(5개소) 지원
- AI 기술 기반의 돌봄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디지털 돌봄체계
  - AI 노인말벗서비스(146,048건), 돌봄의료센터 운영(7,028건),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10,035명)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도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확대와 공동육아 문화 정착 유도
  - 인구교육 실시(11,100명), 아빠하이!,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등 아버지 참여 중심 공동육아 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 형태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
  - 1인 가구 대상 정보 포털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1,166명), 외국인 주민 적응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및 제도 도입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2)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요

### □ 비전 및 전략

-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를 비전으로 하며, ①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②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③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④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를 목표로 함
- 4대 전략, 19개 중점분야, 117개 단위과제로 구성

[표 2-11]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도 시행계획 비전 및 전략

비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			
목표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
전략	청년 삶의 질 강화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함께하는 노후생활	인구구조변화 대응
중점분야	1. 주거 안정 2. 청년자립 기반 조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4. 청년 역량강화	1. 임신과 출산의 돌봄 2. 촘촘한 아이돌봄 3.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 4. 청소년 돌봄 확대	1. 노인 사회참여 확대 2. 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 3. 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 4. 어르신 문화생활기회지원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6.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1. 인구인식개선 2.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3. 외국인 주민 적응 및 소통 확대 4. 양성평등 5. 일과 생활균형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예산

- 2025년 예산은 8,529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4,173억 원, 시군비 등은 4,356억원  
- 2024년의 예산은 7,502억 원(도비 3,611억 원)으로, 2025년 예산은 2024년에 비해 13.7% 상승

[표 2-12]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추진전략	합계	도비	시군비 등	과제수
합계	870,918	427,408	443,510	117
청년 삶의 질 강화	230,494	182,695	47,799	17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445,795	171,655	274,140	43
함께하는 노후생활	134,132	48,791	85,341	26
인구구조변화 대응	60,497	24,267	36,230	31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주요 추진 방향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안정 및 기회 확대

-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지속 추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
- “청년기회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자기계발과 도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
-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 등 청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반영

[표 2-13] 2025 경기도 시행계획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의 과제

전략 1: 청년 삶의 질 강화	
주거 안정	1.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공급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청년자립 기반 조성	4.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5.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6.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7.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8.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9.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신규)
청년 네트워크 구축	10.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11. 경기청년포털 운영 12.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운영(신규)
청년 역량강화	13.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1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16.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17.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및 아동돌봄 체계 구축

-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권역별 난임 및 임신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다층적 지원 강화
- 지역 중심의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동 상시돌봄 체계 (언제나돌봄) 구축, 육아나눔터 운영 등 돌봄 인프라 연계 강화

[표 2-14] 2025 경기도 시행계획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의 과제

전략 2: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b>임신과 출산의 돌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li> <li>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li> <li>3.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li> <li>4. 한방난임사업 지원</li> <li>5.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과 운영</li> <li>6.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li> <li>7.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li> <li>8.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li> <li>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li> <li>10.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 센터 운영</li> <li>11.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li> <li>1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지원</li> <li>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제한폐지 포함)</li> <li>14.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li> <li>15.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li> <li>16. 기회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통비</li> </ol>
<b>츄츄한 아이돌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li> <li>18. 다함께돌봄센터 확대</li> <li>19. 가족돌봄수당 지원</li> <li>20. 아동돌봄 기회소득</li> <li>2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li> <li>22.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li> <li>23.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li> <li>24.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li> <li>25.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26.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27.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li> <li>28.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li> <li>29.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3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li> <li>31.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li> </ol>
<b>츄츄한 보육환경 조성</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li> <li>33.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광역센터, 시군거점)</li> <li>34.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li> <li>35. 맘대로 A+놀이터 설치 지원</li> <li>36.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li> <li>37.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li> <li>38.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li> <li>39.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사업(신규)</li> <li>40.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을 위한 가족공연(신규)</li> <li>41.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 주차면 설치 확대</li> </ol>

**전략 2: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b>청소년 돌봄 확대</b>	4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3.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	---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노년세대와 베이비부머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 및 돌봄 기반 확충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일 경험 제공 사업 추진(예: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안전 및 복지 기반 강화 등 종합 대책 마련(경기도 노인인구비율 2024년 16.5% → 2028년 20.1% 전망)
  - AI 기반 돌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스마트한 노인복지 실현(예: AI 노인말벗 서비스,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실국 협업 모델 도입)

[표 2-15] 2025 경기도 시행계획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의 과제

<b>전략 3: 함께하는 노후생활</b>	
<b>노인 사회참여 확대</b>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b>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b>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5. 어르신 안전하우징 6.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7.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8. 노인 자살예방사업
<b>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b>	9.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10.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11.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12. 누구나 돌봄 13. 공공노인요양 시설 확충 14.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15. 노인 무료급식 지원 16. 경기도병원 SOS 프로젝트(신규) 17. AI 어르신 든든지킴이(신규)
<b>어르신 문화생활 기획 지원</b>	18.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지원(디지털 사업) 19.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20.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b>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b>	21. 보건소 연명 의료등록사업

### 전략 3: 함께하는 노후생활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22.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신규)
	23. 베이비부머 인턴십(단체)(신규)
	24.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신규)
	25.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신규)
	26.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신규)
	27.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신규)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다양성을 포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통해 위기 대응 강화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장기 정주형 이민사회를 준비(예: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 학습 지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 주 4.5일제 시범 운영, 가족친화 기업 인증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표 2-16] 2025 경기도 시행계획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략의 과제

### 전략 4: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인식 개선	1.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2.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신규) 3. 경기도 아바하이! 운영 4.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5.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신규)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6.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7.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8.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9.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단 운영 1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11.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12.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13.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 학습지원 14.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외국인 정착지원 및 소통 확대	15.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지 추진 16.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17.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18.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19.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양성평등	20.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21. 경기도 양성평등 캠페인 추진

#### 전략 4: 인구구조변화 대응

##### 일과 생활균형

2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신규)
23. 고학력·고숙련 경력 보유여성 취업지원
24.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25. 일생활 균형 상담지원
26.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27. 주4.5일제 시범사업(신규)
28. 경기도 아바 육아 휴직 장려금(신규)
29.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
3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31.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3 저출생 사업 유형화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저출생 정책을 자녀 연령별로 현금성 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유형화하여 제시
- 보건복지부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의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지원 유형을 참고하여 현금성 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음
  - 현금성 지원 정책: 현금, 상품권, 이용료 할인과 같은 현금성, 바우처 등
  - 서비스 지원 정책: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등
  - 물품 직접 지급의 현물은 제외하였음

#### 1) 현금성 지원 사업

##### □ 현금성 지원 사업의 내용

- (결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결혼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
  -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비용 100만원 지원
- (출산) 임신계획, 임신 상태, 출산의 전 단계에 걸쳐 의료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난임 및 고위험산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중임
  - 임신 준비단계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난임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함
  - 임신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출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통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함
- (돌봄) 자녀의 영유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연령대별 단계적으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장려금)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 출산인원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지급 횟수 등 지원설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 제도의 하나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2024년 기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임
  - (부모 급여) 0~1세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함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은 월 10만 원 상당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지원)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 0~5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기본보육, 야간, 24시)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
  - (가족돌봄수당)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아동 1명 월 30만원 지원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비영리 목적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직하여 공동육아를 할 경우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원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군 보조를 통해 본인부담금 지원
- (부모) 양육부모의 돌봄시간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월 30만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원

[표 2-17] 저출생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결혼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고위험 지원 확대(의료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														
첫 만남 이용권			■	■													
부모급여			■	■													
가정양육수당			■	■	■	■	■	■	■	■							
아동수당			■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누리과정비 지원					■	■	■	■									
가족돌봄수당					■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	■	■	■	■	■	■	■	■	■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가정)				■	■	■	■	■	■	■	■	■	■	■	■	■	■
부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	■	■	■	■	■	■	■	■	■

주: 빗금은 중앙정부 사업이고 이외는 경기도 사업을 의미함.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 시행계획”.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4).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 현금성 지원 사업의 특성 및 평가

### ○ 아동 돌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생애 초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자녀가 학령기로 진입하면 보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무상 교육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연령 증가 시 대체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이소영 외, 2023)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정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대부분 0세~1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86개월 미만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월10만원)과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뿐임(최병권 외, 2023a)
- 이를 보완하고자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수당 및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 다양한 돌봄자원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함

### ○ 지자체 출산지원금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제고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출산지원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은 지자체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로 인해 자녀출산을 앞둔

가족이 지원금이 많은 타 지자체로의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존재(김미곤 외, 2019)

## 2) 서비스 지원 사업

### □ 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용

- (보건의료) 임신계획, 임신 상태, 출산의 전 단계에 걸쳐 의료, 심리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함
  - 임신 준비단계에서는 난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임신 단계에서는 경기임신출산교실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대상의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인프라체계 구축함
  - 출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및 운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신생아 양육 및 산모 회복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함
  - 그 외에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와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 혹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을 추진함
- (돌봄) 공적보육서비스 기능 확대 및 확충 중이며 아동 돌봄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는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늘봄학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음
- (부모) 양육부모의 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
  - (육아휴직제도)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부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임금을 보전함
  - (6+6 육아휴직제도) 부모의 공동육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13세 (중1)	14세 (중2)	15세 (중3)	16세 (고1)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사업																			
아동언제나돌봄(초등시설형) 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맘대로 A+놀이터 설치 지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빗금은 중앙정부 사업이고 이외는 경기도 사업을 의미함.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 시행계획".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4).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 서비스 지원 사업의 특성 및 평가

### ○ 부처별 아동돌봄사업 간의 분절화

- 지원기준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한부모·다문화 등 우선돌봄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어 부처별 아동돌봄사업의 지원기준, 운영시간, 서비스 내용 등이 상이하고 분절적임(최병권 외, 2023b)

○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32.8일로 나타나(한국일보, 2025년 3월 5일), 긴 대기기간으로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돌봄 인력 확충 및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 고려 필요(최병권 외, 2023b)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은 증가하나 기업규모, 성별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 중심 지원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최병권 외, 2023b)

## 4 고령화 사업 유형화

### 1) 현금성 지원 사업

#### □ 현금성 지원 사업의 내용

- (일자리 분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포함하여 주로 베이비부머와 퇴직 인력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공익활동형 어르신일자리)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컨설팅형)) 퇴직한 중장년층이 기업현장이나 컨설팅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며, 일과 경험을 지속하려는 수요에 대응하며, 노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기업이 신중년층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고령자 고용 유인을 제고
  - (창업 및 재기 지원 사업) 퇴직자나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교육,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
- (보건의료 분야) 노인 자살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지원
  - (노인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취약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조모임, 고위험군 발굴 등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고령자에게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악화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특징임
  - (스마트 돌봄 기술 보급)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검토하고,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보조하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확산
- (소득보장 분야) 국민연금 내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노인을 위한 급여기준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 (국민연금 급여 내실화 및 주택연금 활성화) 노후 소득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주택을 활용한 연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노후 재정 모델 제공

[표 2-19] 고령화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전연령	19세	40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이상
일자리	공익활동형 어르신일자리 확대									
	베이비부머 인턴십(건설팅형)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소득보장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계속고용장려금)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sup>1)</sup>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sup>1)</sup>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기술전문경력인 활용지원)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sup>2)</sup>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sup>2)</sup> (희망리턴패키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sup>2)</sup>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sup>2)</sup>										
보건 의료	노인 자살예방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sup>2)</sup>									
	고령자 만성질환관리 강화 <sup>2)</sup>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도입 검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sup>2)</sup>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담보)									
소득 보장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급여 내실화)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기타	누구나 돌봄 <sup>2)</sup>									

주: 빗금은 중앙정부 사업이고 이외는 경기도 사업을 의미함.

- 1)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처리.
- 2) 서비스와 현금성 지원이 병행된 경우.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 시행계획".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4).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 현금성 지원 사업의 특성 및 평가

### ○ 정책 대상의 포괄성과 세분화 부족

- 많은 사업이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일괄 적용되어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신중년(50~64세)과 고령자(65세 이상)를 구분한 정책 세분화가 미흡하여 실질적 효과 저하 우려

○ 생산적 복지로서의 성과 미흡

- 일자리 연계 현금지원 사업이 단기성, 반복성 위주로 설계되어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에는 한계
- 실제 고용으로의 연계율이 낮고,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단기 일자리로 고착될 위험

2) 서비스 지원 사업

□ 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용

○ 주거 분야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로,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독립적 주거 유지에 기여함
- (주택개조 지원 및 서비스연계주택 개발) 낙상예방, 단열보완 등 주택 개보수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 점차 확산되며, 돌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

○ 보건의료 분야

-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건강관리) 공공영역에서의 요양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 및 재활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가돌봄을 강화함
- (치매 예방 및 통합돌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는 예방 중심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병원-지역-요양이 연계된 통합적 돌봄 체계를 지향함
- (AI 말벗서비스, 응급안심서비스) 기술 기반의 비대면 정서 지원 및 응급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를 도모함

○ 돌봄 분야

-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돌봄매니저 제도 도입)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정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돌봄 인력을 지역사회에 배치
- (누구나 돌봄) 소득이나 가족유무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 문화·여가 및 교육 분야

- (경로당 IT 서포터즈 및 여가 확대) 디지털 소외 해소 및 활동 기회 제공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
- (죽음 준비 교육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

[표 2-20] 고령화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전 연령	18세 19세	40세	50세	55세	60세	65세	66세	70세	75세 이상
주거	어르신 안전 하우징 <sup>3)</sup>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sup>3)</sup>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매입임대 공급)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모형 개발 <sup>1)</sup> (가칭)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개발 및 시범조성 <sup>1)</sup>										
일자리	공익활동형 어르신일자리 확대 <sup>2)</sup>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sup>2)</sup>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 <sup>2)</sup>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소득보장 <sup>2)</sup>										
	전직 준비 기반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sup>2)</sup>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sup>2)</sup>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sup>2)</sup>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sup>2)</sup>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보건 의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sup>2)</sup>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노인건강검진 강화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sup>2)</sup>										
	고령자 만성질환관리 강화 <sup>2)</sup>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확대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퇴원서비스 확대, 퇴원 직후 이행기 집중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방문간호 및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복지용구 지원 확대)											
가족돌봄 내실화 추진											

구분	사업명	전 연령	18세	40세	50세	55세	60세	65세	66세	70세	75세 이상
			19세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물리적 거리확보, 1인실 설치확대유도방안 검토)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감염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감염대응력 증진)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인력배치기준 개선)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공공요양시설 확충, 요양인력 전문화,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장)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요양 기능 재정립 및 적정이용 유도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웰다잉의 사회문화적 기반조성 추진 <sup>1)</sup>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sup>1)</sup> (고령친화제품)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sup>1)</sup> (돌봄로봇 및 보조기기 개발·보급, 고부가가치 핵심무분 국산화)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sup>2)</sup>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담보)											
소득 보장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임의계속가입 활성화)										
문화 여가	어르신 즐김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기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경로당·노인복지관 활용)										
	누구나 돌봄 <sup>2)</sup>										
	노인 무료급식 지원										
	AI 어르신 든든지기미 <sup>1)</sup>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 활성화 <sup>3)</sup>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 활성화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sup>1)</sup>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sup>1)</sup> (분류체계 재정립, 표준화 로드맵, 고령친화센터 등)											
근로 환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교육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경로당 어르신 서포터즈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 보호 방안 추진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 보호방안 추진 (공공후견제도-공공신탁 시범사업 연계)										

주: 빗금은 중앙정부 사업이고 이외는 경기도 사업을 의미함.

1)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처리

2) 서비스와 현금성 지원이 병행된 경우

3) 현물성 성격이 강한 서비스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2025년 시행계획".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4).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 서비스 지원 특성 및 평가

### ○ 서비스 간 분절성과 연계 부족

- 보건, 돌봄,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운영 주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연계가 어려움
- 통합 돌봄체계를 지향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누락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 지역 간 인프라 격차

- 요양시설, 상담센터, 방문간호 등 인프라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편차가 커서 수혜 격차 발생
-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기본적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낮음

### ○ 지속가능성 및 인력 부족 문제

- 방문형 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응 한계 존재
- 낮은 처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요양보호사·돌봄 인력 이탈 문제 지속

### ○ 기술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

- AI 돌봄,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는 도입되고 있으나, 디지털 접근 취약 고령자에게는 실효성 낮음
- 기술 인프라보다 디지털 교육 및 동행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나, 해당 지원은 부족한 실정

### ○ 문화·죽음 교육 사업의 인식 미흡

- 웰다잉 문화조성이나 죽음교육은 정책적으로는 도입되었으나 수요자 인식 부족과 사회적 거부감으로 정착 어려움
- 기존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 많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임

## 5 소결

### 1) 저출생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 현금성 지원사업

- 생애초기 편중: 영유아(0~2세)에 집중 → 청소년기(18세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필요
- 지역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역 간 차이로 박탈감 초래 → 중앙-지방 표준화 및 균형 지원 필요

#### □ 서비스 지원사업

- 돌봄사업의 분절화: 부처별 기준 다름 → 통합 플랫폼과 연계서비스 필요
- 아이돌봄 수급 병목: 긴 대기기간, 인력 부족 → 공공 직접고용, 처우 개선 등 필요
- 육아휴직 사각지대: 중소기업·남성 참여 부족 → 보편적 지원 강화, 남성 참여 유인책 확대 필요

### 2) 고령화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 현금성 지원사업

- 정책 대상 미세분화: 중장년과 고령자 혼합 지원 → 연령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단순 반복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낮음 → 전문성·민간 연계형 일자리 모델로 전환 필요

#### □ 서비스 지원사업

- 서비스 연계 부족: 서비스 중복·누락 우려 → 통합 돌봄 패키지 구축 필요
- 지역간 인프라 격차: 농촌 서비스 부족 심각 → 농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인력 확보 필수
- 돌봄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전문인력 공급 부족 → 전문인력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필요



# 03

## 경기도 인구정책 특성 및 현황

1. 경기도 인구정책 유형 분석
2.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 분석
3. 소결



## 제3장 경기도 인구정책 특성 및 현황

### ① 경기도 인구정책 유형 분석

#### 1)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현황

##### □ 추진 전략 및 영역별 사업 현황

- 2025년 시행계획을 추진 전략과 사업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전략에 포함된 사업들 중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역에 해당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에 포함된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역에 해당하는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저출생’ 영역에 해당함
-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고령화’ 영역에 해당하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전략의 사업은 모두 동일하게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역에 포함됨

[표 3-1]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영역별 사업 유형 현황

단위: 사업 수

추진전략	'25년 전체	사업 영역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대응
합계	117	50	26	41
1. 청년의 삶의 질 강화	17	2	-	15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43	40	-	3
3. 함께하는 노후생활	26	-	26	-
4. 인구구조변화대응	31	8	-	23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표 3-2]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중점분야별 분류

단위: 사업 수

추진전략	중점 분야	개수	비율
청년 삶의 질 강화	주거안정	3	2.6
	청년 네트워크 구축	3	2.6
	청년 역량강화	5	4.3
	청년자립기반조성	6	5.1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16	13.7
	청소년 돌봄 확대	2	1.7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	10	8.5
	촘촘한 아이돌봄 지원	15	12.8
함께하는 노후생활	노인 사회참여 확대	3	2.6
	신증년 지원체계 구축	5	4.3
	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	9	7.7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3	2.6
	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	5	4.3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	0.9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9	7.7
인구구조변화 대응	양성평등사업 지원	2	1.7
	외국인 정착지원과 소통확대	5	4.3
	인구인식개선	5	4.3
	일과 생활균형 지원	10	8.5
	<b>총 합계</b>	<b>117</b>	<b>100.0</b>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추진 전략 및 중점분야별 사업 현황

-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에는 청년자립기반조성 분야가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 역량 강화 5개, 주거안정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 각각 3개로 구성됨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에는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16개, 촘촘한 아이돌봄 지원 15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돌봄 확대는 2개에 불과
- ‘함께하는 노후생활’은 6개의 중점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돌봄망 구축이 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증년 지원 및 안전돌봄망 5개의 순임

-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총 3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과 생활균형 지원이 10개,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9개 등이 주요 분야임

[표 3-3] 2025년 시행계획 담당 부서별 분류

단위: 사업 수

부서	개수	부서	개수
노인복지과	15	정원산업과	2
이민사회지원과	11	국제통상과	1
청년기획과	11	노동정책과	1
가족정책과	8	농업정책과	1
건강증진과	8	복지정책과	1
보육정책과	7	에너지관리과	1
고용평등과	6	예술정책과	1
아동돌봄과	6	일자리경제정책과	1
베이비부머기획과	5	장애인복지과	1
응급의료과	4	장애인자립지원과	1
정신건강과	4	지역금융과	1
주택정책과	4	청소년과	1
인구정책담당관	3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
공동체지원과	2	친환경농업과	1
보건의료정책과	2	택시교통과	1
여성정책과	2	평생교육과	1
이민사회정책과	2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담당 부서별 사업 현황

- 전체 117개 사업을 담당 부서별로 보면, 노인복지과가 1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민사회지원과 및 청년기획과 11개, 가족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8개 등의 사업을 운영중임
- 특정 부서에 사업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고, 1개 사업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15개에 달함

□ 분야 및 영역별 사업 현황

- ‘저출생’ 영역의 사업 수가 가장 많으며, 특히 양육/보육(21건), 의료/보건(8건), 임신/출산(7건) 분야에서 비중이 큼
- ‘고령화’ 관련 사업은 주로 의료/보건(9건), 일자리(7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은 교육(12건), 기타(8건), 일자리(8건)의 비중이 높음

[표 3-4] 2025년 분야 및 영역별 유형 현황

단위: 사업 수

분야	사업 영역			합계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양육/보육	21	-	2	23
의료/보건	8	9	3	20
기타	4	3	8	15
일자리	-	7	8	15
교육	1	1	12	14
근로환경	5	2	2	9
임신/출산	7	-	-	7
소득보장	1	-	4	5
주거	1	2	2	5
문화/여가	2	2	-	4
<b>합계</b>	<b>50</b>	<b>26</b>	<b>41</b>	<b>117</b>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 현황

□ 추진전략, 분야 및 영역별 사업 현황

-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전략 내 사업은 총 17건으로, 대부분(15건)이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역에 해당
  - 일자리(6건), 소득보장(4건), 주거(3건) 분야의 비중이 높음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은 총 43건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0건이 ‘저출생’ 영역에 해당하고, 3건은 ‘인구구조 변화대응’에 해당
  - 양육/보육(20건), 의료/보건(8건), 임신/출산(7건) 분야 중심으로 구성됨
-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에 포함된 26건의 모든 사업은 ‘고령화’ 영역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보건(9건), 일자리(7건) 분야에 다수 분포함
- ‘인구구조 변화대응’ 전략 중 23건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역에 해당하며, 8건은 ‘저출생’에 해당함
  - 교육(10건), 기타(7건), 근로환경(6건) 분야의 비중이 높음

[표 3-5] 2025년 추진전략, 분야 및 영역별 유형 현황

단위: 사업 수

추진전략 및 분야	사업 영역			합계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대응	
<b>1. 청년의 삶의 질 강화</b>	<b>2</b>		<b>15</b>	<b>17</b>
일자리			6	6
소득보장	1		3	4
주거	1		2	3
기타			2	2
교육			1	1
근로환경			1	1
<b>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b>	<b>40</b>		<b>3</b>	<b>43</b>
양육/보육	20		1	21
의료/보건	8			8
임신/출산	7			7
기타	3			3
교육			2	2
문화/여가	2			2
<b>3. 함께하는 노후생활</b>		<b>26</b>		<b>26</b>

단위: 사업 수

추진전략 및 분야	사업 영역			합계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대응	
의료/보건		9		9
일자리		7		7
기타		3		3
근로환경		2		2
문화/여가		2		2
주거		2		2
교육		1		1
<b>4. 인구구조변화대응</b>	<b>8</b>		<b>23</b>	<b>31</b>
교육	1		9	10
기타	1		6	7
근로환경	5		1	6
의료/보건			3	3
양육/보육	1		1	2
일자리			2	2
소득보장			1	1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주: 중복 반영.

### 3)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 □ 생애주기별 사업 분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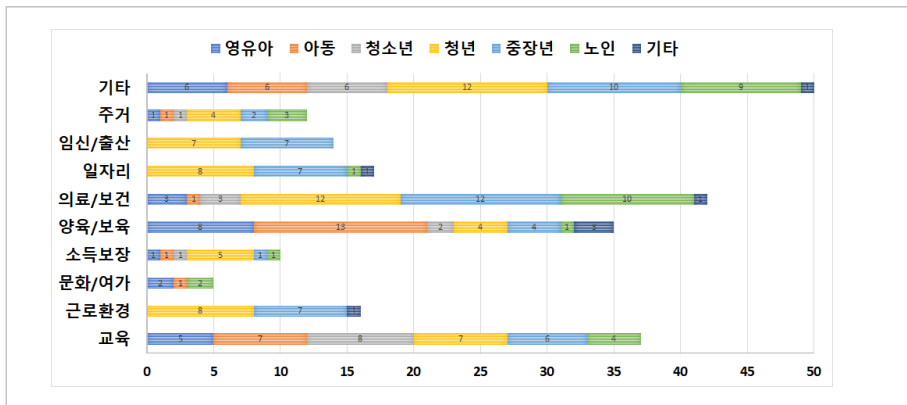
##### ○ 정책의 생애주기별 집중도

- 청년과 중장년 대상 정책<sup>5)</sup>이 전체 정책 117개 중 49개를 차지하여, 정책의 상당수가 이 두 생애주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5) 청년, 중장년, 청년 및 중장년 대상.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의료/보건, 교육, 일자리, 임신/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청소년 대상 정책<sup>6)</sup>은 3개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활동 정책 중심의 사업
  - 근로환경과 일자리 등 경제활동 관련 정책은 주로 청년과 중장년기에 집중되어 있음
- 초기 생애주기 정책은 양육 및 보육 중심
  - 영유아 및 아동기에는 양육/보육과 교육 분야의 정책이 주를 이룸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의료/보건 중심
  - 노인 대상 정책 중 50%가 의료/보건 분야에 해당되며, 노년기 건강관리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분야의 차별성
  - 의료/보건 및 교육 분야 사업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있어 세대 간 연계성이 높음
  - 근로환경, 일자리, 임신/출산은 청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육/보육은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과 생애주기와의 합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 2025년 분야 및 생애주기별 사업 분류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6) 청소년, 청소년/청년 대상.

## (1) 저출생 정책

### □ 영유아~아동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직접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주력
  - 가족돌봄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방학 중 급식, 공공급식 등은 일상적인 양육비용에 대한 대응 중심
- 공공 책임 기반 돌봄 인프라 확충
  - 공동직장어린이집, 무장애 놀이터 등 국공립 기반의 시설과 서비스 확대가 병행
- 질 중심의 돌봄 환경 개선 의지
  - 보육 질, 친환경 급식, 야간 진료 체계 등 아동 삶의 질 전반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포함됨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수당과 인프라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수당에 집중되어 있음
  - 단기 체감을 위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확충도 중요

### □ 청소년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청소년을 위한 직접 지원은 거의 없고, 양육 이후 정책의 연속성 단절
  - 사전 예방적 접근 부재, 정책 흐름에서의 공백, 저출생 대응의 인식 확장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에서 제외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저출생 대응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배제되어 있음
  -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 체계 안에 청소년정책도 넣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인구 및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 청년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결혼·주거·임신 등 초기 생애 전환기의 부담 완화
  - 결혼비용, 임신·출산 의료비, 전세보증금 지원 등 경제적 진입장벽 제거 목적이 뚜렷

- 비혼, 난임, 남성육아 참여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반영
  - 미혼모 원스톱 서비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전통적 가족 모델 외 대상 확대 지향
- 정서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
  - 심리상담, 일생활균형 플랫폼 등 비용 지원을 넘어서 제도적 안정 기반 강화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정책 간 연계성과 통합성 강화: 결혼 지원 이후 출산·보육으로의 자동 연계
  - 정책 안내 및 수혜 접근성 개선 필요(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 비혼, 동거가정 등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 필요
- 중장년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고위험 임신 대비한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고위험 산모센터, 난임 관련 서비스는 의료적 안전망 강화에 초점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출산 연령 고령화에 따른 '생애후기 출산'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표 3-6] 2025년 경기도 저출생 정책 생애주기별

분야	사업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교육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근로 환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							
	일생활균형 상담지원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주4.5일제 시범사업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기타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경기도 성평등 캠페인 추진							
문화/ 여가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분야	사업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소득 보장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양육/ 보육	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의료/ 보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분야	사업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							
	기획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임신/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제한폐지 포함)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2) 고령화 정책

### □ 중장년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 재취업과 경력 전환 중심의 일자리 정책 강화

-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형·컨설팅형), 라이트잡, 행복캠퍼스, 人-Turn캠프 등 중장년의 사회적 역할 재설정과 신중년 경력 설계 유도

#### ○ 사회참여 유도와 소득 보전을 함께 고려

- 일자리 지원이 단순 생계 보조에 그치지 않고, 활동성과 자아실현을 동반한 구조로 진화

#### ○ 디지털 전환 대비 정책 부족

- IT 활용, 건강관리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응 교육은 거의 없음

####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중장년기는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이들을 위한 다수의 정책 운영중
- 다만, 건강·주거·디지털 역량 등 통합적 대응은 미흡

## □ 노년기 정책의 주요 특성 및 개선 방향

### ○ 복합 돌봄과 안전 중심 인프라 다수 포함

-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AI 말벗서비스, 응급안전안심 모니터링, 간병 SOS, 찾아가는 의료센터,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 신기술 기반 돌봄 체계 확대, 단계별 건강위험 대응 구조 마련

### ○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

- 노인 자살예방사업,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적 돌봄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

### ○ 노인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생산품 판매 지원, 사회활동 확대 등 활동성 유지 기반 마련,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자율적 참여로 전환 필요

### ○ 생활안전 인프라 보완

- 어르신 안전하우징, 가스안전장치 보급 등 고령가구의 주거 안정성과 안전 확보

### ○ 정책 특성 및 개선 방향

- 노년기 정책은 신체·정신·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다층적 복지 체계로 구성 필요
- 디지털·AI 기반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지만, 정보 격차 대응 미비
- 참여 중심 정책 확대와 돌봄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
- 노인을 돌봄 수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역할 재정립 필요

[표 3-7] 2025년 경기도 고령화 정책 생애주기별 대상

분야	사업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교육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							
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환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기타	누구나 돌봄							
	노인 무료급식 지원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문화/여가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의료/보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일자리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베이비부머 인턴십(건설당형)							
주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 □ 청년 중심의 집중 지원 구조

- 전 분야에 걸쳐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특히 교육, 일자리, 주거, 금융, 정신건강 등 전방위 정책이 청년에 집중됨

#### □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체계적 확대

- 교육, 사회 적응, 고용, 인권 등 전 주기적 대응 포함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구조 형성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및 서포터즈 운영 등은 지역 사회 통합과 인식 개선까지 포괄

#### □ 복지와 인권을 포괄하는 보편적 접근

-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인권 증진, 자살예방, 정서 지원, 고립은둔 대응 등 정신건강·사회관계 강화까지 포함
- '생명안전망 구축', '고위험군 사후관리', '고립청년 지원' 등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을 지향

####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세분화

- 청년 외에도 고숙련 여성, 결혼이민자 등 대상 특화 일자리 정책 반영 필요
- 일자리 정책이 단순 취업지원에서 직무실습, 역량강화, 해외 취업 연계 등 기회 확장형으로 전환

#### □ 주거·보육·돌봄은 선택적·보조적 대응에 그침

- 일부 주거지원(청년층, 자립준비청년), 육아 지원(라떼파파 육아나눔터) 등은 존재하지만, 핵심 보육·주거정책은 한정적임
- 소득보장 및 돌봄체계에 비해 구조 및 지원은 약한 편임

[표 3-8] 2025년 경기도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생애주기별 대상

분야	사업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교육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근로 환경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기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칭업 취업지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경기청년포털 운영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소득 보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양육/ 보육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의료/ 보건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고학력·고속권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주거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2)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 분석

### 1)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예산

#### □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연도별 전체 예산 현황

##### ○ 전체 예산 규모

- 2024년: 770,817백만원 → 2025년: 870,918백만원
- 전년 대비 100,101백만원 증가(13%)
- 전체 예산 규모의 증가를 통해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이 전년 대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청년의 삶의 질 강화

- 예산: 186,629백만원 → 230,494백만원
- 전년 대비 43,865백만원 증가(23.5%)
- 전체 예산 내 비중 증가: 25.6% → 28.1%
- 추진전략 중 증가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감률은 두 번째로 나타남

#####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 예산: 413,664백만원 → 445,795백만원
- 전년 대비 21,942백만원 증가(16.6%)
- 전체 예산 내 비중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나(53.7% → 51.2%),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우선 순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함께하는 노후생활

- 예산: 121,108백만원 → 134,132백만원
- 전년 대비 11,024백만원 증가(9%)하여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체 예산 중 구성비가 감소하여 고령화 정책의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은 아닌가 판단됨

##### ○ 인구구조 변화대응

- 예산: 47,416백만원 → 60,497백만원

- 전년 대비 13,081백만원 증가(27.6%)
- 4대 추진전략 중 구성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증가율은 최대로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특성화 노력의 결과로 보임

[표 3-9]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전체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추진전략	'25년 예산(비율)		'24년 예산(비율)		증감	증감률
합계	870,918	100.0	770,817	100.0	100,101	13.0
1. 청년의 삶의 질 강화	230,494	26.5	186,629	24.2	43,865	23.5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445,795	51.2	413,664	53.7	21,942	16.6
3. 함께하는 노후생활	134,132	15.4	123,108	16.0	11,024	9.0
4. 인구구조변화대응	60,497	7.0	47,416	6.2	13,081	27.6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2) 2024~2025년 사업 분야 및 지원 성격별 예산 비교

### □ 사업 분야별 예산 증감 현황(‘24~’25년)

- '25년 사업 분야별 예산은 주거, 문화/여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로환경, 일자리 분야에서 큰 폭의 예산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주거, 문화/여가 분야는 큰 폭의 예산 감소가 발생함
  - 근로환경 분야는 2024년 17,367백만원에서 2025년 30,624백만원으로 76.3% 증가해,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이는 경기도가 노동환경 개선 및 관련 지원 정책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함(가족친화인증 사업,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사업 등)
  - 일자리 분야 역시 2024년 43,389백만원에서 2025년 64,102백만원으로 47.7% 증가하였음. 취업 지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예산의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의료/보건 분야는 17.0% 증가(112,642백만원 → 131,772백만원)하였으며, '출산가정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대에서 기인하였음
  - 교육 분야는 15.4% 증가(16,531백만원 → 19,074백만원)하였으며, 증가분은 대체로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이 있음
  - 기타 분야는 14.8%(127,674백만원 → 146,540백만원) 증가함

- 소득보장은 8.6% 증가(148,578백만원 → 161,407백만원)하여 예산이 약간 확대됨
- 양육/보육은 8.5% 증가함(207,928백만원 → 225,560백만원)
- 임신/출산은 2.6%로 소폭 상승하여 예산의 안정적인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여가 분야는 34.3% 감소(9,928백만원 → 6,522백만원), 주거 분야는 22.5% 감소(13,686백만원 → 10,605백만원)하였음. 문화/여가 분야의 감소는 '경기 아이 누리놀이터' 사업과 '어르신 즐거터' 사업의 축소와 관련이 있으며, 주거 분야의 감소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축소와 관련이 있음

[표 3-10] 2025년 분야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

분야	'25년 예산	'24년 예산	증감	증감률
양육/보육	225,560	207,928	17,632	8.5
소득보장	161,407	148,578	12,829	8.6
의료/보건	131,772	112,642	19,130	17.0
임신/출산	74,712	72,824	1,888	2.6
일자리	64,102	43,389	20,713	47.7
근로환경	30,624	17,637	12,987	73.6
교육	19,074	16,531	2,543	15.4
주거	10,605	13,686	△3,081	-22.5
문화/여가	6,522	9,928	△3,406	-34.3
기타	146,540	127,674	18,866	14.8
총합계	870,918	770,817	100,101	13.0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지원 성격별 예산 증감 현황('24~'25년)

- '25년 예산액을 '24년 예산액과 비교한 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액의 증가율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의 증가율 역시 17.1%로 높게 나타남
- 예산액 증가분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과 현금지원 예산액의 증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과 현금지원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방식의 균형이 잡힌 것으로 판단됨

[표 3-11] 2025년 지원 성격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지원 성격	교육/정보 제공	현금지원	현물지원	서비스 제공	인프라구축	기타
2025년	120,456	334,267	233,774	395,314	292,632	113,778
2024년	107,923	285,339	225,449	374,208	233,732	125,269
비교증감	12,533	48,928	8,325	21,106	58,900	△11,491
증감률	11.6	17.1	3.7	5.6	25.2	-9.2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주: 중복 반영.

□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사업별 예산액

- 추진전략 ‘청년의 삶의 질 강화’ 내에는 총 4개의 사업(예산액 230,494백만원)이 있음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70.4%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
  - ‘청년 역량강화(18.1%)’, ‘청년 네트워크 구축(7.6%)’, ‘주거안정(3.9%)’ 순임
  - 최근 경기도 주요 사업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137,843백만원)’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주거안정 사업의 경우 2024년 시행 사업 중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축소가 발생함
- 추진전략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에는 총 4개의 사업(445,795백만원)이 있음
  - ‘춤추는 아이돌봄 지원(48.4%)’,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31.5%)’, ‘춤추는 보육환경 조성(18.8%)’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타 추진전략에 비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추진전략 ‘함께하는 노후생활’ 내에는 총 6개의 사업(예산액 134,132백만원)이 있음
  - 노년기 건강돌봄 이슈에 대응하여 ‘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60.0%)’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
  - ‘노인 사회참여 확대(17.9%)’,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1.3%)’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노년층의 삶의 질에도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추진전략 '인구구조 변화대응'에는 총 5개의 사업(예산액 60,497만원)이 있음
  -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대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일과 생활균형 지원' 사업에 전체 예산의 80.9%가 집중되어 있음
  -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10.3%)' 사업과 '외국인 정착지원 및 소통 확대(7.1%)'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해당 이슈의 중요성 증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2] 2025년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추진전략 및 사업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추진전략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1. 청년의 삶의 질 강화	계	230,494	100.0
	1-1. 주거안정	9,000	3.9
	1-2. 청년 자립기반 조성	162,299	70.4
	1-3. 청년 네트워크 구축	17,463	7.6
	1-4. 청년 역량강화	41,732	18.1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계	445,795	100.0
	2-1.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140,320	31.5
	2-2. 촘촘한 아이돌봄 지원	215,677	48.4
	2-3.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	83,961	18.8
	2-4. 청소년 돌봄 확대	5,837	1.3
3. 함께하는 노후생활	계	134,132	100.0
	3-1. 노인 사회참여 확대	24,059	17.9
	3-2. 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	12,551	9.4
	3-3. 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	80,418	60.0
	3-4.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1,724	1.3
	3-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716	0.5
	3-6.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14,664	10.9

단위: 백만원, %

추진전략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4.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	60,497	100.0
	4-1. 인구인식개선	999	1.7
	4-2.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6,249	10.3
	4-3. 외국인 정착지원 및 소통확대	4,288	7.1
	4-4. 양성평등사업 지원	27	0.0
	4-5. 일과 생활균형 지원	48,934	80.9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2025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및 분야별 예산액

- 추진전략 ‘청년의 삶의 질 강화’ 내에는 총 2개의 분야가 있음(예산액 230,494백만원)이 있음
  - 청년에 초점이 맞추어진 추진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 97.3%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며, 나머지 2.7%는 ‘저출생’ 분야에 해당됨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이 큰 비중 차지
- 추진전략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에는 저출생과 고령화 분야가 있음(예산액 445,795백만원)
  - 생애주기 중 영유아 및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략으로 저출생에 전체 예산의 78.8%가 집중되어 있음
  - ‘인구구조 변화대응’에도 21.2%가 배정되어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지원, 임산부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발달 장애인 돌봄 강화 사업이 있음
- 추진전략 ‘함께하는 노후생활’에는 고령화 분야에 100%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예산액 134,132백만원)
- 추진전략 ‘인구구조 변화대응’에는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 81.2%, 저출생 분야에 18.8%가 배정되어 있음(예산액 60,497백만원)
  - 타 분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표 3-13] 2025년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추진전략 및 분야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추진전략	분야	예산액	구성비
1. 청년의 삶의 질 강화	계	230,494	100.0
	저출생	6,300	2.7
	고령화	-	-
	인구구조 변화대응	224,194	97.3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계	445,795	100.0
	저출생	351,315	78.8
	고령화	-	-
	인구구조 변화대응	94,480	21.2
3. 함께하는 노후생활	계	134,132	100.0
	저출생	-	-
	고령화	134,132	100.0
	인구구조 변화대응	-	-
4.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	60,497	100.0
	저출생	11,376	18.8
	고령화	-	-
	인구구조 변화대응	49,121	81.2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3 소결

#### 1) 지원 성격 및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검토 결과

##### (1) 저출생

###### □ 영유아~아동기: 수당 중심 편중 & 인프라 확충 지연

###### ○ 문제점

-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
- 질 중심 접근은 방향성만 제시, 실질 추진 수준은 낮음

###### ○ 개선 방향

- 양육비 절감 외에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중요

###### □ 청소년기: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 문제점

- 생애주기 연계 구조에서 청소년기는 사실상 정책 공백
- 교육, 인식개선, 예방적 접근 모두 부재

###### ○ 개선 방향

- 청소년 포함한 가족 단위 지원 강화 필요
- 자녀의 교육비, 사교육비, 심리 상담 등 중등기 양육 부담 반영 필요
- 출산·양육의 인식 개선 교육을 청소년기부터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 청년기: 제도 간 연계 부족 & 수혜 접근성 낮음

###### ○ 문제점

- 결혼비용, 주거비, 임신·출산 비용 등의 경제적 진입장벽 완화 중심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정책 간 연계 부재(예: 결혼지원 → 출산지원 → 보육지원으로의 연계 부족)
- 복잡한 신청 절차, 낮은 접근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됨

○ 개선 방향

- 통합 안내 시스템 및 자동 연계 플랫폼 구축 필요
- 비혼, 동거가정 등 포용적 설계 제도화 필요

□ 구조적/통합적 측면: 정책 연계와 대상 포괄성 부족

○ 생애주기 정책 연계 미흡

- 영유아, 청소년, 청년으로의 정책 단절
- 출산~양육까지는 구조가 있으나 이후 연결 부재

○ 수요자 다양성 반영 부족

- 다양한 가족형태(비혼, 동거, 미혼부모 등) 및 성평등 육아 참여(남성 등)에 대해 수용하려는 흐름은 있으나 제도화 수준은 낮음

○ 지원 방식의 균형 부족

- 현금 중심 단기 지원에 치중된 반면 인식·문화·정보 인프라 등 비현금 지원은 부족

(2) 고령화

□ 중장년기

○ 문제점

- 디지털 전환 대응이 부재함: 건강관리, 생활서비스 등에서 디지털 기반 전환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장년층 대상의 사전 적응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이 전무함
- 생활 기반 서비스(건강, 주거 등)와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부족: 일자리는 활발히 지원되나, 건강관리·주거환경 개선과는 연계되지 않음

○ 개선 방향

- 경력 설계뿐 아니라 건강·주거·디지털 역량을 포함한 통합형 지원 설계 필요
-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사전 교육, 동행 서비스 도입 검토

□ 노년기

○ 문제점

- AI·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산에 비해 접근성 격차 대응이 부족: AI 말뚝, 응급안심시스템 등은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자들의 기기 접근, 이해, 활용 능력에 대한 지원 부족

- 노인일자리가 여전히 단순 반복 업무에 편중: 선택권과 자율성이 제한되며, 전문성·경험 활용이 어려움

- 보건·돌봄·주거·정서지원 간 연계가 약함: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통합 설계 없이 부처별·사업별로 분절 운영

### ○ 개선 방향

- 디지털 접근 약자 위한 '디지털 동행 서비스' 체계 마련

- 자율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 필요

- 돌봄·건강·주거 서비스 통합 플랫폼 또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2) 예산 분석 결과

### □ 예산 총규모 증가

○ 2024년 대비 13% 증가(약 0.1조 원 증액)

○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반영과 중요성 증대

### □ 정책 기조의 확대

○ 기존 생애주기 중심 정책(출산·보육·노후)에서 구조적 대응(일가정 양립, 가족 다양성 등)까지 정책 범위 확장

○ 단기적 대응에서 중장기적 구조 개선 방향으로 전환

### □ 청년 정책 강화

○ 청년 분야 예산 증가폭 가장 큼(+23.5%)

○ '청년 자립기반 조성'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사회적 독립 지원 강화

○ 청년 지원이 단기 복지 차원이 아닌 장기적 인구 유입 전략으로 기능

### □ 돌봄 정책의 지속적 우선순위 유지

○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51.2%) 차지

○ 임신·출산, 아이돌봄 등에 집중적인 지원

○ 영유아·아동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전략 강화

- 고령화 대응은 기존 전략 유지
  - ‘건강돌봄망 구축’ 중심으로 노인 정책 유지
  -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다소 축소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강화
  - 증가율 최고(+27.6%) 미래 인구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시도
  -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착, 다양한 가족 등 사회구조 기반 재편 요소 주목
- 예산 구조의 다양화
  - 인프라 구축(+25.2%) 및 현금지원(+17.1%) 등 직접 지원 방식 강화
  -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 및 정책 실효성 확보 목적

# D4

## 경기도 인구정책 진단 및 평가

1. 인구정책 관련도 및 동태 분석
2.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3. 소결



## 제4장 경기도 인구정책 진단 및 평가

### 1 인구정책 관련도 및 동태 분석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17개의 과제에 대해 각 전략별로 전문가 5인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취합
- 전략별로 구분하여 전략과 사업 간의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수행
  - (전략 1)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 청년 삶의 질 강화: 17개
  - (전략 2)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43개
  - (전략 3)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 함께하는 노후생활: 26개
  - (전략 4)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 - 인구구조 변화 대응: 31개

[그림 4-1] 경기도 2025년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도

비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			
목표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
전략	청년 삶의 질 강화	틈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함께하는 노후생활	인구구조변화 대응
중점 분야	1. 주거 안정 2. 청년자립 기반 조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4. 청년 역량강화	1. 임신과 출산의 돌봄 2. 충직한 아이돌봄 3. 충직한 보육환경 조성 4. 청소년 돌봄 확대	1. 노인 사회참여 확대 2. 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 3. 어르신 건강돌봄망 구축 4.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지원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6. 신장년 자원체계 구축	1. 인구인식개선 2.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3. 외국인 정착지원 및 소통 확대 4. 양성평등 5. 일과 생활균형

자료: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아래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 받음
  - 적합도: 논리적 연결성
  - 필요도: 전략 달성을 위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효과성: 전략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
  - 효율성: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지 여부

- 각 지표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지표의 총 평균값을 도출
  - 총 평균값을 아래 기준에 따라 4등급의 범주로 구분함

[표 4-1] 인구정책 평가 결과 등급 분류 기준

등급	범주 구분 기준
상	상위 25% 이상
중1	상위 25% 미만 50% 이상
중2	상위 50% 미만 75% 이상
하	상위 75% 미만

자료: 장인수 외(2023).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함<sup>7)</sup>.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 정책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 효과성과 필요도를 토대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전략적 우선순위 제공
  - (핵심 강화) 꼭 필요하고 중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원 및 시간 투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전략적 개선) 필요도가 높은 사업이나 효과성이 낮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이 필요
  - (재검토 필요) 인구사업의 전략 달성 차원에서 필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사업으로 축소 또는 방향 전환 고려
  - (효율 유지)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표 4-2] 4분면 분류 및 전략

과제명	분류 조건	전략
1사분면	필요도 높음 - 효과성 높음	핵심 강화
2사분면	필요도 높음 - 효과성 낮음	전략적 개선
3사분면	필요도 낮음 - 효과성 높음	재검토 필요
4사분면	필요도 낮음 - 효과성 낮음	효율 유지

7) 장인수 외(2023).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 분석

[그림 4-2]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평가 항목 및 기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전문가 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연구책임: 유정균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의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방법 : 개별 과제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해주시시오.

설문항목 밑에서 맨끝에 위치한 U, V, W, X열의 [전문가 평가항목](붉은색)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합도 평가항목, 추진방향은 C, D, E열의 [목표-전략-중점분야](노란색)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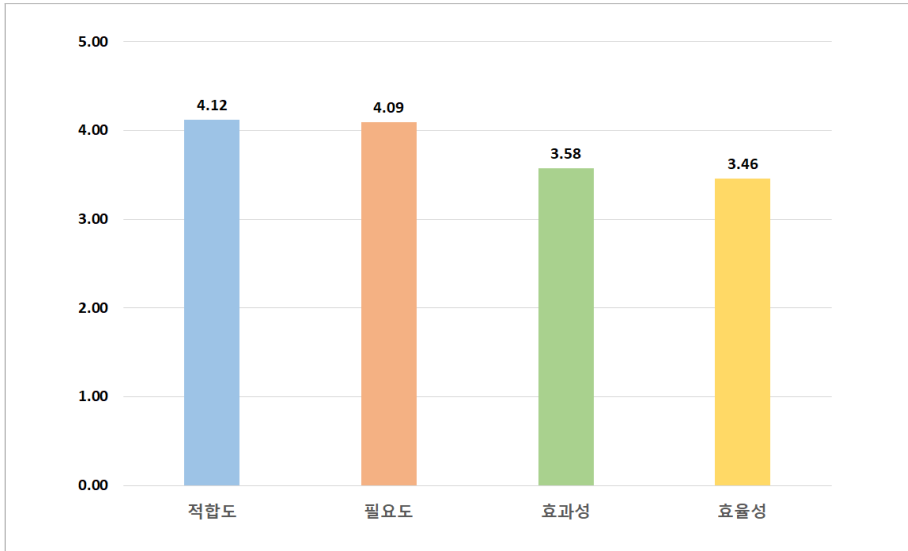
■ 평가항목

적합도	목표와 전략(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삶의 질 강화)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필요도	목표와 전략(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삶의 질 강화) 달성을 위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인가?
효과성	목표와 전략(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삶의 질 강화)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인가?
효율성	목표와 전략(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삶의 질 강화)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정책인가?

■ 척도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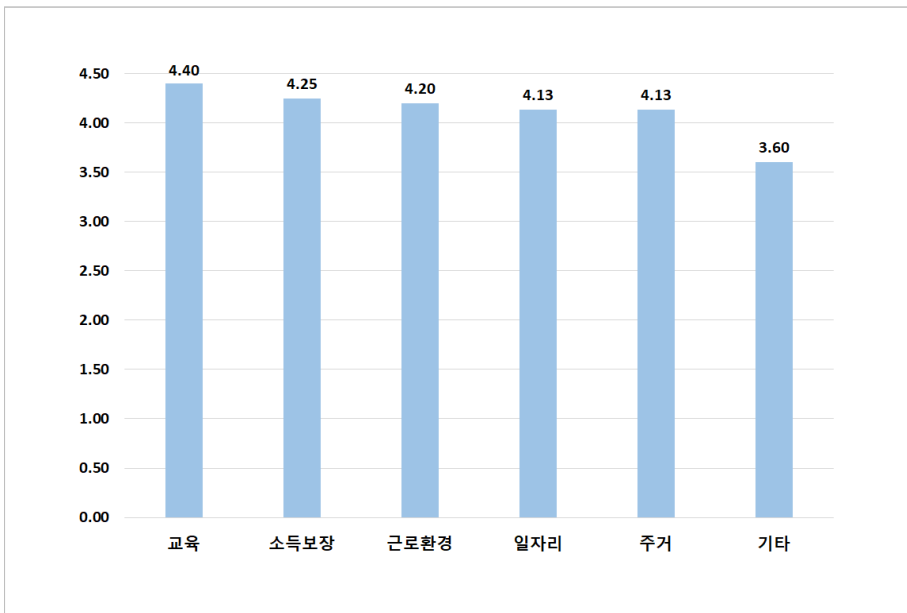
[그림 4-3]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청년 영역 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 청년 관련 정책을 4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적합도' 평균 점수는 4.12로 가장 높았고, '효율성'은 3.46으로 가장 낮음
- 적합도와 필요도는 4점대 초반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인구정책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에서 '청년'이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적합도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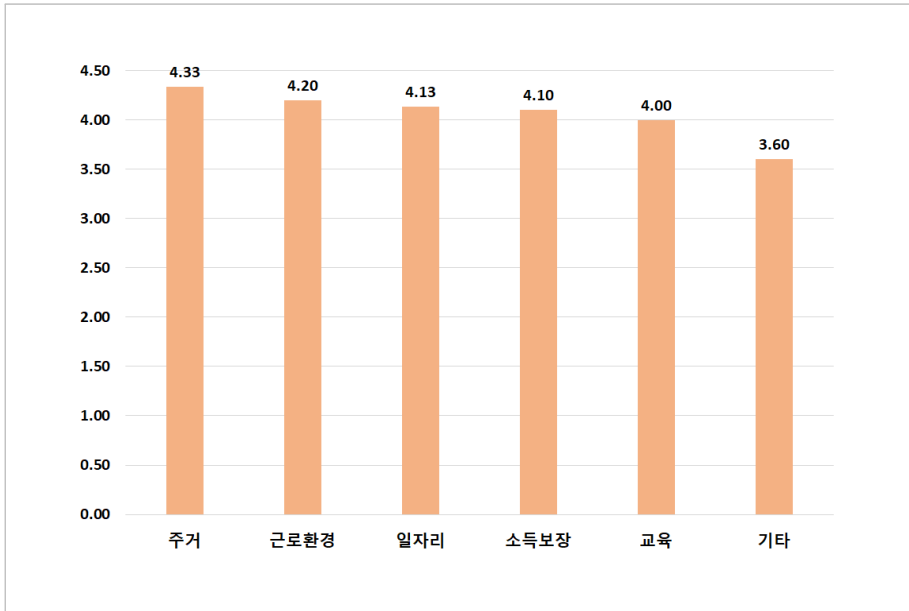
[그림 4-4]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청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적합도 결과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교육 정책의 적합도가 4.4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득보장 4.25점, 근로환경 4.20점 등의 순임
-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평균이 4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삶의 질 강화' 전략과의 논리적 연결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5]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청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필요도 결과

- 청년 영역 내에서는 주거 정책의 필요도가 4.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환경 4.20점 등의 순임
-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 관련 정책의 필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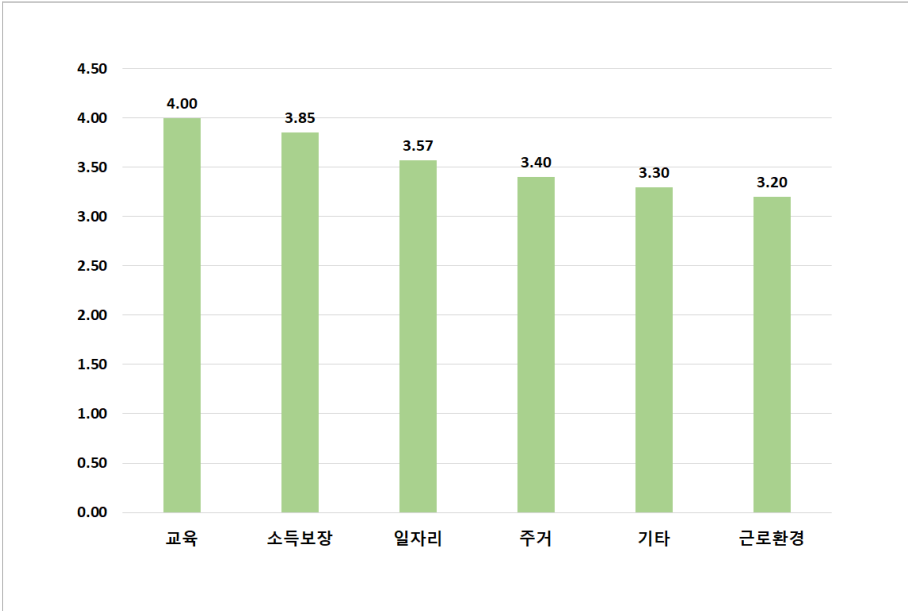
○ 청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과성 결과

- 효과성 차원에서는 교육(4.00)과 소득보장(3.85)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정책적 개입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
- 근로환경은 필요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효과성은 낮아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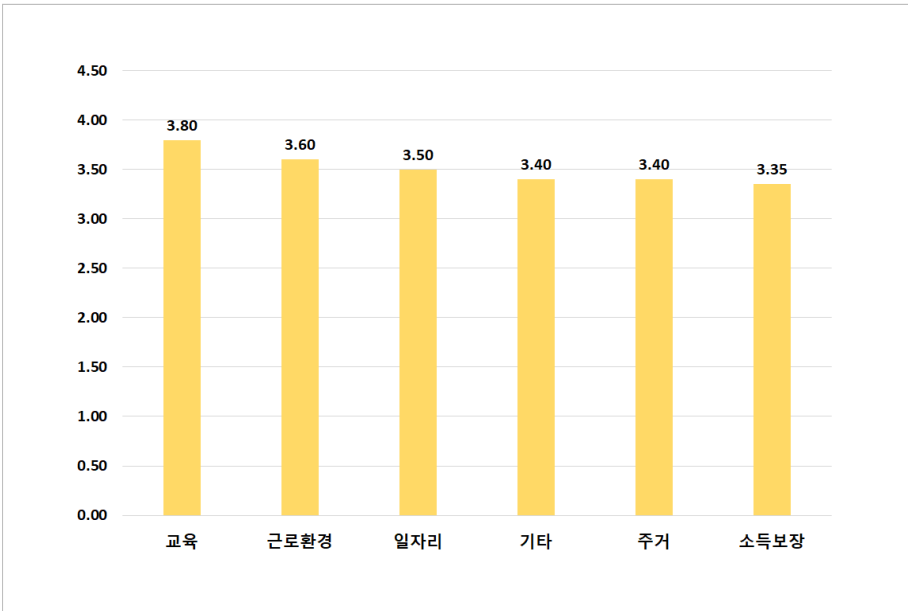
○ 청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율성 결과

- 다른 성과지표와 비교하여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교육의 효율성 점수가 3.80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소득보장 3.35점, 주거 3.40점 등은 시간이나 예산을 고려했을 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그림 4-7]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표 4-3]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중점 분야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주거안정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4.0	4.2	3.4	3.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8	4.0	3.2	3.8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4.6	4.8	3.6	3.2
청년자립기반 조성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4.4	4.2	3.8	3.6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4.2	4.2	3.2	3.6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5.0	4.8	4.6	3.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2	4.0	3.6	3.2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3.6	3.8	3.2	3.2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3.4	3.4	3.4	2.8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4.0	3.8	3.4	3.0
청년 네트워크 구축	경기청년포털 운영	3.6	3.6	3.2	3.6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3.6	3.6	3.4	3.2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4.4	4.0	4.0	3.8
청년 역량강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4.6	4.6	3.6	4.0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4.2	4.2	4.2	4.0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4.6	4.8	4.0	3.8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3.8	3.6	3.0	3.0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4.4	4.0	4.0	3.8

#### □ 청년 영역 종합 평가 등급 분류 결과

- 각 사업의 성과지표별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중1~중2~하의 4개 등급으로 구분
- 상위 25%에 해당되는 '상'에는 6개 사업이 있고, 소득보장이나 청년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이 포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이고, 다음으로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상	상	상	상	4.55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상	상	상	상	4.30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상	상	중1	상	4.20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중1	상	상	상	4.15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상	상	중1	중2	4.05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상	중1	상	상	4.05

- 상위 25% 미만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1’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등급에는 3개의 사업이 포함
  - 평균 평점은 3.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2개가 포함되어 있음

[표 4-5]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	상	상	중1	4.00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중1	상	중2	중1	3.8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중1	중1	중1	중2	3.75

- ‘중2’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위권으로 총 4개의 사업이 포함됨
  - ‘중2’에 포함된 사업은 정책 방향의 적합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편임
  -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필요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효율성 차원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적합도 및 효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표 4-6]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2	상	중1	중2	3.7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중2	중1	중2	상	3.70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중2	중2	중1	하	3.55
경기청년포털 운영	하	하	중2	중1	3.50

-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하’ 등급으로 분류
  - 전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이나 미래세대재단 설립 등은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는 가지나, 인구정책 안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효율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하’등급으로 분류됨

[표 4-7]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하	중2	중2	중2	3.45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하	하	중1	중2	3.45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중2	하	하	하	3.35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하	하	중1	하	3.25

□ 청년 영역 IPA 분석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높은 '핵심 강화' 사업

- 돌봄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17개 사업의 6개 사업이 해당
- 핵심강화 사업에 포함된 6개 사업의 등급을 보면 '상' 5개, '중1' 1개임
-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경기청년 깡이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 청년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및 기회 확대와 관련된 사업은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음

○ 필요도는 높지만 효과성이 낮아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개이며,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과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해당됨

[표 4-8] '청년 삶의 질 강화' 영역 IPA 분석 결과

		효과성	
		낮음	높음
비 어 민	미 비	<b>전략적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li> <li>•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li> </ul>	<b>핵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li> <li>•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li> <li>• 경기청년 깡이어 프로그램 운영</li> <li>•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li> <li>•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li> <li>•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li> </ul>
	미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li> <li>•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li> <li>• 경기청년포털 운영</li> <li>•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li> <li>•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li> <li>•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li> <li>•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li> <l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li> </ul>
		<b>재검토 필요</b>	<b>효율 유지</b>

- 필요도는 낮지만 효과성이 높아 유지가 필요한 사업
  - 청년 영역 내 다른 사업에 비해 필요도는 낮게 나왔는데, 효과가 높아 유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해당
  - 예산 효율성 등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낮아 검토가 필요한 사업
  - 청년 삶의 질 강화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7개 해당
  - 사업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만, 청년 삶의 질 강화와의 연계성이 낮아 재구조화 검토 필요

## 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전략 분석

[그림 4-8]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평가 항목 및 기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전문가 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연구책임: 유정근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방법 : 개별 과제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해주시시오.

설문항목 밑에서 맨줄에 위치한 U, V, W, X열의 [전문가 평가항목](붉은색)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합도 평가하실 때, 추진방향은 C, D, E열의 [목표-전략-중점분야](노란색)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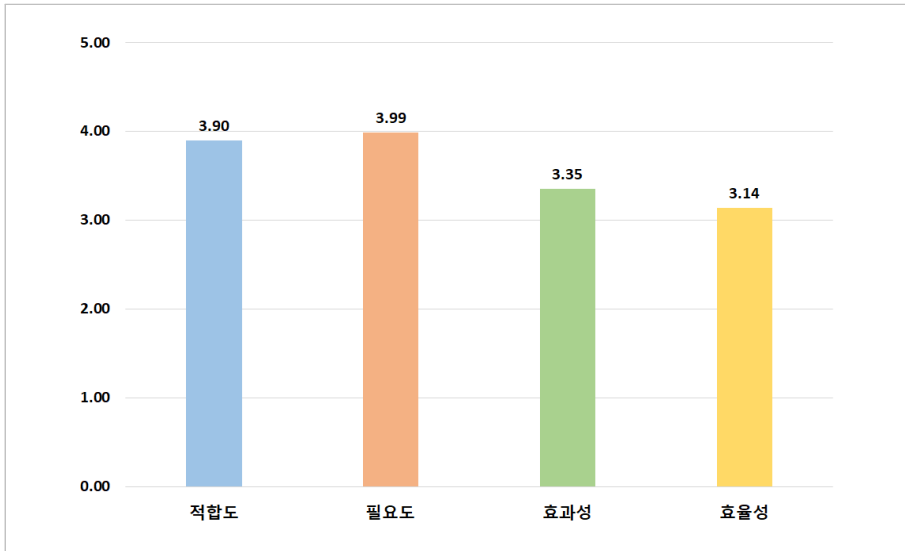
■ 평가항목

<b>적합도</b>	목표와 전략(양육을 함께하는 경기-틈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b>필요도</b>	목표와 전략(양육을 함께하는 경기-틈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달성을 위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인가?
<b>효과성</b>	목표와 전략(양육을 함께하는 경기-틈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인가?
<b>효율성</b>	목표와 전략(양육을 함께하는 경기-틈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정책인가?

■ 척도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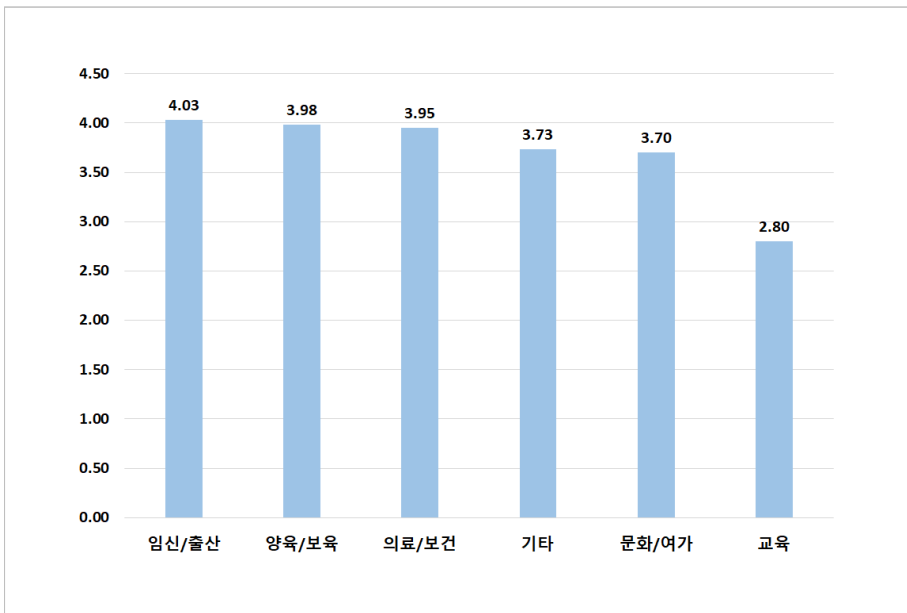
[그림 4-9]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돌봄 영역 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 전체 돌봄 정책을 4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필요도' 평균 점수는 3.99로 가장 높았고, '효율성'은 3.14로 가장 낮음
- 이는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높지만, 재정 성과 달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내포함
-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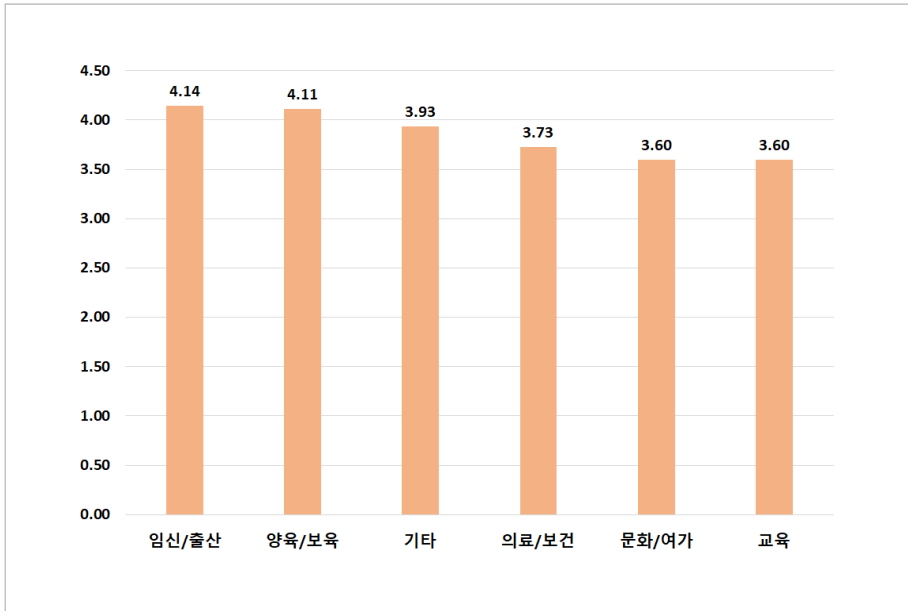
[그림 4-10]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돌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적합도 결과

- 돌봄 영역 내에서는 임신/출산 정책의 적합도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육/보육 3.98점, 의료/보건 3.95점 등의 순임
- 교육 분야가 2.80으로 가장 낮아 돌봄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 돌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필요도 결과

- 돌봄 영역 내에서는 임신/출산 정책의 필요도가 4.1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육/보육 4.11점 등의 순임
- 돌봄 정책의 주요 분야별 사업 등은 대체로 필요도가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돌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과성 결과

- 효과성 차원에서는 의료/보건(3.40)과 양육/보육(3.39)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정책적 개입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
- 문화/여가(3.00)와 교육(3.20)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다른 성과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재구조화 등이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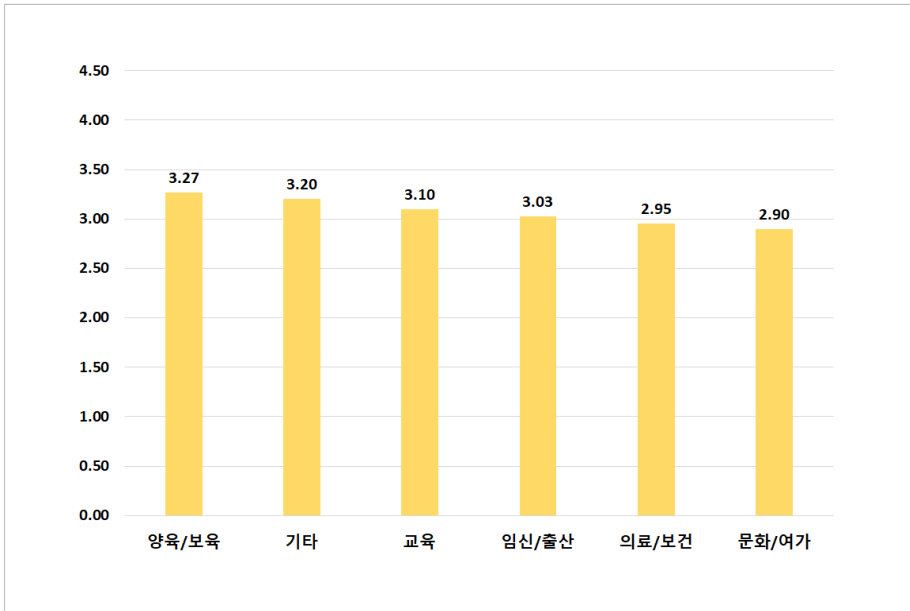
○ 돌봄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율성 결과

- 다른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돌봄 영역 내에서는 양육/보육의 효율성 점수가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문화/여가는 2.90점, 의료/보건 2.95점 등은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정책으로 분류
-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달체계 개선이나 사업 구조 재조정이 필요함

[그림 4-1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그림 4-13]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표 4-9]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중점 분야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4.4	4.6	3.8	3.0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4.2	4.0	3.4	2.6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4.0	3.8	2.8	2.6	
	한방난임사업 지원	3.2	2.8	2.8	2.4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3.6	4.0	2.8	2.8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4.0	4.2	3.4	3.2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3.0	2.8	2.6	2.0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3.8	4.2	3.6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4.2	3.8	3.4	3.2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4.2	4.2	3.8	3.6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4.4	4.2	3.8	3.6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	4.2	4.0	3.8	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제한폐지 포함)	4.2	4.0	3.6	3.4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4.0	4.2	3.4	3.2	
츄츄한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4.0	4.2	3.6	3.0	
	기획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4.2	4.0	3.6	3.2	
	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	4.2	4.4	3.6	3.4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3.6	3.6	3.4	3.4	
	가족돌봄수당 지원	3.0	2.6	2.2	2.0	
	아동돌봄 기획소득	3.8	3.8	3.0	3.0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4	4.8	3.8	3.6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	3.8	3.8	3.0	3.0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4.0	4.2	3.6	3.2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8	4.4	3.8	3.8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4.0	4.0	3.8	3.2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4.6	4.8	3.8	3.4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4.2	4.6	4.0	3.6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3.8	4.6	3.4	3.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4.6	4.4	3.6	3.8		
츄츄한 보육환경 조성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4.0	3.8	3.2	2.8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4.6	5.0	4.0	4.0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4.6	4.6	4.0	4.2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4.0	3.8	3.4	3.0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4.0	4.0	3.2	3.2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3.8	3.6	3.0	2.8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3.6	3.6	3.0	3.0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3.8	4.2	3.2	3.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3.4	3.8	3.0	3.0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4.0	4.2	3.2	3.0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3.4	3.2	2.2	2.2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3.4	3.4	3.2	3.2	
	청소년 돌봄 확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	4.0	3.0	3.0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2.6	3.2	3.4	3.2

□ 돌봄 영역 종합 평가 등급 분류 결과

- 각 사업의 성과지표별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중1~중2~하의 4개 등급으로 구분
- 상위 25%에 해당되는 '상'에는 11개 사업이 있고, 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같은 육아환경 구축 사업이 다수 포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이고, 다음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0]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상	상	상	상	4.40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상	상	상	상	4.35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상	상	상	상	4.15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상	상	상	상	4.15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상	상	상	상	4.1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상	상	중1	상	4.10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상	상	상	상	4.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중2	상	상	상	3.95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상	상	상	중2	3.95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상	상	상	상	3.95
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	상	상	중1	상	3.90

- 상위 25% 미만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1'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등급에는 11개의 사업이 포함
  - 전체 과제의 평균 평점은 3.65점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수준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받았음

[표 4-11]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중2	상	중1	상	3.8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제한폐지 포함)	상	중1	중1	상	3.80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중2	상	중1	상	3.75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	상	중1	상	중2	3.75
기회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상	중1	중1	중1	3.75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중1	상	중1	중1	3.75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1	중1	상	중1	3.75
미혼모 워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중1	상	중1	중1	3.70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중1	상	중1	중1	3.70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중1	상	중1	중2	3.70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상	중2	중1	중1	3.65

○ '중2'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위권으로 총 15개의 사업이 포함됨

- '중2'에 포함된 사업은 정책 방향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실제 필요도와 효율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체감도 부족, 추진 효과의 모호함 등이 낮은 점수의 원인
- 특히 아동돌봄 관련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체계성 강화 또는 실행력 제고가 필요
- 지역사회 인식 개선형(노키즈존), 공간 조성형(놀이터, 나눔터 등) 사업은 긍정적인 아이디어이나, 단기 체감 성과가 낮고 수요 불확실성 존재

[표 4-12]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중2	상	중2	중1	3.60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중1	중1	중2	중1	3.60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중1	상	중2	중2	3.60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중1	중2	중1	중2	3.55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상	중1	중1	하	3.55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하	하	중1	상	3.5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중1	중2	중2	하	3.45
아동돌봄 기회소득	중2	중2	중2	중2	3.40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	중2	중2	중2	중2	3.40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하	하	중2	중1	3.3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하	중2	중2	중2	3.30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하	하	중2	중2	3.30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중2	하	중2	하	3.30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하	중1	하	하	3.30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중1	중2	하	하	3.30

-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하’ 등급으로 분류
  - 전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다수 사업이 시설 설치, 인식 개선, 정서 지지 등 비현금성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정량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수 대상, 제한적 수혜 효과, 활용률 낮음 등이 공통된 한계점
  - 필요시에는 통합·조정, 파일럿 전환, 실행방식 변경(온라인 전환 등) 고려 필요

[표 4-13]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하	중1	중2	중2	3.25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하	하	중1	중1	3.10
한방난임사업 지원	하	하	하	하	2.80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하	하	하	하	2.75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하	하	하	하	2.60
가족돌봄수당 지원	하	하	하	하	2.45

## □ 돌봄 영역 IPA 분석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높은 ‘핵심 강화’ 사업
  - 돌봄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43개 사업의 과반인 22개 사업이 해당되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
  - 핵심강화 사업에 포함된 22개 사업의 등급을 보면 ‘상’ 11개, ‘중1’ 10개임
  - 주요 사업으로는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음
  -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집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의 인프라 확충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도는 높지만 효과성이 낮아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개선이 필요한 5개 사업의 등급을 보면, ‘중2’ 3개, ‘하’ 2개로 구분
  -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이용률 제고와 대상 확장을 위한 서비스 재설계 또는 타 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

[표 4-14]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영역 IPA 분석 결과

		효과성	
		낮음	높음
필요도	미야마	<b>전략적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li> <li>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li> <li>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li> <li>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li> <li>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b>핵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li> <li>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li> <li>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li> <li>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li> <li>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li> <li>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li> <li>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li> <li>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li> <li>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행) 체계 구축</li> <li>발달장애인 돌봄 강화</li> <li>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기회의 동행 경기임산출산교실</li> <li>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li> <li>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li> <li>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li> <li>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li> <li>출산 여성농업인 농기도우미 지원</li> <li>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li> <li>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li> </ul>
	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li> <li>아동돌봄 기회소득</li> <li>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li> <li>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li> <li>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li> <li>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li> <li>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li> <li>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li> <li>한방난임사업 지원</li> <li>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li> <li>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li> <li>가족돌봄수당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li> <li>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li> <li>다함께돌봄센터 확대</li> <li>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li> </ul>
		<b>재검토 필요</b>	<b>효율 유지</b>

○ 필요도는 낮지만 효과성이 높아 유지가 필요한 사업

- 돌봄 영역 내 다른 사업에 비해 필요도는 낮게 나왔는데, 이는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대상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검토 필요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낮아 검토가 필요한 사업

- 돌봄시스템 구축과 달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12개 해당
- 사업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만, 돌봄시스템 구축과의 연계성이 낮을 수 있어 사업 개선과 더불어 재구조화 등의 조정 필요

### 3)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략 분석

[그림 4-14]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전문가 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연구책임: 유정균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방법 : 개별 과제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해주시시오.

실문항목 밑에서 맨줄에 위치한 U, V, W, X열의 [전문가 평가항목](붉은색)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립도 평가하실 때, 추진방향은 C, D, E열의 [목표-전략-중점분야](노란색)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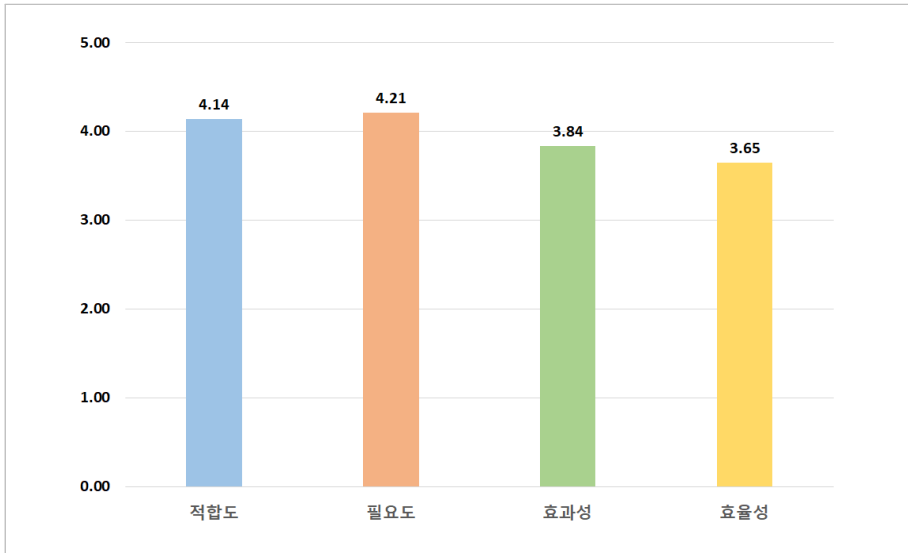
■ 평가항목

적립도	목표와 전략(노후가 안정되는 경기-함께하는 노후생활)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필요도	목표와 전략(노후가 안정되는 경기-함께하는 노후생활) 달성을 위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인가?
효과성	목표와 전략(노후가 안정되는 경기-함께하는 노후생활)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인가?
효율성	목표와 전략(노후가 안정되는 경기-함께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정책인가?

■ 척도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그림 4-15]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고령화 영역 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 고령화 정책은 필요도가 4.2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합도 4.14점, 효과성 3.84점, 효율성 3.65점의 순임
-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필요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돌봄 영역 정책과 비교했을 때,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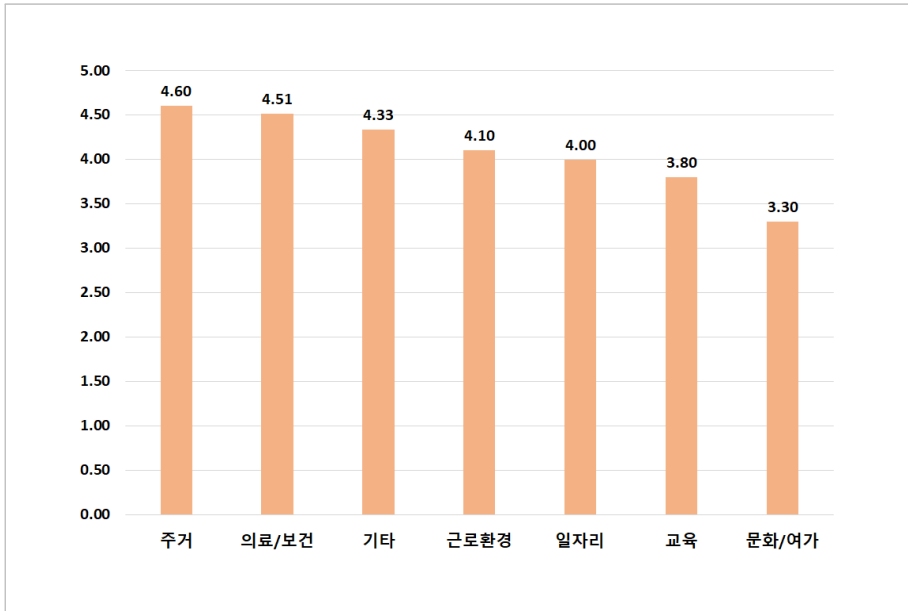
[그림 4-16]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고령화 영역 내 주요 분야별 적합도 결과

- 고령화 영역 내에서는 주거정책의 적합도가 4.6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건 4.42점, 기타 4.07점, 일자리 4.03점 등의 순임
- 문화/여가 분야가 3.30으로 가장 낮아 고령화 정책 추진전략과의 연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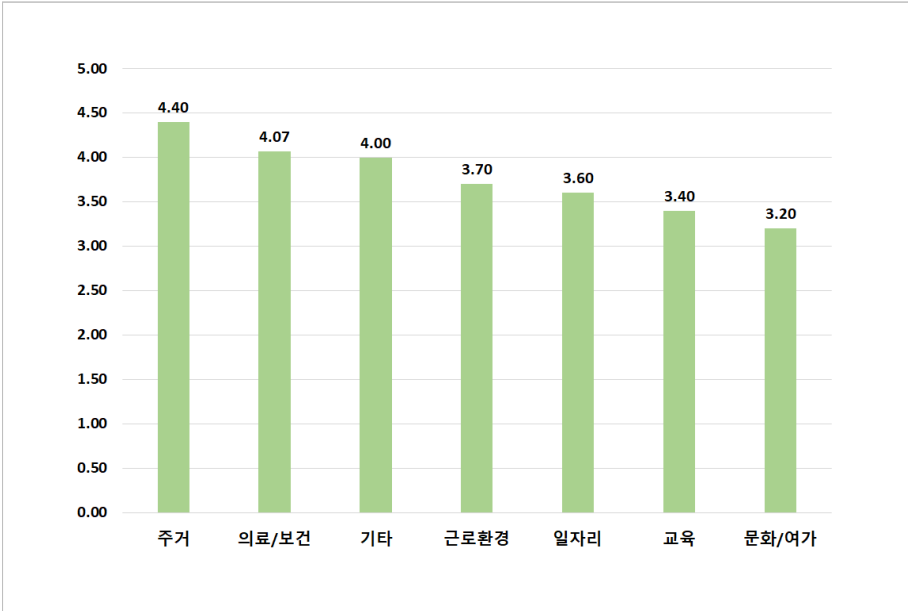
○ 고령화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필요도 결과

- 고령화 영역 내에서는 주거정책의 필요도가 4.6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건 4.51점 등의 순임
- 대체로 필요도가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여가 분야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체 26개 사업 중 문화/여가 분야는 2개(‘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와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에 불과하고, 포함된 정책의 필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 문화/여가 분야 신규 정책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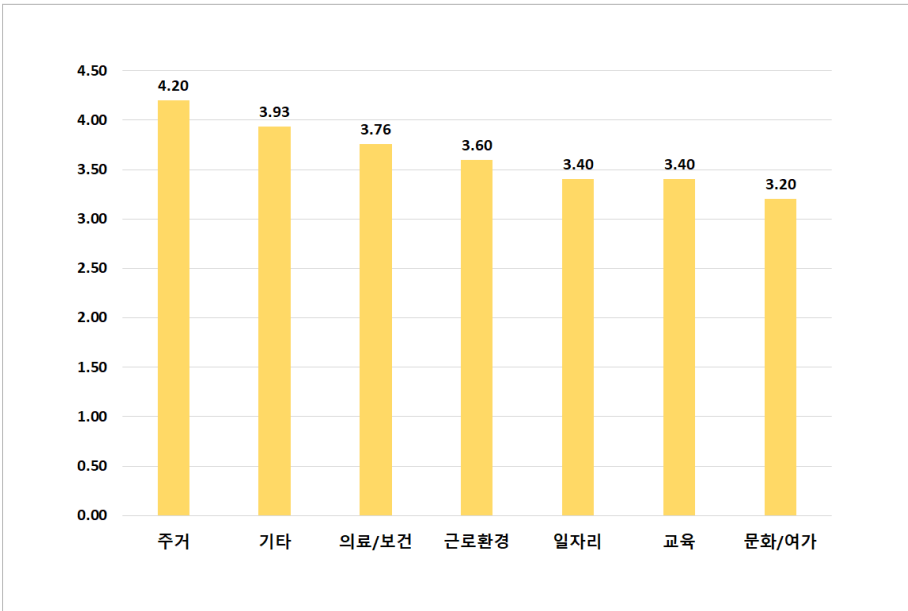
○ 고령화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과성 결과

- 효과성도 필요도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주거 분야가 4.4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건 4.07점 등의 순임
- 문화/여가는 효과성에도 낮은 점수를 받아 이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

[그림 4-18]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그림 4-19]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 고령화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율성 결과

- 다른 지표와 비교하여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평균 4점을 넘는 분야가 주거뿐이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3점대를 기록
- 일자리 및 교육(3.40), 문화/여가(3.20) 등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분류

[표 4-15]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중점 분야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노인 사회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4.6	4.4	4.0	3.8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4.0	4.2	3.6	3.4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3.8	3.6	3.6	3.4
어르신 안전돌봄망 구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4.6	5.0	4.8	4.2
	어르신 안전 하우징	4.6	4.6	4.6	4.2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4.6	4.6	4.2	4.2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4.8	4.8	3.8	3.6
	노인 자살예방사업	4.6	4.8	4.4	4.2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4.0	3.8	3.6	3.6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4.4	4.6	3.8	3.2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4.6	4.6	4.4	3.8
	누구나 돌봄	3.6	3.8	3.6	3.4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4.4	4.2	3.8	3.6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3.8	4.0	3.8	3.8
	노인 무료급식 지원	4.6	4.8	4.8	4.8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4.0	4.2	4.0	3.6
	AI 어르신 든든킴미	4.0	4.4	3.6	3.6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디지털 사업)	3.8	3.8	3.4	3.4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3.6	3.6	3.6	3.6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3.0	3.0	2.8	2.8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4.4	4.6	4.0	4.0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4.4	4.2	3.8	3.6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3.8	3.8	3.6	3.4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도직접, 거점형)	3.4	3.6	3.0	2.8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4.2	4.6	3.8	3.4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	4.0	3.8	3.4	3.4

□ 고령화 영역 종합 평가 등급 분류 결과

- 각 사업의 성과지표별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중1~중2~하의 4개 등급으로 구분

- 상위 25%에 해당되는 ‘상’에는 8개 사업이 있고, 주로 주거나 의료/보건 관련 사업들이 상위에 랭크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고, 다음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노인 무료급식 지원	상	상	상	상	4.7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상	상	상	상	4.65
어르신 안전 하우징	상	상	상	상	4.50
노인 자살예방사업	상	상	상	상	4.50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상	상	상	상	4.40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상	상	상	상	4.35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중1	상	상	상	4.25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상	상	중1	중1	4.25

- 상위 25% 미만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1’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등급에는 5개의 사업이 포함
  - 전체 과제의 평균 평점은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받았음
  - 베이비부머 정책 중에서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중1’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지원 필요

[표 4-17]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상	중1	상	상	4.20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중1	중1	중1	중1	4.00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1	중1	중1	중1	4.00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중1	상	중1	중2	4.00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중1	상	중1	하	4.00

- ‘중2’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위권으로 총 7개의 사업이 포함됨
  - ‘중2’에 포함된 사업은 정책 방향의 적합도, 필요도, 효율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운영 방식 및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등급을 높이려는 전략 필요

- AI 관련 사업들은 긍정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노력 필요

[표 4-18]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중2	중1	상	중1	3.95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중2	중1	중2	중1	3.90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중2	중2	중1	상	3.85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중2	중1	중2	중2	3.80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중2	중2	중2	중1	3.75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중2	중2	중2	중2	3.65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	중2	중2	하	중2	3.65

○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하' 등급으로 분류

- '하' 등급으로 분류된 정책의 평균점수는 2.90~3.60점에 분포되었으며,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각각의 지표도 대부분 '하' 등급으로 분류됨
- 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거나 재구조화를 통해 전략 및 목표 매칭도를 높이는 방안 필요

[표 4-19]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어르신 문화즐거움 다양화	하	하	중2	중1	3.60
누구나 돌봄	하	중2	중2	중2	3.60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물 판매 확대 지원	중2	하	중2	중2	3.60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디지털 사업)	중2	중2	하	중2	3.60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도직접, 거점형)	하	하	하	하	3.20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하	하	하	하	2.90

□ 고령화 영역 IPA 분석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높은 '핵심 강화' 사업

- 고령화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과제 중 총 7개 사업이 '핵심 강화'에 해당, 비교적 정책 성과와 필요도 모두 높게 평가됨
- 핵심강화 사업에는 주로 의료/보건, 일자리, 주거 분야의 정책 포함

-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등이 있음
- 상위에 랭크된 사업들은 대체로 노인의 건강, 안전, 경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직접 서비스 성격이 강한 과제들로, 현장성과 정책 효과가 높게 평가됨

[표 4-20] '함께하는 노후생활' 영역 IPA 분석 결과

		효과성	
		낮음	높음
필요도	매우 낮음	<b>전략적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li> <li>돌봄매니저제도 도입</li> <li>AI 어르신 든든지기미</li> <li>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li> </ul>	<b>핵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li> <li>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li> <li>어르신 안전 하우징</li> <li>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li> <li>노인 자살예방사업</li> <li>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li> <li>노인 무료급식 지원</li> <li>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li> </ul>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li> <li>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li> <li>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li> <li>누구나 돌봄</li> <li>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li> <li>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li> <li>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li> <li>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li> <li>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li> <li>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 <li>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li> <li>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도직접, 거점형)</li> <li>베이비부머 인턴십(건설탕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li> </ul>
		<b>재검토 필요</b>	<b>효율 유지</b>

- 필요도는 높지만 효과성이 낮아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 AI 기술 기반 서비스나 돌봄 전문인력 관련 제도는 기대는 있으나 서비스 전달 방식이나 홍보 부족으로 효과성이 낮게 나타남
  - 대상자 수요와 사업 목표 간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및 타 돌봄·보건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

- 필요도는 낮지만 효과성이 높아 유지가 필요한 사업
  - ‘경기도 간병 SOS’가 유일하게 효율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
  -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등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고령화 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구한 지표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다른 돌봄 사업들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수요 제고가 필요한 사업임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낮아 검토가 필요한 사업
  - 함께하는 노후생활의 전략 달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13개 해당
  - 신중년 정책을 노후생활 지원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4)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략 분석

[그림 4-20]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전문가 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연구책임: 유정균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의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방법 : 개별 과제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해주시십시오.  
설문항목 탭에서 맨끝에 위치한 U, V, W, X열의 [전문가 평가항목](붉은색)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합도 평가하실 때, 추진방향은 C, D, E열의 [목표-전략-중점분야](노란색)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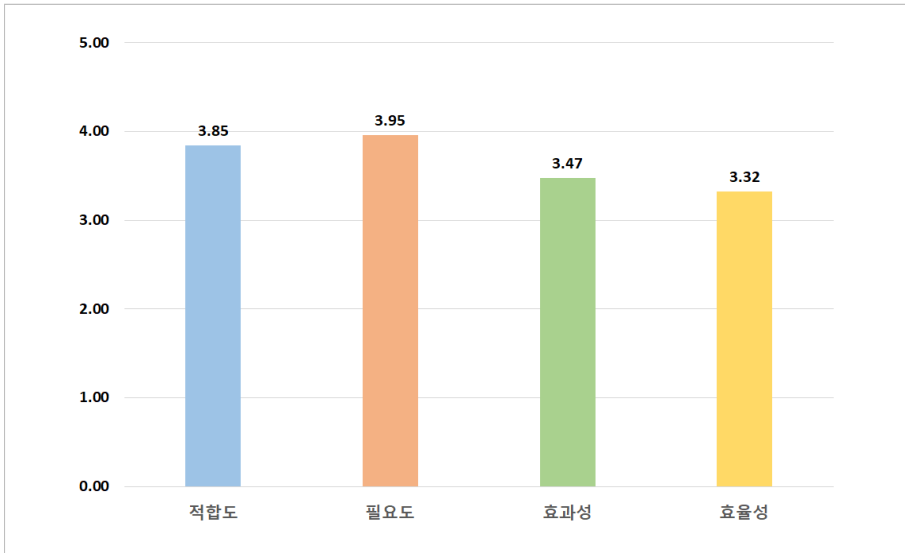
■ 평가항목

<b>적합도</b>	목표와 전략(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인구구조변화 대응)과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가?
<b>필요도</b>	목표와 전략(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인구구조변화 대응) 달성을 위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인가?
<b>효과성</b>	목표와 전략(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인구구조변화 대응)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인가?
<b>효율성</b>	목표와 전략(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정책인가?

■ 척도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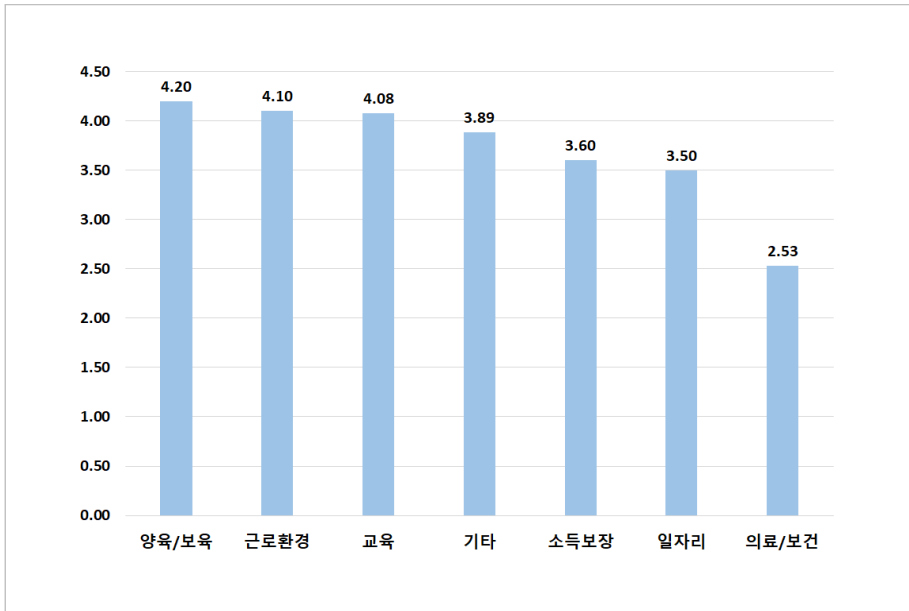
[그림 4-21]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평가 결과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 전체 돌봄 정책을 4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필요도' 평균 점수는 3.95로 가장 높았고, '효율성'은 3.32로 가장 낮음
- 돌봄이나 고령화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이 광범위하고, 목표가 모호해서 일부 사업들의 지표가 낮은 데서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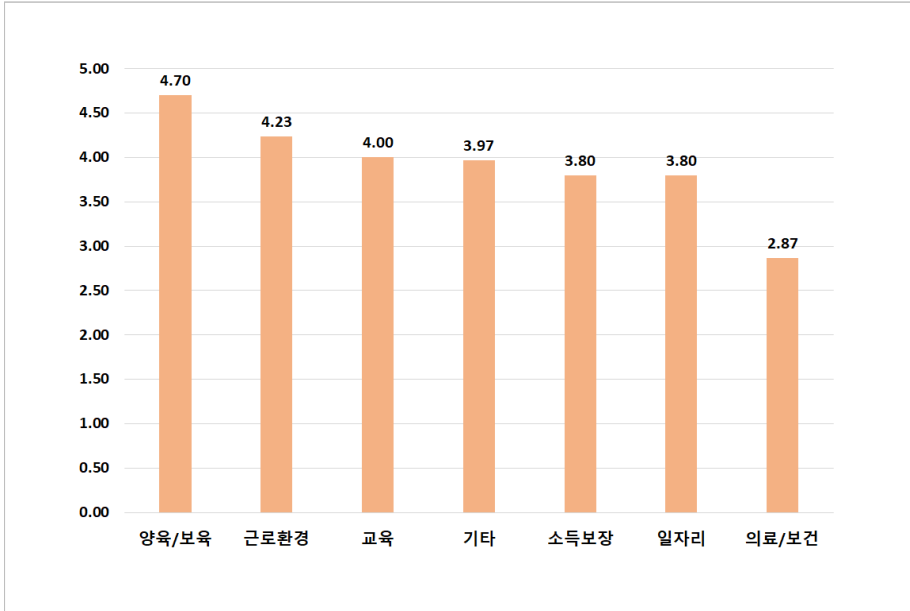
[그림 4-22]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적합도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 주요 분야별 적합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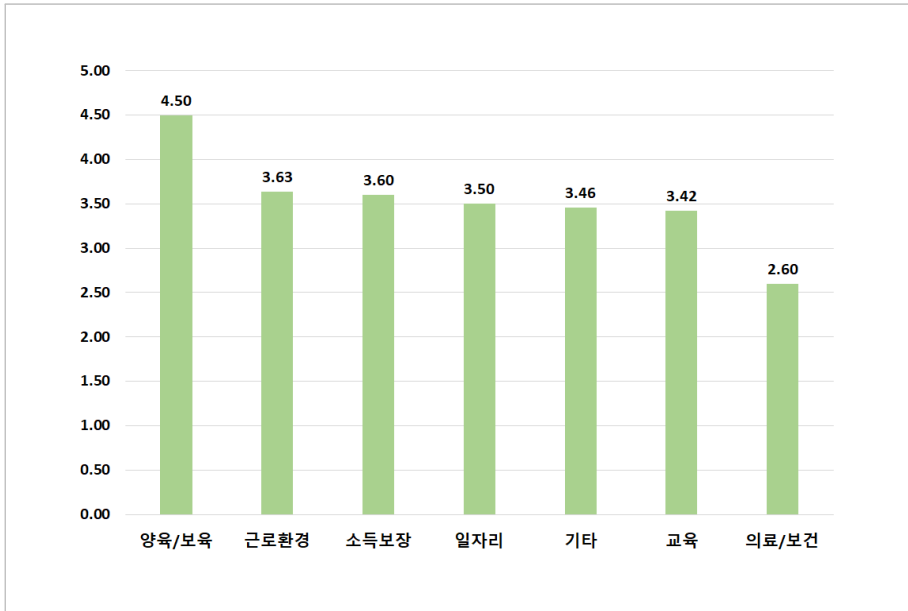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에서는 양육/보육 정책의 적합도가 4.2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환경 4.10점, 교육 4.08점 등의 순임
- 저출생 대응 사업이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생활균형 확보와 관련된 근로환경 개선의 중요도가 부각됨
- 의료/보건 분야가 2.53점으로 가장 낮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3]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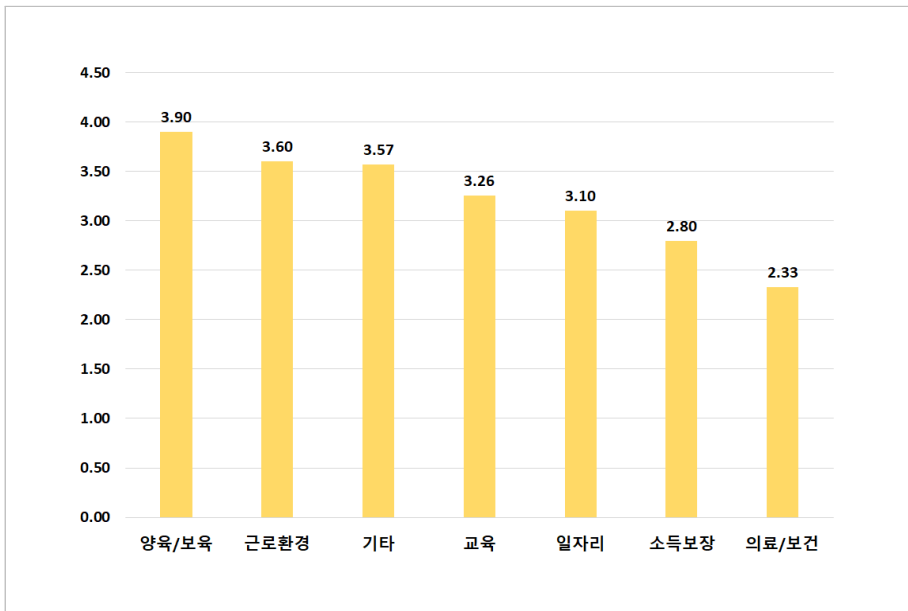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필요도 결과
  - 양육/보육 정책의 필요도가 4.70점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근로환경 4.23점 등의 순임
  -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필요도가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과성 결과
  - 효과성 차원에서는 양육/보육(4.50)과 다른 분야의 차이가 매우 큰 편임
  - 근로환경, 소득보장, 일자리, 기타, 교육 분야의 효과성 점수는 대체로 3.5점 전후를 기록했으며, 의료/보건만 2.60점으로 낮은 수준임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 주요 분야별 효율성 결과
  - 다른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내에서는 양육/보육의 효율성 점수가 3.90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의료/보건(2.33점), 소득보장(2.80점) 등은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정책으로 분류

[그림 4-24]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효과성



[그림 4-25]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주요 분야별 효율성



[표 4-21]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세부과제별 지표값

중점 분야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인구인식개선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4.6	3.4	3.4	3.2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	4.4	4.0	3.2	3.0
	경기도 아바하이! 운영	4.2	4.8	4.6	3.6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4.2	4.6	4.4	4.2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	4.6	4.8	4.0	4.2
다양한 가족의 인식과 돌봄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3.8	3.8	2.8	4.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4	3.6	3.4	3.0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3.4	3.8	3.4	3.2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3.4	3.4	3.4	3.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4.0	4.0	3.0	3.2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2.8	3.0	2.6	2.6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3.6	4.0	3.6	3.4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4.0	4.6	3.8	3.2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4.0	4.2	3.4	3.2
외국인 정착지원과 소통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	3.4	3.8	3.6	3.6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4.6	4.6	3.8	3.6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4.8	4.6	4.2	4.0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4.2	4.2	3.8	3.4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3.6	3.8	3.6	2.8
양성평등사업 지원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4.2	3.8	3.4	3.4
	경기도 성평등 캠페인 추진	4.2	3.8	3.0	3.4
일과 생활균형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	4.6	4.8	4.2	3.8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3.6	4.0	3.6	3.2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3.2	3.6	3.2	3.2
	일생활균형 상담지원	4.4	4.6	3.2	3.6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3.8	3.6	3.0	3.8
	주4.5일제 시범사업	4.6	4.6	4.0	3.4
	경기도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4.0	4.2	4.2	3.8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	2.4	2.8	2.6	2.2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2.4	2.8	2.6	2.2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2.8	3.0	2.6	2.6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평가 등급 분류 결과

- 각 사업의 성과지표별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중1~중2~하의 4개 등급으로 구분
- 상위 25%에 해당되는 '상'에는 8개 사업이 있고, 육아환경 조성이나 일생활균형 확보와 관련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 및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이고, 다음으로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2]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상'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	상	상	상	상	4.40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상	상	상	상	4.40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중1	상	상	상	4.35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	상	상	상	상	4.35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중1	상	상	상	4.30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상	상	상	상	4.15
주4.5일제 시범사업	상	상	상	중1	4.15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중1	중1	상	상	4.05

- 상위 25% 미만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1'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등급에는 8개의 사업이 포함
  - 전체 과제의 평균 평점은 3.6점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수준이며, 효율성을 제외하고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음

[표 4-23]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중1'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일생활균형 상담지원	상	상	중2	상	3.95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중1	중1	상	중1	3.90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중1	상	상	중2	3.90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중1	중1	중1	중2	3.70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중1	중2	중1	중1	3.70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상	하	중1	중2	3.65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	상	중1	중2	하	3.65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중2	중1	중1	중1	3.65

- ‘중2’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위권으로 총 8개의 사업이 포함됨
  - ‘중2’에 포함된 사업은 각 지표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경향이 있음
  - 효과성이 낮은 사업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접근 필요

[표 4-24]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중2’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경기도 성평등 캠페인 추진	중1	중2	하	중1	3.60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중2	중2	하	상	3.60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	중2	중2	중1	상	3.60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중2	중1	중1	중2	3.6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중1	중1	하	중2	3.55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중2	중2	하	상	3.55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중2	중2	중1	중2	3.45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중2	중2	중1	하	3.45

-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하’ 등급으로 분류
  - 전반적으로 적합도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다문화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외국인 주민으로의 확대 등을 통한 보완 필요
  - 인구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분류 등이 필요

[표 4-25]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종합 ‘하’ 등급 과제

과제명	적합도	필요도	효과성	효율성	평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하	하	중2	하	3.35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하	하	중2	하	3.30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하	하	하	중2	3.30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하	하	하	하	2.7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하	하	하	하	2.75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	하	하	하	하	2.5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하	하	하	하	2.50

##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IPA 분석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높은 ‘핵심 강화’ 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31개 중 12개 사업이 해당

- 핵심강화 사업에 포함된 12개 사업의 등급을 보면 ‘상’ 7개, ‘중1’ 3개이며, ‘중2’인 사업도 2개가 포함되어 있음

-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일생활균형 지원, 인구인식 개선 등의 사업이 주로 해당

○ 필요도는 높지만 효과성이 낮아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개선이 필요한 4개 사업의 등급을 보면, ‘중1’ 2개, ‘중2’ 1개, ‘하’ 1개로 구분

- 주요 사업으로는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등

- 필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은 만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표 4-26] ‘인구구조변화 대응’ 영역 IPA 분석 결과

		효과성	
		낮음	높음
필요 난 도	미 비 요	<b>전략적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생활균형 상담지원</li> <li>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li> <li>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li> <li>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li> </ul>	<b>핵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li> <li>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li> <li>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li> <li>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li> <li>경기도 아빠하이! 운영</li> <li>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li> <li>주4.5일제 시범사업</li> <li>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li> <li>외국인주민 인권 증진</li> <li>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li> <li>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li> <li>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li> </ul>
	가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li> <li>경기도 인구교육 운영</li> <li>경기도 성평등 캠페인 추진</li> <li>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li> <li>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li> <li>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li> <li>결혼이민자 취업지원</li> <li>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li> <li>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li> <li>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li> <li>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li> <li>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li> <li>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li> <li>외국인주민 긴급지원</li> </ul>
		<b>재검토 필요</b>	<b>효율 유지</b>

- 필요도는 낮지만 효과성이 높아 유지가 필요한 사업
  - 필요도 점수가 전체 사업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거의 평균에 근접한 수준임
  -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통합이나 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검토 필요
-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낮아 검토가 필요한 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13개 해당
  - 사업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만, 인구정책으로서의 정합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보임
  - 향후 인구정책 설계에서 제외 또는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 5) 전략별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전략별 관련도 분석 결과 요약

[표 4-27] 전략별 관련도 분석 결과 요약

전략 분야	주요 평가 특징	강화가 필요한 공통 영역	개선이 필요한 공통 영역	향후 추진방향 (시사점)
청년 삶의 질 강화	논리적 연결성 및 필요도는 높으나 효과성, 효율성 낮음	직접 소득보장 및 역량강화 지원	전달체계 및 운영 효율성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재설계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필요성 매우 높으나 재정 효율성 낮음	긴급돌봄 등 직접 지원 및 인프라 강화	시설운영 및 공간조성 사업의 활용성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
함께하는 노후생활	전반적 평가 우수하나 효율성 상대적으로 낮음	주거 및 보건 등 필수 생활지원 분야	문화·여가 분야 및 신기술(AI 등) 서비스 전달 방식	노년층 수요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전달방식 개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별 필요도 격차 크고 효과성 낮음	육아·보육 지원 및 일생활균형 사업	다문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의 실효성	분야별 정책목표 명확화 및 대상자 중심의 실질적 성과 향상

#### □ 청년 삶의 질 강화

- 특징: 정책 필요성 인정되나 실제 체감 성과 미흡
- 강화 필요 분야
  - 직접적인 소득지원(청년 기본소득 등)
  -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 지원 등)
- 개선 필요 분야
  - 예산 대비 실효성 부족한 주거 및 고용 지원사업(임대주택 공급 등)
- 시사점
  - 운영 체계 및 전달 방식 개선으로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 높여야 함

####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 특징: 사회적 수요 높은 분야이나 예산 운용 효율성 낮음

○ 강화 필요 분야

- 긴급 의료돌봄(소아응급 진료 지원 등)
- 어린이집 및 돌봄시설 직접 지원(시설형 돌봄체계 등)

○ 개선 필요 분야

- 시설·공간 조성사업(육아나눔터, 놀이터 등)의 이용률 및 체감 효과 저조

○ 시사점

- 예산 효율화 및 시설 운영 개선 통한 서비스 체감도 향상 필요

□ 함께하는 노후생활

○ 특징: 노인정책 전반적으로 우수 평가되나 효율성은 개선 필요

○ 강화 필요 분야

- 주거안정 및 건강·의료 분야 직접 서비스(응급안전 모니터링, 무료급식 등)

○ 개선 필요 분야

- 문화·여가 분야 지원 미흡(노인 문화프로그램 등)
- 신기술 기반 서비스 전달 방식 미흡(AI 말벗 서비스 등)

○ 시사점

- 고령층 수요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특징: 분야별로 필요성의 편차 크며, 일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미흡

○ 강화 필요 분야

- 육아 및 일·가정 균형 사업(육아휴직 장려금 등)

○ 개선 필요 분야

- 다문화 및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성 저조(다문화 자녀 지원사업 등)

○ 시사점

- 구체적인 성과 목표 설정 및 사업 재구성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 필요

## 2)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 조사의 목적

-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경기도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 방안에 활용

#### □ 조사 설계

##### ○ 저출생 관련 조사

- 모집단: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 부모(가장 어린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부모)
- 표본 크기: 602명
- 표본 배분: 자녀 나이에 따른 할당

##### ○ 고령화 관련 조사

- 모집단: 만 50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
- 표본 크기: 613명
- 표본 배분: 연령대별 할당

#### □ 조사 방법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조사 기간: 2025년 6월 24일 ~ 2025년 7월 3일

## □ 조사 영역 및 내용

[표 4-28] 저출생 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배경 질문	성별/연령, 거주지역, 최종 학력, 직업/고용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가구원 수/자녀 수/가구형태/맞벌이 여부
A.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의견, 가족의 기능 돌봄 및 경제적 지원 부담, 추가 자녀 계획 및 이유
B. 저출생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심각성, 저출산의 주된 이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 중요도,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중요도 돌봄환경 조성 중요도, 저출생 정책 대상 우선 순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정책
C.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	경기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필요도 및 효과성

[표 4-29] 고령화 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배경 질문	성별/연령, 거주지역, 최종 학력, 직업/고용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A. 부양	경제적 비독립 자녀 유무, 비독립 자녀 경제적 지원 부담 부모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부담
B. 고령화에 대한 인식	고령화 심각성, 고령화 현상이 미치는 영향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노인 정책 대상 우선 순위
C. 정책 수요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고령화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 노년기 돌봄 분야 노년기 일자리 지원 정책, 노년기 여가 지원 정책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 노년기 교통 지원 정책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D. 고령화 정책에 대한 평가	경기도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필요도 및 효과성

## 2) 저출생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 □ 응답자 특성

[표 4-30] 응답자 주요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02)	100.0
성별	남성	(301)	50.0
	여성	(301)	5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16.6
	40대	(327)	54.3
	50대 이상	(175)	29.1
혼인상태	유배우	(564)	93.7
	이혼/사별	(38)	6.3
최종학력	고등 이하	(69)	11.5
	대졸	(454)	75.4
	대학원 이상	(79)	13.1
취업여부	취업	(474)	78.7
	미취업	(128)	21.3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24.9
	초등학생 저학년	(75)	12.5
	초등학생 고학년	(76)	12.6
	중학생	(150)	24.9
	고등학생	(151)	25.1
자녀수	1명	(215)	35.7
	2명	(317)	52.7
	3명 이상	(70)	1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53.8
	외벌이 가구	(240)	39.9
	배우자 없음	(38)	6.3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107)	17.8
	400-500만원 미만	(112)	18.6
	500-600만원 미만	(115)	19.1
	600-700만원 미만	(75)	12.5
	700-800만원 미만	(65)	10.8
	800만원 이상	(128)	21.3

(1)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 결혼에 대한 가치관

- 응답자의 65.4%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하는 편이 낫다’ 37.5% + ‘해야 한다’ 27.9%)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80.0%인 반면, 여성은 50.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님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7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이하 69.0%, 40대가 59.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4-31] 결혼에 대한 가치관

구분		사례수	해야 한다	하는 편이 낫다	안 해도 상관없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계
전체		(602)	27.9	37.5	33.7	0.8	100.0
성별	남성	(301)	41.5	38.5	18.9	1.0	100.0
	여성	(301)	14.3	36.5	48.5	0.7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26.0	43.0	30.0	1.0	100.0
	40대	(327)	24.5	34.6	40.4	0.6	100.0
	50대 이상	(175)	35.4	40.0	23.4	1.1	100.0

□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였으며, ‘있는 편이 낫다’, ‘있어야 한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2%, 41.4%였음
- 성별로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53.8%)이 여성(28.9%)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2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2] 자녀에 대한 가치관

구분		사례수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계
전체		(602)	41.4	36.2	22.4	100.0
성별	남성	(301)	53.8	33.6	12.6	100.0
	여성	(301)	28.9	38.9	32.2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42.0	42.0	16.0	100.0
	40대	(327)	38.5	34.6	26.9	100.0
	50대 이상	(175)	46.3	36.0	17.7	100.0

□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 결혼은 희망하지 않지만, 아이는 희망하는 미혼 인구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해야 한다' 52.3%, '남성과 여성 모두 괜찮은 일이다' 37.4%, '여성에게 괜찮은 일이다' 8.5%, '남성에게 괜찮은 일이다' 1.8%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 별로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3]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남성, 여성 모두 반드시 결혼해야 함	여성에게는 괜찮음	남성에게는 괜찮음	여성, 남성 모두에게 괜찮음	계
전체		(602)	52.3	8.5	1.8	37.4	100.0
성별	남성	(301)	55.8	6.3	1.0	36.9	100.0
	여성	(301)	48.8	10.6	2.7	37.9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49.0	7.0	2.0	42.0	100.0
	40대	(327)	53.2	10.4	0.6	35.8	100.0
	50대 이상	(175)	52.6	5.7	4.0	37.7	100.0
최종 학력	고등 이하	(69)	56.5	14.5	0.0	29.0	100.0
	대졸	(454)	52.4	7.7	2.2	37.7	100.0
	대학원 이상	(79)	48.1	7.6	1.3	43.0	100.0

## □ 이상 자녀수

- 이상 자녀수에 대해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 13.5%, 3명 6.5%의 순임
- 성별로 여성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3%로 나타나 남성(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50대 이상과 최종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에서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4-34] 이상 자녀수

구분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전체		(602)	13.5	79.1	6.5	1.0	100.0
성별	남성	(301)	7.6	81.7	9.3	1.3	100.0
	여성	(301)	19.3	76.4	3.7	0.7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15.0	80.0	5.0	0.0	100.0
	40대	(327)	13.1	81.7	4.3	0.9	100.0
	50대 이상	(175)	13.1	73.7	11.4	1.7	100.0
최종 학력	고등 이하	(69)	14.5	79.7	4.3	1.4	100.0
	대졸	(454)	13.9	79.3	5.9	0.9	100.0
	대학원 이상	(79)	10.1	77.2	11.4	1.3	100.0

## □ 추가 출산 의향 없는 이유

-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93.3%가 없다고 응답
-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를 보면,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이/건강상 이유 33.5%', '경제적 부담' 20.9%의 순임
  - '육아에 대한 부담'(2.3%)이나 '부인이나 배우자가 원치 않음'(1.7%)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여성은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비율이 25.1%로 남성(17.0%)에 비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비율이 41.2%로 높은 편임

- 자녀수별로 보면,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자녀가 1명인 경우 23.7%에 불과해 원하는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음
  - 이들은 나이/건강상 이유 45.6%, 경제적 부담 24.3%를 선택함

[표 4-35]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사례수	현재 자녀로 충분	나이/건강상 이유	경제적 부담	기타	계
전체		(526)	41.4	33.5	20.9	4.2	100.0
성별	남성	(271)	41.7	35.8	17.0	5.6	100.0
	여성	(255)	41.2	31.0	25.1	2.8	100.0
연령대	30대 이하	(68)	42.6	11.8	41.2	4.4	100.0
	40대	(294)	42.2	31.3	21.4	5.1	100.0
	50대 이상	(164)	39.6	46.3	11.6	2.4	100.0
자녀수	1명	(169)	23.7	45.6	24.3	6.6	100.0
	2명	(294)	47.6	30.3	18.7	3.3	100.0
	3명 이상	(63)	60.3	15.9	22.2	1.6	100.0

주: 기타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본인이나 배우자가 원치 않음', '기타' 포함.  
유배우자 중 추가 출산이 없다고 선택한 응답자 대상.

#### □ 돌봄 부담

-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이나 비용 등에 대해 61.1%(다소 부담 48.8%+매우 부담 12.3%)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 남성(56.5%)에 비해 여성(65.8%)의 돌봄 부담 정도가 더 높았고, 연령이 낮을 수록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는 70.0%, 40대 62.4%, 50대 이상 53.7%가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명과 3명 이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
-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가 69.3%, 미취학 영유아 67.4%, 초등 고학년 64.5% 등의 순임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부담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73.7%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 부담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의 71.8%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75.4%로 남성 68.1%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76.8%로 가장 높고, 다음 50대 이상 68.0%의 순임
- 경제적 부담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한데, 3명 이상 81.4%, 2명 73.5%, 1명 66.0%임
-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부모의 자녀 나이대는 초등 저학년이 85.3%이며, 다음으로 초등 고학년 75.0%, 중학생 73.3%의 순임
- 돌봄 부담과 경제적 지원 부담의 차이를 보면, 초등 저학년과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 둘 간의 차이가 16.0%p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고등학생 자녀 13.9%p, 초등 고학년 10.5%p 등의 순임

[표 4-36] 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구분		사례수	돌봄 부담			경제적 지원 부담		
			다소 부담 느낌	매우 부담 느낌	합계	다소 부담 느낌	매우 부담 느낌	합계
전체		(602)	48.8	12.3	61.1	49.0	22.8	71.8
성별	남성	(301)	48.2	8.3	56.5	50.5	17.6	68.1
	여성	(301)	49.5	16.3	65.8	47.5	27.9	75.4
연령대	30대 이하	(100)	55.0	15.0	70.0	40.0	22.0	62.0
	40대	(327)	49.5	12.8	62.3	52.3	24.5	76.8
	50대 이상	(175)	44.0	9.7	53.7	48.0	20.0	68.0
자녀수	1명	(215)	43.7	10.7	54.4	47.4	18.6	66.0
	2명	(317)	52.4	12.6	65.0	49.2	24.3	73.5
	3명 이상	(70)	48.6	15.7	64.3	52.9	28.6	81.4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54.7	12.7	67.4	48.7	18.0	66.7
	초등학생 저학년	(75)	53.3	16.0	69.3	57.3	28.0	85.3
	초등학생 고학년	(76)	47.4	17.1	64.5	51.3	23.7	75.0
	중학생	(150)	46.0	11.3	57.3	48.7	24.7	73.3
	고등학생	(151)	44.4	8.6	53.0	44.4	22.5	6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49.7	11.4	61.1	47.2	23.5	70.7
	외벌이 가구	(240)	47.1	12.1	59.2	51.3	21.7	72.9
	배우자 없음	(38)	52.6	21.1	73.7	50.0	23.7	73.7

구분		사례수	돌봄 부담			경제적 지원 부담		
			다소 부담 느낌	매우 부담 느낌	합계	다소 부담 느낌	매우 부담 느낌	합계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07)	54.2	9.3	63.5	50.5	17.8	68.2
	400-500만원 미만	(112)	50.9	10.7	61.6	52.7	20.5	73.2
	500-600만원 미만	(115)	44.3	13.0	57.3	47.0	30.4	77.4
	600-700만원 미만	(75)	52.0	13.3	65.3	40.0	29.3	69.3
	700-800만원 미만	(65)	47.7	12.3	60.0	46.2	27.7	73.8

## (2) 저출생에 대한 인식

### □ 저출생의 심각성

- 응답자의 92.9%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4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다소 심각함’(37.7%)보다 ‘매우 심각함’(55.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출산의 심각성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 저출산의 주된 원인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7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움’ 41.7%, ‘출산/자녀 가치관 변화’ 25.2%, ‘주택 마련 어려움’ 20.6%의 순임
- 남성은 ‘주택 마련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편임
-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주택 마련 어려움’, 50대 이상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음

[표 4-37] 저출산의 주된 원인(1+2순위)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결혼 가치관 변화	주택 마련 어려움	출산/ 자녀 가치관 변화	아이 맡길 시설 부족	기타
전체		(602)	77.1	41.7	19.8	20.6	25.2	9.6	6.0
성별	남성	(301)	79.1	34.9	18.6	24.6	25.9	9.6	7.3
	여성	(301)	75.1	48.5	20.9	16.6	24.6	9.6	4.6
연령대	30대 이하	(100)	63.0	60.0	18.0	28.0	18.0	9.0	4.0
	40대	(327)	80.7	41.9	18.0	19.6	24.5	9.2	6.1
	50대 이상	(175)	78.3	30.9	24.0	18.3	30.9	10.9	6.9
최종 학력	고등 이하	(69)	79.7	44.9	15.9	24.6	18.8	14.5	1.4
	대졸	(454)	78.4	40.3	19.8	20.0	26.2	9.3	6.0
	대학원 이상	(79)	67.1	46.8	22.8	20.3	25.3	7.6	1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74.7	47.5	20.7	19.4	22.8	9.0	5.9
	외벌이 가구	(240)	80.0	33.8	18.3	21.7	29.2	10.0	7.1
	배우자 없음	(38)	78.9	42.1	21.1	23.7	21.1	13.2	0.0

주: 기타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기타' 포함.

#### □ 저출생 해결 방안에 대한 중요도

-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별적으로 묻고, 중요하다 (중요+매우 중요)고 응답한 비율을 정리함
  - 일가정양립에 대해서는 89.4%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자녀 나이대별로 보면 초등 고학년과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양육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1.4%로 다른 지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3명 이상 94.3%, 2명 92.4%, 1명 88.8%의 순임
- 결혼 및 출산 지원은 다른 지원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남성(87.0%)이 여성(79.4%)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응답

[표 4-38] 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구분		사례수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주거 등 결혼/ 출산 지원
전체		(602)	89.4	91.4	83.2
성별	남성	(301)	87.4	92.4	87.0
	여성	(301)	91.4	90.4	79.4
연령대	30대 이하	(100)	91.0	89.0	81.0
	40대	(327)	90.2	91.7	83.8
	50대 이상	(175)	86.9	92.0	83.4
자녀수	1명	(215)	88.8	88.8	82.3
	2명	(317)	89.3	92.4	83.3
	3명 이상	(70)	91.4	94.3	85.7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91.3	91.3	86.7
	초등학생 저학년	(75)	93.3	94.7	76.0
	초등학생 고학년	(76)	94.7	93.4	81.6
	중학생	(150)	90.0	90.0	84.0
고등학생	(151)	82.1	90.1	8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91.7	90.7	84.9
	외벌이 가구	(240)	86.7	92.5	81.3
	배우자 없음	(38)	86.8	89.5	81.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07)	81.3	87.9	83.2
	400-500만원 미만	(112)	88.4	92.9	83.9
	500-600만원 미만	(115)	91.3	90.4	81.7
	600-700만원 미만	(75)	90.7	92.0	82.7
	700-800만원 미만	(65)	96.9	92.3	80.0

주: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을 더한 값임.

####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관련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가/휴직 유연 사용' 89.7%,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누구나 사용' 86.2%의 순임
- 휴가/휴직 유연 사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미취학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에 대해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미취학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자녀가 많을수록 대체로 높아짐
  -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39]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구분		사례수	휴가/휴직 유연 사용	소득 걱정 없이 휴가/ 휴직 누구나 사용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 사용
전체		(602)	89.7	86.2	91.4
성별	남성	(301)	87.4	86.4	91.7
	여성	(301)	92.0	86.0	91.0
연령대	30대 이하	(100)	90.0	90.0	90.0
	40대	(327)	88.7	86.5	92.0
	50대 이상	(175)	91.4	83.4	90.9
자녀수	1명	(215)	87.4	84.7	88.8
	2명	(317)	91.5	87.7	92.4
	3명 이상	(70)	88.6	84.3	94.3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92.7	91.3	94.0
	초등학생 저학년	(75)	92.0	88.0	93.3
	초등학생 고학년	(76)	86.8	84.2	92.1
	중학생	(150)	87.3	84.7	90.7
	고등학생	(151)	89.4	82.8	8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89.5	86.7	90.4
	외벌이 가구	(240)	89.2	85.4	92.5
	배우자 없음	(38)	94.7	86.8	92.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07)	86.9	88.8	91.6
	400-500만원 미만	(112)	88.4	83.0	87.5
	500-600만원 미만	(115)	90.4	84.3	89.6
	600-700만원 미만	(75)	90.7	86.7	94.7
	700-800만원 미만	(65)	93.8	87.7	93.8

주: '중요하다' 외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을 더한 값임.

□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돌봄환경 조성 중에서는 국가 책임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0.6%, 틈새 돌봄 보장 85.4%,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84.2% 등으로 나타남
- 11세까지 국가 책임 지원에 대해서는 남성(83.7%)이 여성(77.4%)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 틈새 돌봄 보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확대 등 선택권 확대는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표 4-40]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구분		사례수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 책임 지원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전체		(602)	80.6	85.4	84.2
성별	남성	(301)	83.7	82.7	82.7
	여성	(301)	77.4	88.0	85.7
연령대	30대 이하	(100)	76.0	88.0	83.0
	40대	(327)	80.4	85.0	83.5
	50대 이상	(175)	83.4	84.6	86.3
자녀수	1명	(215)	74.4	84.7	79.5
	2명	(317)	84.9	86.1	87.4
	3명 이상	(70)	80.0	84.3	84.3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84.0	88.0	85.3
	초등학생 저학년	(75)	82.7	89.3	85.3
	초등학생 고학년	(76)	82.9	88.2	88.2
	중학생	(150)	78.0	82.0	82.7
	고등학생	(151)	77.5	82.8	8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83.0	86.7	84.0
	외벌이 가구	(240)	77.9	82.9	82.9
	배우자 없음	(38)	76.3	89.5	94.7

구분		사례수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 책임 지원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07)	80.4	86.0	86.9
	400-500만원 미만	(112)	75.9	83.0	81.3
	500-600만원 미만	(115)	79.1	85.2	84.3
	600-700만원 미만	(75)	86.7	90.7	82.7
	700-800만원 미만	(65)	83.1	83.1	86.2

주: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을 더한 값임.

#### □ 저출생 정책 대상의 우선 순위

-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무자녀 부부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자녀 이상 부부 25.2%, 미혼 청년 14.6%, 한자녀 부부 13.6% 등의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은 미혼 청년, 여성은 한자녀 부부와 2자녀 이상 부부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1] 저출생 정책 대상의 우선 순위

구분		사례수	미혼 청년	무자녀 부부	한자녀 부부	2자녀 이상 부부	계
전체		(602)	14.6	46.5	13.6	25.2	100.0
성별	남성	(301)	19.3	47.8	10.3	22.6	100.0
	여성	(301)	10.0	45.2	16.9	27.9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00)	4.0	41.0	27.0	28.0	100.0
	40대	(327)	13.5	47.4	13.5	25.7	100.0
	50대 이상	(175)	22.9	48.0	6.3	22.9	100.0
가장 어린 자녀 나이대	미취학 영유아	(150)	7.3	38.7	19.3	34.7	100.0
	초등학생 저학년	(75)	12.0	49.3	14.7	24.0	100.0
	초등학생 고학년	(76)	13.2	52.6	15.8	18.4	100.0
	중학생	(150)	15.3	49.3	12.7	22.7	100.0
	고등학생	(151)	23.2	47.0	7.3	22.5	100.0

□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

-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 지원 강화' 45.7%, '청년 결혼 지원 강화' 27.4%,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 19.6% 등의 순임
-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청년 결혼 지원 강화'와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 30대 이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 50대는 '청년 결혼 지원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2]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1순위+2순위)

구분		사례 수	일·가정 양립 지원	난임·부부 의료 시술 확대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	청년 결혼 지원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자녀 출산 인식 개선 홍보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보육 시설 확충
전체		(602)	58.8	11.6	19.6	27.4	45.7	15.0	12.3	8.6
성별	남성	(301)	51.5	11.6	18.6	32.6	49.2	14.6	13.0	8.3
	여성	(301)	66.1	11.6	20.6	22.3	42.2	15.3	11.6	9.0
연령대	30대 이하	(100)	64.0	13.0	26.0	22.0	41.0	16.0	8.0	9.0
	40대	(327)	59.3	11.9	19.9	26.6	45.3	14.7	12.8	8.3
	50대 이상	(175)	54.9	10.3	15.4	32.0	49.1	14.9	13.7	9.1
최종 학력	고등 이하	(69)	53.6	15.9	20.3	13.0	49.3	17.4	15.9	14.5
	대졸	(454)	60.1	10.8	20.3	27.3	45.2	15.0	12.3	7.7
	대학원 이상	(79)	55.7	12.7	15.2	40.5	45.6	12.7	8.9	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4)	62.7	11.7	20.4	27.8	43.2	14.5	10.5	8.3
	외벌이 가구	(240)	53.8	12.1	19.2	27.9	48.8	15.8	12.5	8.8
	배우자 없음	(38)	57.9	7.9	15.8	21.1	47.4	13.2	26.3	10.5

주: 기타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기타' 포함.

### (3) 경기도 저출생 정책의 필요도와 효과성

-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전략에 속한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효과성 측정
- 필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0점, 효과성은 3.76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임
  - 남성은 필요도 3.86점, 효과성 3.70점, 여성은 필요도 3.95점, 효과성 3.81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조금 더 높게 인식함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필요도 3.98점, 효과성 3.85점으로 정책에 대한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필요도는 미취학 영유아 자녀와 초등 고학년을 둔 부모에서 필요성(4.03점)과 효과성(3.84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모두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IPA 분석 결과,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평균보다 낮아 재검토가 필요로 분류된 사업은 19개이며, 이 중 전문가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다음의 10개(\* 표시)임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한방난임사업 지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기회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 3)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표 4-43] 응답자 주요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13)	100.0
성별	남성	(308)	50.2
	여성	(305)	49.8
연령대	50-54세	(77)	12.6
	55-59세	(114)	18.6
	60-64세	(111)	18.1
	65-69세	(184)	30.0
	70-74세	(65)	10.6
	75세 이상	(62)	10.1
혼인상태	미혼	(37)	6.0
	유배우	(474)	77.3
	이혼/사별	(102)	16.6
최종학력	중등 이하	(43)	7.0
	고졸 이하	(336)	54.8
	대학 이상	(234)	38.2
취업여부	취업	(384)	62.6
	미취업	(229)	37.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7.0
	100-300만원 미만	(144)	23.5
	300-500만원 미만	(198)	32.3
	500-700만원 미만	(128)	20.9
	700만원 이상	(100)	16.3

(1) 부양에 대한 인식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27.7%임
- 자녀를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부담된다(다소 부담+매우 부담)는 응답은 41.8%로 나타남
- 부담된다는 응답은 여성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음

[표 4-4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구분		경제적 비독립 자녀 유무			부담 정도			
		사례 수	있다	없다	사례 수	다소 부담	매우 부담	계
전체		(613)	27.7	72.3	(170)	33.5	8.2	41.7
성별	남성	(308)	27.3	72.7	(84)	29.8	8.3	38.1
	여성	(305)	28.2	71.8	(86)	37.2	8.1	45.3
연령 대	50-54세	(77)	54.5	45.5	(42)	31.0	9.5	40.5
	55-59세	(114)	48.2	51.8	(55)	32.7	3.6	36.3
	60-64세	(111)	31.5	68.5	(35)	31.4	8.6	40
	65-69세	(184)	17.4	82.6	(32)	34.4	9.4	43.8
	70-74세	(65)	6.2	93.8	(4)	50.0	50.0	100
	75세 이상	(62)	3.2	96.8	(2)	100.0	0.0	1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100.0	-	-	-	-
	100-300만원 미만	(144)	14.6	85.4	(21)	61.9	14.3	76.2
	300-500만원 미만	(198)	19.7	80.3	(39)	33.3	12.8	46.1
	500-700만원 미만	(128)	42.2	57.8	(54)	27.8	5.6	33.4
	700만원 이상	(100)	56.0	44.0	(56)	28.6	5.4	34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지를 확인한 결과, 33.3%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40.1%로 남성 27.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5-59세 38.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정서지원이나 신체적 지원 등의 비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정도는 42.7%로 경제적 지원 부담보다 9.4%p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7.4%p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47.0%로 가장 높았음

[표 4-45] 부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의 부담 정도

구분		사례 수	경제적 지원			비경제적 지원		
			다소 부담	매우 부담	계	다소 부담	매우 부담	계
전체		(288)	26.7	6.6	33.3	36.5	6.3	42.7
성별	남성	(151)	21.2	6.0	27.2	28.5	6.0	34.4
	여성	(137)	32.8	7.3	40.1	45.3	6.6	51.8
연령대	50-54세	(71)	31.0	4.2	35.2	33.8	4.2	38.0
	55-59세	(90)	31.1	7.8	38.9	33.3	10.0	43.3
	60-64세	(66)	19.7	7.6	27.3	40.9	6.1	47.0
	65-69세	(61)	23.0	6.6	29.5	39.3	3.3	42.6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	0.0	12.5	12.5	12.5	12.5	25.0
	100-300만원 미만	(38)	15.8	7.9	23.7	36.8	7.9	44.7
	300-500만원 미만	(95)	31.6	8.4	40.0	43.2	8.4	51.6
	500-700만원 미만	(73)	37.0	2.7	39.7	37.0	4.1	41.1
	700만원 이상	(74)	18.9	6.8	25.7	29.7	4.1	33.8

#### □ 이중 부양 부담

- 경제적 비독립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응답자는 128명으로 전체 응답자 613명의 20.9%에 해당
- 이 중 21명(16.4%)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음

#### (2) 고령화에 대한 인식

##### □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에 대해 전체의 57.6%가 70세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65세 17.8%, 75세 16.8%였음

- 세 연령을 합친 응답 비율이 92.2%였고, 나머지 7.8%는 다양한 응답이 나옴
- 평균 연령은 70.2세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실제 기준 연령인 65세보다는 약 5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4-46]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65세 (%)	70세 (%)	75세 (%)	평균 (세)
전체		(613)	17.8	57.6	16.8	70.2
성별	남성	(308)	19.5	58.8	14.0	69.9
	여성	(305)	16.1	56.4	19.7	70.5
연령대	50-54세	(77)	22.1	54.5	10.4	69.6
	55-59세	(114)	20.2	58.8	14.0	70.1
	60-64세	(111)	22.5	49.5	16.2	70.0
	65-69세	(184)	17.9	56.0	17.9	70.2
	70-74세	(65)	7.7	66.2	23.1	71.1
	75세 이상	(62)	9.7	69.4	21.0	70.6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5)	16.3	60.5	18.6	70.3
	100-300만원 미만	(62)	22.2	52.1	17.4	70.0
	300-500만원 미만	(43)	16.2	59.1	15.2	70.2
	500-700만원 미만	(144)	17.2	57.8	16.4	70.4
	700만원 이상	(198)	16.0	61.0	19.0	70.2

#### □ 고령화의 심각성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응답자의 97.1%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짐
- 또한, 92.9%는 고령화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다소 영향+매우 영향)이라고 응답함
- 이는 50~54세(98.7%)와 55~59세(9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령화 정책 시 우선 순위

- 노인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기능상태(신체적, 인지적)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기준 28.9%, 연령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능상태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연령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50대는 기능상태보다 소득기준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은퇴를 앞둔 55-59세에서는 고용상태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 상황에 따라 응답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음

[표 4-47] 고령화 정책 시 우선 순위

구분		사례 수	소득 기준	연령	기능 상태	고용 상태	가족 구성 형태	계
전체		(613)	28.9	20.9	31.0	11.6	7.7	100.0
성별	남성	(308)	31.2	23.4	27.9	10.4	7.1	100.0
	여성	(305)	26.6	18.4	34.1	12.8	8.2	100.0
연령 대	50-54세	(77)	36.4	19.5	26.0	13.0	5.2	100.0
	55-59세	(114)	33.3	14.9	31.6	16.7	3.5	100.0
	60-64세	(111)	26.1	26.1	30.6	11.7	5.4	100.0
	65-69세	(184)	26.1	16.8	35.9	10.9	10.3	100.0
	70-74세	(65)	27.7	24.6	30.8	7.7	9.2	100.0
	75세 이상	(62)	25.8	32.3	22.6	6.5	12.9	10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37.2	14.0	27.9	7.0	14.0	100.0
	100-300만원 미만	(144)	26.4	22.9	24.3	16.0	10.4	100.0
	300-500만원 미만	(198)	26.3	20.2	35.4	11.6	6.6	100.0
	500-700만원 미만	(128)	31.3	21.1	28.9	10.9	7.8	100.0
	700만원 이상	(100)	31.0	22.0	36.0	8.0	3.0	100.0

### (3) 정책 수요

#### □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 현재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영역은 소득보장이 38.0%였고, 다음으로 건강 35.4%, 일자리 12.4% 등의 순임
- 남성은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15.3%로 높았고, 여성은 건강이 38.7%로 소득보장과 함께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5-67세는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15.8%였으며, 75세 이상에서는 53.2%가 건강이라고 응답

[표 4-48]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구분		사례 수	소득 보장	건강	돌봄	일자리	여가	주거	교통	기타
전체		(613)	38.0	35.4	2.4	12.4	4.4	3.8	1.3	2.3
성별	남성	(308)	37.3	32.1	2.3	15.3	6.8	3.6	0.3	2.3
	여성	(305)	38.7	38.7	2.6	9.5	2.0	3.9	2.3	2.3
연령대	50-54세	(77)	49.4	27.3	0.0	11.7	2.6	6.5	2.6	0.0
	55-59세	(114)	50.0	28.1	3.5	8.8	2.6	5.3	0.9	0.9
	60-64세	(111)	36.9	31.5	2.7	13.5	5.4	3.6	1.8	4.5
	65-69세	(184)	33.7	38.6	2.7	15.8	3.8	2.2	0.0	3.3
	70-74세	(65)	29.2	38.5	1.5	10.8	9.2	6.2	3.1	1.5
	75세 이상	(62)	25.8	53.2	3.2	9.7	4.8	0.0	1.6	1.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34.9	34.9	4.7	14.0	7.0	4.7	0.0	0.0
	100-300만원 미만	(144)	46.5	32.6	0.7	10.4	3.5	4.9	0.0	1.4
	300-500만원 미만	(198)	36.9	37.9	2.5	12.6	4.0	2.5	1.5	2.0
	500-700만원 미만	(128)	33.6	33.6	3.1	15.6	4.7	2.3	3.9	3.1
	700만원 이상	(100)	35.0	37.0	3.0	10.0	5.0	6.0	0.0	4.0

□ 고령화 대응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4%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50.4%, 일자리 35.4% 등으로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소득보장이 72.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돌봄을 선택한 비율이 31.1%였음
- 연령대별로는 50-54세와 75세 이상은 돌봄, 55-59세에서 소득보장, 60-64세는 일자리, 65-69세는 주거, 70-74세는 여가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9] 고령화 대응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2순위)

구분		사례 수	소득 보장	건강	돌봄	일자리	여가	주거	교통	기타
전체		(613)	67.4	50.4	26.3	35.4	8.5	8.3	3.6	0.2
성별	남성	(308)	72.7	49.0	21.4	36.7	7.1	9.1	3.9	0.0
	여성	(305)	62.0	51.8	31.1	34.1	9.8	7.5	3.3	0.3
연령대	50-54세	(77)	72.7	44.2	32.5	36.4	6.5	7.8	0.0	0.0
	55-59세	(114)	78.1	52.6	27.2	31.6	5.3	4.4	0.9	0.0
	60-64세	(111)	67.6	48.6	22.5	40.5	9.0	9.9	1.8	0.0
	65-69세	(184)	63.0	49.5	25.5	38.0	7.1	10.9	5.4	0.5
	70-74세	(65)	61.5	55.4	20.0	30.8	18.5	7.7	6.2	0.0
	75세 이상	(62)	59.7	54.8	32.3	29.0	9.7	6.5	8.1	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62.8	46.5	27.9	30.2	11.6	14.0	7.0	0.0
	100-300만원 미만	(144)	69.4	50.7	20.8	34.0	6.3	13.2	5.6	0.0
	300-500만원 미만	(198)	65.7	51.5	29.3	34.3	7.1	8.1	4.0	0.0
	500-700만원 미만	(128)	67.2	43.8	23.4	48.4	10.2	3.9	2.3	0.8
	700만원 이상	(100)	70.0	58.0	31.0	25.0	11.0	5.0	0.0	0.0

## □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 수요

- 건강 지원 정책에서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이 69.5%로 가장 높았고,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 58.1%,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운동지원’ 30.2% 등의 순이었음
- 남성은 ‘건강 검진 및 질병 예방’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여성은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에서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75세 이상에서 ‘정신 건강 및 상담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에서는 ‘영양 및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4-50]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수	건강 검진 및 질병 예방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체 활동 프로그램 및 운동 지원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지원	영양 및 식생활 관리	건강 정보 접근성 강화
전체		(613)	58.1	69.5	30.2	16.0	21.0	5.2
성별	남성	(308)	67.5	70.1	28.2	14.9	15.6	3.6
	여성	(305)	48.5	68.9	32.1	17.0	26.6	6.9
연령 대	50-54세	(77)	50.6	79.2	28.6	13.0	23.4	5.2
	55-59세	(114)	63.2	80.7	22.8	12.3	19.3	1.8
	60-64세	(111)	65.8	67.6	25.2	17.1	17.1	7.2
	65-69세	(184)	57.1	65.8	35.9	15.2	21.7	4.3
	70-74세	(65)	55.4	63.1	38.5	15.4	21.5	6.2
	75세 이상	(62)	50.0	58.1	29.0	27.4	25.8	9.7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51.2	60.5	23.3	20.9	37.2	7.0
	100-300만원 미만	(144)	56.3	68.8	25.7	18.1	24.3	6.9
	300-500만원 미만	(198)	59.6	67.2	33.8	16.2	19.2	4.0
	500-700만원 미만	(128)	54.7	75.0	34.4	14.1	16.4	5.5
	700만원 이상	(100)	65.0	72.0	27.0	13.0	19.0	4.0

## □ 노년기 돌봄 정책 수요

-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 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대' 43.6%, '기초 생활 및 일상지원 서비스' 29.2%의 순임
- 55-59세는 '기초생활 및 일상지원 서비스'가 41.2%로 높은 편이었고, 60-64세는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65-69세는 '정신 건강 및 정서적 돌봄', 70-74세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75세 이상은 '기초생활 및 일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1] 노년기 돌봄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 수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장기 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기초 생활 및 일상 지원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정서적 돌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체		(613)	61.8	43.6	29.2	20.7	13.7	7.3	17.0	6.7
성별	남성	(308)	65.6	47.7	26.6	18.5	14.9	7.1	13.6	5.8
	여성	(305)	58.0	39.3	31.8	23.0	12.5	7.5	20.3	7.5
연령대	50-54세	(77)	55.8	49.4	31.2	19.5	16.9	2.6	20.8	3.9
	55-59세	(114)	62.3	49.1	41.2	16.7	7.0	1.8	14.9	7.0
	60-64세	(111)	70.3	45.9	26.1	19.8	11.7	8.1	15.3	2.7
	65-69세	(184)	58.7	40.2	22.8	25.5	15.2	9.8	19.0	8.7
	70-74세	(65)	69.2	32.3	21.5	21.5	20.0	10.8	20.0	4.6
	75세 이상	(62)	54.8	43.5	37.1	16.1	14.5	11.3	9.7	12.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67.4	20.9	37.2	25.6	9.3	7.0	14.0	18.6
	100-300만원 미만	(144)	56.9	36.8	34.0	21.5	12.5	7.6	24.3	6.3
	300-500만원 미만	(198)	65.2	46.0	26.3	21.2	13.6	7.1	15.7	5.1
	500-700만원 미만	(128)	67.2	42.2	25.8	19.5	15.6	8.6	14.1	7.0
	700만원 이상	(100)	53.0	60.0	29.0	18.0	15.0	6.0	14.0	5.0

□ 노년기 일자리 지원 정책 수요

- 일자리 정책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 확대’가 5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성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 55.2%,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 52.2%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성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은 남성에서 높은 편임
- 50-54세는 ‘직무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에서는 적성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2] 노년기 일자리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수	다양한 일자리 유형 확대	적성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	직무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근로 조건 개선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
전체		(613)	59.2	55.3	12.2	21.0	52.2
성별	남성	(308)	56.5	61.7	12.3	23.4	46.1
	여성	(305)	62.0	48.9	12.1	18.7	58.4
연령 대	50-54세	(77)	63.6	53.2	19.5	23.4	40.3
	55-59세	(114)	65.8	43.9	12.3	21.9	56.1
	60-64세	(111)	60.4	58.6	13.5	21.6	45.9
	65-69세	(184)	58.7	50.0	7.6	21.2	62.5
	70-74세	(65)	44.6	69.2	15.4	21.5	49.2
	75세 이상	(62)	56.5	74.2	11.3	14.5	43.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51.2	60.5	14.0	20.9	53.5
	100-300만원 미만	(144)	61.1	50.7	8.3	24.3	55.6
	300-500만원 미만	(198)	59.6	58.6	12.1	17.7	52.0
	500-700만원 미만	(128)	57.0	51.6	13.3	21.9	56.3
	700만원 이상	(100)	62.0	58.0	16.0	22.0	42.0

□ 노년기 여가 지원 정책 수요

- 노년기 여가 지원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동 및 접근성 지원’ 37.7%, ‘여가활동비 지원’ 35.9%의 순임
-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이동 및 접근성 지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요가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이동 및 접근성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60대는 ‘여가활동비 지원’, 70-74세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품질 개선’과 ‘디지털 여가 활동 접근성 강화’, 75세 이상에서는 ‘참여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가 45.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3] 노년기 여가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 수	공간 및 시설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 및 품질 개선	이동 및 접근성 지원	참여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디지털 여가 활동 접근성 강화	여가 활동비 지원	기타
전체		(613)	22.5	51.1	37.7	24.3	22.3	6.0	35.9	0.2
성별	남성	(308)	24.7	50.6	32.5	26.0	23.4	5.5	37.3	0.0
	여성	(305)	20.3	51.5	43.0	22.6	21.3	6.6	34.4	0.3
연령대	50-54세	(77)	19.5	42.9	48.1	15.6	36.4	2.6	35.1	0.0
	55-59세	(114)	18.4	51.8	48.2	21.9	22.8	4.4	32.5	0.0
	60-64세	(111)	20.7	54.1	32.4	25.2	20.7	6.3	40.5	0.0
	65-69세	(184)	26.6	49.5	35.3	20.7	22.3	6.0	39.7	0.0
	70-74세	(65)	23.1	58.5	26.2	27.7	16.9	13.8	33.8	0.0
	75세 이상	(62)	24.2	51.6	33.9	45.2	12.9	4.8	25.8	1.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8.6	39.5	34.9	27.9	30.2	7.0	39.5	2.3
	100-300만원 미만	(144)	22.2	44.4	35.4	25.7	22.2	6.9	43.1	0.0
	300-500만원 미만	(198)	25.3	50.0	41.4	27.3	18.2	6.1	31.8	0.0
	500-700만원 미만	(128)	21.9	50.8	35.2	24.2	24.2	6.3	37.5	0.0
	700만원 이상	(100)	20.0	68.0	38.0	15.0	25.0	4.0	30.0	0.0

□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 수요

-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설계 보급’을 선택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9.9%,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안전 개선 지원’ 33.0%의 순으로 나타났음
- 50-54세는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안전 개선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5-59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70-74세는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75세 이상은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설계 보급’이 높은 편임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라는 응답이 높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4-54]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안전 개선 지원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설계 보급	커뮤니 티형 고령자 주거 모델 확대	주거 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전체	(613)	49.9	33.0	54.8	31.6	30.7	
성별	남성	(308)	54.2	31.5	54.5	31.5	28.2
	여성	(305)	45.6	34.4	55.1	31.8	33.1
연령 대	50-54세	(77)	36.4	48.1	46.8	36.4	32.5
	55-59세	(114)	57.0	34.2	53.5	34.2	21.1
	60-64세	(111)	47.7	36.9	55.9	26.1	33.3
	65-69세	(184)	51.6	26.6	58.7	35.3	27.7
	70-74세	(65)	53.8	26.2	47.7	29.2	43.1
	75세 이상	(62)	48.4	30.6	61.3	22.6	37.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46.5	34.9	51.2	18.6	48.8
	100-300만원 미만	(144)	56.9	34.0	48.6	22.9	37.5
	300-500만원 미만	(198)	46.5	29.3	58.6	32.8	32.8
	500-700만원 미만	(128)	49.2	36.7	54.7	37.5	21.9
	700만원 이상	(100)	49.0	33.0	58.0	40.0	20.0

□ 노년기 교통 지원 정책 수요

- 노년기 교통 지원 정책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동 약자 전용 교통 수단 확대' 35.6%, '의료·복지시설 방문 교통 지원' 30.5%의 순임
- 성별로 남성은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여성은 '의료·복지시설 방문 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50-54세는 '이동 약자 전용 교통 수단 확대'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70-74세와 75세 이상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및 대체 교통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5] 노년기 교통 정책 수요(1순위+2순위)

구분		사례 수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이동 약자 전용 교통 수단 확대	보행 환경 개선	의료·복지시설 방문 교통 지원	교통 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교통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교육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및 대체 교통 연계
전체		(613)	52.2	35.6	12.6	30.5	23.5	16.2	29.5
성별	남성	(308)	60.4	32.5	10.7	26.6	24.7	16.6	28.6
	여성	(305)	43.9	38.7	14.4	34.4	22.3	15.7	30.5
연령대	50-54세	(77)	27.3	50.6	16.9	41.6	28.6	11.7	23.4
	55-59세	(114)	45.6	41.2	10.5	35.1	29.8	14.9	22.8
	60-64세	(111)	58.6	35.1	11.7	34.2	23.4	13.5	23.4
	65-69세	(184)	57.1	27.7	10.3	25.5	23.4	20.7	35.3
	70-74세	(65)	56.9	35.4	15.4	26.2	15.4	15.4	35.4
	75세 이상	(62)	64.5	30.6	16.1	21.0	14.5	16.1	37.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39.5	37.2	25.6	32.6	20.9	16.3	27.9
	100-300만원 미만	(144)	63.9	34.7	11.1	22.9	21.5	17.4	28.5
	300-500만원 미만	(198)	55.1	34.8	11.1	32.8	20.7	15.7	29.8
	500-700만원 미만	(128)	46.1	39.8	9.4	32.0	26.6	15.6	30.5
	700만원 이상	(100)	43.0	32.0	16.0	34.0	29.0	16.0	30.0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금 인상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 60.4%,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46.2%의 순임
- 연령별로는 50대에서는 ‘세금 인상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표 4-56]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

구분		사례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세금 인상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입시 경쟁 완화 및 진학 어려움 감소	취업난 완화 및 경쟁 감소
전체		(613)	68.4	60.4	17.3	46.2	3.1	4.7
성별	남성	(308)	67.9	60.1	16.9	46.8	4.2	4.2
	여성	(305)	68.9	60.7	17.7	45.6	2.0	5.2
연령대	50-54세	(77)	64.9	71.4	20.8	36.4	1.3	5.2
	55-59세	(114)	65.8	71.9	18.4	35.1	6.1	2.6
	60-64세	(111)	64.0	60.4	18.9	48.6	2.7	5.4
	65-69세	(184)	71.2	59.2	12.5	50.0	2.2	4.9
	70-74세	(65)	72.3	47.7	21.5	55.4	0.0	3.1
	75세 이상	(62)	72.6	41.9	17.7	53.2	6.5	8.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74.4	37.2	23.3	58.1	2.3	4.7
	100-300만원 미만	(144)	66.0	55.6	16.0	48.6	2.8	11.1
	300-500만원 미만	(198)	71.7	60.6	13.6	47.0	3.5	3.5
	500-700만원 미만	(128)	71.1	64.8	18.0	40.6	3.9	1.6
	700만원 이상	(100)	59.0	71.0	23.0	43.0	2.0	2.0

#### (4) 경기도 고령화 정책의 필요도와 효과성

##### □ ‘고령화’ 관련 정책 26개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효과성 측정

##### ○ 필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4점, 효과성은 3.59점으로 나타남

- 남성은 필요도 3.77점, 효과성 3.54점, 여성은 필요도 3.91점, 효과성 3.64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필요도와 효과성이 높음
-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령화 관련 정책의 필요도와 효과성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50~54세의 필요도와 효과성은 각각 3.92점과 3.71점인데 반해 75세 이상은 3.64점과 3.38점으로 차이가 있음
- 교육수준과 정책 필요도 및 효과성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의 효과성과 필요도가 높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모두 대체로 낮은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연령 및 교육수준 등에 따른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 IPA 분석 결과, 필요도와 효과성 모두 평균보다 낮아 재검토가 필요로 분류된 사업은 12개이며, 이 중 전문가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다음의 9개(\* 표시)임

-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경기도 AI 노인말벗 서비스\*, 누구나 돌봄\*,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디지털 사업)\*,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道직접, 거점형)\*,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

### 3 소결

#### 1) 저출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주요 결과 요약

######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응답자의 65.4%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남성 80.0%, 여성 50.8%)
- 자녀가 '있어야 한다'(41.4%) 또는 '있는 편이 낫다'(36.2%)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으나, 남성(53.8%)이 여성(28.9%)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
-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 모두에게 괜찮은 일이다'는 37.4%임
-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2명(79.1%)을 가장 선호했으며, 여성은 1명(19.3%)을 선호하는 비율이 남성(7.6%)보다 높게 나타남

###### □ 추가 출산 의향 및 이유

- 응답자의 93.3%가 추가 출산 의향이 없음
- 주된 이유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41.4%), '나이/건강상 이유'(33.5%), '경제적 부담'(20.9%) 순이었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41.2%로 높게 나타남

###### □ 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 부담

- 응답자의 61.1%가 자녀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성(65.8%)이 남성(56.5%)보다 부담이 높았음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은 71.8%가 느끼고 있었으며, 이 또한 여성(75.4%)이 남성(68.1%)보다 높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3명 이상 81.4%) 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보임

## □ 저출생 인식 및 원인

- 응답자의 92.9%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
-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77.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가정 양립 어려움'(41.7%), '출산/자녀 가치관 변화'(25.2%), '주택 마련 어려움'(20.6%) 순임

## □ 저출생 해결 방안 중요도

- '양육 지원'(91.4%)과 '일가정 양립'(89.4%)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3.2%)은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91.4%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틈새 돌봄 보장'(85.4%)과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84.2%)가 중요하게 인식

## □ 저출생 정책 대상 우선순위

-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상은 '무자녀 부부'(46.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자녀 이상 부부'(25.2%) 순임

## (2) 시사점

### □ 성별 가치관 차이 해소 필요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므로, 성별에 따른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사회적 논의 필요

### □ 경제적 및 돌봄 부담 경감의 시급성

-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이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확대, 유연근무 제도 활성화,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필요

-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 2명을 이상적인 자녀 수로 여기지만 실제 추가 출산 의향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넘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특히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나이/건강, 경제적 부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육아휴직 등 제도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및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법적 제도 마련을 넘어 기업 문화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
-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및 지원
  -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과 출산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정책 대상의 전략적 접근
  - 저출생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서 무자녀 부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첫 출산을 장려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 확대 필요
- 연령별, 자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 30대 이하의 경제적 부담, 자녀 나이대별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연령 및 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

## 2) 고령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주요 결과 요약

- 부양에 대한 인식
  -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으며, 여성(40.1%)이 남성(27.2%)보다 부담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임

- 비경제적 지원(정서적/신체적)에 대한 부담은 42.7%로 경제적 지원 부담(3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51.8%)과 60-64세 연령대(47.0%)에서 높은 부담을 느낌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담을 겪는 응답자는 전체의 20.9%이며, 이 중 16.4%는 자녀와 부모님 모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고령화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57.6%)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70세라고 인식하며, 실제 기준인 65세보다 약 5세 높게 보고 있음
  - 응답자의 97.1%가 고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92.9%는 고령화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고령화 관련 정책 수요
  -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소득 보장'(38.0%)과 '건강'(35.4%) 순임
  -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득 보장'(67.4%), '건강'(50.4%), '일자리'(35.4%)가 우선순위로 나타남
  - 노인에 대한 정책 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으로 '기능상태(신체적, 인지적)'(31.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기준'(28.9%)이 중요
  -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으로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69.5%)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돌봄 정책으로는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61.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 확대'(59.2%), '적성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55.3%)의 수요가 높았음
  - 노년기 주거 지원 정책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설계 보급'(54.8%)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49.9%)가 다음으로 높음
  - 노년기 교통 지원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52.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동 약자 전용 교통 수단 확대'(35.6%)의 순임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68.4%)와 ‘세금 인상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60.4%)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2) 고령화 관련 시사점

- 부양 부담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
  - 고령층 부양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여성과 특정 연령대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 ‘샌드위치 세대’ 지원 강화
  -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에 대한 맞춤형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
- 노인 연령 인식 변화 반영
  -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유연한 재검토 필요
- 고령층 삶의 질 향상 정책
  -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
- 의료·돌봄 및 일자리 지원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노년층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활동적인 노년기 지원 필요
-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노년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독려 필요

# 05

##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1.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2.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 제5장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 1)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향

#### 1) 경기도 인구정책 종합 진단 및 개선 방향

##### □ 기존 인구정책 문제점 및 한계

##### ○ 생애주기 관점의 미비

- 기존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나 청년 취업 등 국가적 현안 중심의 단발성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이 부족
- 특히 청소년, 중장년, 후기 노인 등 전환기 혹은 과도기 세대에 대한 정책 공백이 존재하며, 일부 연령대에 정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 자립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양육지원 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 등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지출이 많은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음

##### ○ 정책 대상의 세분화 부족 및 획일적 접근

- 연령 기준으로 단순 구분하거나,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방식이 일반적임
- 고령자 정책에서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은 건강 상태, 돌봄 수요, 사회참여 욕구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 특히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노인과는 다른 특성들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음

##### ○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성

-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서비스 전달체계도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 예산 낭비, 대상자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효과성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됨

○ 거버넌스 부재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

- 인구정책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가 상이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정책 조율과 일관된 추진이 어려움
- 핵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운영할 전담 조직(컨트롤 타워)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정책 간 통합적 구조화가 미흡함
-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사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책 전반의 성과 관리 또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정책도 재구조화하는 방안 필요인구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 경기도 인구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향

○ 생애주기 관점을 반영한 정책 체계 전환

- 결혼-출산-양육-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주기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다수 있지만, 청소년 관련 정책은 매우 소수에 불과

○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정밀화

- 큰 틀에서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분류하더라도, 동일한 집단 내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 예를 들면, 고령화 관련 정책이 현재는 중장년과 노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노인 안에서도 전기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의 내재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향후 고령화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효율성 향상

- 유사하거나 중복 정책은 통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인구정책에서 제외하는 방안 필요

○ 거버넌스 구성에 따른 정책 구조화

- 사업 담당 부서 및 영역 중심으로 거버넌스 재편
-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

[표 5-1] 경기도 인구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주요 내용

항목	진단	재구조화 방안
생애주기별 정책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 출산·청년 등에 집중되고, 생애 주기 전반을 포괄하지 못함</li> <li>• 청소년, 중장년, 후기 노인 등 정책 공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전환</li> <li>• 결혼-출산-양육-청년-중장년-노년까지 촘촘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li> </ul>
정책 대상의 다양성과 정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기준의 단순 구분, 사회경제적 차이 미반영</li> <li>• 노인 내부 이질성(전기·후기 노인 등), 청년 유형 구분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정밀화</li> <li>•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li> </ul>
정책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사업이 부처·지자체 간 중복</li> <li>• 효과성 낮은 사업의 존속, 전달체계 분절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li> <li>• 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중심 평가로 효과성 낮은 사업 정비</li> </ul>
정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간 역할 중복, 조정기능 미약</li> <li>• 전담 조직(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구조화 및 거버넌스 재편</li> <li>• 부서 중심 구조 개편, 책임성과 조정기능 강화</li> </ul>

## 2)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 도민 인식조사에서 나온 주요 결과를 토대로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 방안 제시

### (1) 출산준비가: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연계 강화

#### □ 전략 및 방향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
- 임신 및 출산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 □ 주요 추진 과제

- 임신·출산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출산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 예비 부모 대상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와 서비스 통합 제공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 권역별 난임 심리상담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 운영 강화

-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고위험 임신부 대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신준비금(출산준비 바우처) 신설 지급
  - 임신부 교통비 및 출산 준비물 지원 사업 신설

## (2) 영유아기: 돌봄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전략 및 방향

-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확대
- 영유아 돌봄 인프라 구축과 의료·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출생 및 육아 초기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 주요 추진 과제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급 및 경기도형 출산축하금 신설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액 지원
- 보육 인프라 구축 및 질적 향상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플랫폼 활성화
  - 언제나돌봄 어린이집 확대 운영
- 건강·보건 지원 강화
  -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및 운영
  -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신부 대상 의료 및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
  - 공공형 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신규 확대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확대
  - 언제나돌봄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 (3) 아동·청소년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성장 지원 강화

#### □ 전략 및 방향

- 초등~청소년 시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
- 정서·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도모

#### □ 주요 추진 과제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수요 대비 확대 설치
  - 초등학생 대상 언제나돌봄센터 전 시군 확대 운영
  - 방학 중 돌봄 및 급식 서비스 의무화 및 운영지원 강화
- 교육 및 정서지원 강화
  -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학교 연계 운영 지원
  -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확대 플랫폼 운영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향상 추진
- 청소년 건강 및 안전 증진
  - 청소년 경제적 지원 강화
  - 청소년기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대응 시스템 플랫폼 구축

### (4) 청년기: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 안정화

#### □ 전략 및 방향

- 청년층의 안정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적 기회 제공
- 청년층의 안정적 자립 및 사회적 참여 촉진
- 주거·일자리·사회적 연결망 등 종합적인 생활 기반 마련

#### □ 주요 추진 과제

- 주거 안정 지원

-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보증금 지원 확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 일자리 및 경제적 자립
  - 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랫폼 구축(취업-창업 연계)
  - 청년노동자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연결망 구축
  - 경기청년포털 운영 강화 및 지역별 청년공간 확대 설치
  -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지원 사업 활성화
- 자기계발 및 글로벌 경험 확대
  - 해외취업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시운영

#### (5) 중장년기: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

##### □ 전략 및 방향

-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통한 안정적 삶 지원

##### □ 주요 추진 과제

- 재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
  -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 베이비부머 대상 소득창출 기회 제공(경력형 일자리, 사회참여 활동 연계)
- 사회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중장년 사회참여 플랫폼 운영(사회공헌, 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연계)
  - 신중년 전환기 심리·정서 지원 상담센터 운영

#### (6) 노년기: 건강한 노후 및 참여 활성화

##### □ 전략 및 방향

-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소외 예방

## □ 주요 추진 과제

### ○ 건강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AI 기반의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원격진료, 건강모니터링)
-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서비스 확대
- 공공요양시설 신규 확충 및 요양서비스 강화

### ○ 사회적 참여 활성화

- 노인 일자리 제공 플랫폼(생산적 일자리, 공익활동, 봉사활동 다양화)
- 노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서포터즈 사업 확대

## 3)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정밀화

### □ 정책 대상 정밀화 필요성

- 청소년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아동과 청년 사이에 낀 세대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2개에 불과함
- 양육 부담 및 생애주기에 기반한 정책 설계 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방향 필요
- 노인의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지만, 연령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발생
-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

### (1) 청소년

#### ○ 문제점

- 청소년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부족과 안정적인 청년세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 부족

#### ○ 정책 방향

- 청소년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강화

- 진로 탐색 및 정서·심리 건강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
- 유아-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기반의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 신규 정책 제안

### ○ 청소년수당 지급

- 아동수당의 대상 나이를 청소년까지로 확대하여 지급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부모가 아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방안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관념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 지원

- 경제적·물리적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 학습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상: 만6~24세(재수생 포함) 경기도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 및 학교밖·다문화가족, 북한이탈청소년
- 지원 내용: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과 및 비교과 학습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원으로 학습관리를 통해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을 도움

### ○ 지역정착형 진로탐색 프로젝트

- 지역 내 기업·기관·직업인 탐방주간 정례화: 지역 소재 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실제 직업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일자리 인식을 개선
- 지역 출신 청년과의 멘토링(진로+정주 경험 공유): 수도권 대신 고향에 남거나 돌아온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 내 커리어 비전 구체화
-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예: 마을축제 기획, 지역 특산물 마케팅 등)를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

### ○ “10대 마인드케어” 청소년 정서·심리 건강지원 사업

- AI 기반 감정분석 앱 보급 및 위험감지 알림 시스템: 스마트폰 일기, 채팅 분석을 통해 감정 상태 파악 → 위기 징후 시 교사·상담사 연계 알림
- 교내 심리상담사 정규직 채용 및 전용 공간 확충: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일상적 상담이 가능하고, 교내 상담실을 독립된 안전 공간으로 확보

- 디지털 금식 치유캠프, 자연치유형 쉼 공간 운영: 1~2박 캠프 형태로 디지털기기 없이 공동생활 + 심리훈련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 심리서포터즈(또래 지지 네트워크) 양성: 상담교육을 받은 학생이 친구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

#### ○ 청소년 의회 및 참여권 제도화 사업

- 청소년 주도형 지역 활동 지원: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예: 봉사활동,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 확대
-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활성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 활성화
- 지역 기반 정책 발굴 및 연계: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사회 자원(예: 기업, 대학, 시민단체)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강화

#### ○ “형제자매 돌봄 바우처” 가족 내 역할 활성화 사업

- 형제자매 돌봄활동 포인트 지급: 부모의 인증을 통해 인정된 돌봄시간에 따라 포인트 제공
- 형제 관계증진 워크숍 및 공동여가 활동 지원: 형제 간 갈등 해결법, 협력활동 체험을 포함한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미래 가족 가치 형성 교육

- 생애주기·노동·양육·가족을 통합한 진로·생활 설계 교육 도입: 생애설계 과목으로 진로, 노동, 주거, 가족계획까지 포괄하는 커리큘럼 운영
- 청년 부모 멘토링 + 출산 체험형 콘텐츠 활용: 실제 자녀를 둔 20대~30대 부모 초청 강연 및 생활 노하우 공유
- 학부모와 공동 참여 가능한 가족 이해 프로그램 제공: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가족 워크숍’ 운영

### (2) 전기 노인(65~74세)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복지/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는 노년층 내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 노년층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

○ 문제점

- 높은 학력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활동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을 활용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이나 일자리 기회 부족으로 인한 은퇴 후 소외감 발생

○ 정책 방향

- 전기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중점

□ 신규 정책 제안

○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젝트

- AI 헬스 모니터링 기기 보급: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보급하여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
- 운동·영양 멘토링 프로그램: 지자체 체육시설과 연계한 그룹 운동과 식생활 교육
- 건강 코디네이터 운영: 보건소나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지역 내 건강상담 및 진료 연계

○ 시니어 디지털 네비게이터 사업

- '1인 1태블릿' 시범 보급: 공공서비스 및 건강 앱 중심으로 구성된 커스터마이징 기기 제공
- 동년배 디지털 강사 양성: 60대 초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을 통해 취업 연계
- AI기반 챗봇 생활도우미 서비스: 음성기반으로 병원 예약, 버스 시간 확인, 치매예방 퀴즈 등

○ '세대 연결' 지역사회 봉사 매칭 플랫폼

- 경력 기반 재능기부 플랫폼 운영: 퇴직 전 직업 경험을 지역사회 봉사와 연결(예: 법률상담, 코딩, 회계 교육 등)
- 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또는 청년 구직자와의 멘토링 연결(예: 인생 설계 코칭, 면접 코칭)
- 지역학교 또는 도서관 내 시니어 상주 자원봉사제 운영

○ 미래 대비형 노후준비 설계 지원사업

- '노후 생애설계 종합 진단 키오스크' 설치(복지관·보건소 등): 소득, 건강, 사회관계, 여가 등 다영역 설문 기반 진단

- 개인별 노후 설계 로드맵 제공: 국민연금, 주거지원, 건강보험 정보 등 맞춤형 안내
- 전기노인 재취업 상담센터 연계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탐색 및 재취업 교육

○ ‘시니어 스마트 마을’ 시범사업

- IoT 기반 주거 안전 시스템 설치: 낙상 감지, 원격 제어 가전, 자동 소등 등
-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카페, 정보화 교육실, 건강체크 공간이 융합된 복합시설
- 지역 특화 일자리와 연계: 텃밭 가꾸기, 로컬푸드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후기 노인(75세 이상)

○ 문제점

- 75세 이상 후기 노인은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며,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 정책 방향

- 후기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신규 정책 제안

○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복지, 간병, 건강, 식사, 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 설계
- 모바일 기반 돌봄 이력관리 시스템: 복지공무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 앱
- 24시간 대응 ‘시니어 안심콜’ 서비스: 위급 상황 시 즉시 연계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화/앱 콜센터

○ 인지저하 예방 및 치매 친화 공동체 조성

- ‘마을형 치매예방 학교’ 운영: 소규모 학습+운동+미술/음악치료를 결합한 치매예방 커리큘럼
-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인증제: 지역 내 상점, 이웃, 버스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응대 교육 실시
- 디지털 인지훈련 콘텐츠 보급: 태블릿 기반의 게임형 인지기능 유지 훈련 콘텐츠 무상 보급

- 후기노인 주거 안전 강화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 욕실·계단·주방 안전 리모델링 지원: 미끄럼 방지 바닥재, 손잡이, 자동조명 등
  - 주거지 모니터링 IoT 설치 지원: 낙상, 움직임 이상, 가스·화재 감지 센서 보급
  - 방문형 주거 점검 서비스 정례화: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등이 월 1회 점검
-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방문·모임형 정서 지원 사업
  - ‘1촌 맺기’ 정기 방문 프로그램: 지역 청년, 주부, 은퇴자 등과 1:1 연결 후 정기적 전화+방문 운영
  - 작은모임 운영비 지원: 이웃 후기노인 간 밥상 모임, 공예모임 등 형성 지원
  - 이동형 커뮤니티 카페 운영: 이동버스 내 음료 제공 + 프로그램 진행(예: 마을회관 순회)
- 초고령 친화형 대중교통·이동지원 시스템
  - ‘동네바퀴’ 초고령 맞춤형 이동 차량 운영: 전동카트형 차량, 자율배차 시스템
  - 노인보행특화구역 지정: 횡단보도 시간 연장, 휠체어 진입로 정비, 음성 신호등 설치
  - ‘보행 도우미’ 배치 시범사업: 병원·시장·복지관 근처 도우미 배치 → 동행 서비스 제공

#### 4)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인구정책 제안
  - 연령대별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여 명확한 정책 대상자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실시
  - 각 생애주기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와 인구정책 분야를 토대로 중점분야 재구조화
  - 기존 10개 분야를 8개로 재구성하고, 분야별로 생애주기에 맞춰 해당 부분 표시
- 이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을 기준으로 각 연령군에 어떤 정책 분야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
- 각 분야별 중점 정책 및 세부사업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설계와 예산 배분에 있어 기준이 되는 틀을 마련

[표 5-2] 생애주기 및 인구정책 분야 재구성

기존	임신/출산	양육/보육	돌봄	의료/보건	일자리/근로환경	주거	소득보장	교육	문화/여가	기타
신규	가족 형성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돌봄 지원	생애 건강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교육 및 역량 개발	정주 기반 및 지역 사회 구축	사회 통합과 포용성 확보
생애 주기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중점 분야	결혼지원	아동/청소년 양육	영유아/아동 돌봄	건강 지원	가족친화/일생활 균형	주거지원	청년 기반 조성	청년 역량 강화	여가/문화 활동	1인가구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돌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구교육/인식개선		양성평등
	난임 지원		노인 돌봄		경제활동 인구 확충/청년 일자리			다문화 교육		외국인 정책 수립
										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 기존 분절적 체계에서 통합·유기적 구조로 전환

- 기존 인구정책은 ‘출산’, ‘보육’, ‘일자리’, ‘의료’ 등 기능 단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는 생애주기의 흐름이나 정책 수요 간의 연결성을 담기 어렵다는 한계
- 새로운 체계에서 기능이 아닌 목적과 정책대상 중심의 8개 신규 분야로 재정비
- 정책 간 중복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정책의 연결성과 완결성을 강화
- 정책 대상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설정되었으며, 각 대상이 어떤 정책 분야와 연결되는지 표시
  - 예를 들어, 영유아는 가족형성, 양육지원, 돌봄, 건강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하며, 청년은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교육역량 강화,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의 전반적 흐름 파악 가능

## □ 8개 신규 정책 분야의 재정의

- 가족 형성 지원: 결혼, 출산, 정착 등 가족 시작 단계의 제도적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영유아·청소년기 자녀 양육과 돌봄에 초점
- 돌봄 지원: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 책임을 가족·지역 공동체와 분담
- 생애 건강: 건강관리, 심리·정서적 돌봄까지 포함하는 전 생애 건강 지원
-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일자리, 주거, 소득보장 등 개인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 및 역량 개발: 인식개선, 평생교육, 다문화 수용성 향상 등 사회적 역량 강화
- 정주 기반 및 지역사회 구축: 문화활동,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정착 여건 강화
- 사회통합과 포용성 확보: 1인가구, 다양한 가족, 외국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

## □ 중점 분야를 통해 정책 방향 명시

-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하단의 중점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경제적 자립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지원 등이 핵심이며, 건강 분야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서지원, 출산 건강 관리 강조
- 정책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

## □ 정책 간 연계·조정 기반 마련

- 대상-분야 간의 대응 관계를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간 우선순위, 중복 여부, 사각지대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 가능
  - 청년층이 여러 분야(자립, 건강, 교육 등)에 중첩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이 드러남
  - 고령층에는 '돌봄'과 '건강'이 집중됨으로써 고령화 대응 정책의 질적 강화를 위한 구조 설계 가능

## □ 정책 제외 및 통합

-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은 10개 사업은 인구정책 재구조화 과정에서 삭제했으며, 삭제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전문가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전에 진행된 인구영향 평가에서도 제외 의견이 많은 사업이었음
  - 장애인 관련 사업은 복지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인구정책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업 내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함께하는 노후생활에서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이 낮은 등급을 받아 제외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에서는 5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연구’는 높은 등급을 받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구정책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성과 평가와도 관련이 있음
  - 예를 들면, 공공주택의 청년층 거주기간 확대,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노인 통합돌봄 지원 전담조직 운영 조례 제정,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실태조사 등과 같은 개별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자살 관련 사업들이 3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사업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임
  - 그러나 중점분야가 일과 생활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략-분야와의 연계성이 낮음
  - 별도의 복지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표 5-3] 경기도 인구정책 제외 사업

전략	중점분야	사업명	등급	총점	IPA 분석 결과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경기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하	2.60	재검토 필요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중1	3.70	핵심 강화
	츄츄한 아이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중1	3.85	핵심 강화
	츄츄한 아이돌봄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중2	3.45	재검토 필요
함께 하는 노후 생활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하	2.90	재검토 필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인구인식 개선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연구	상	4.4	핵심 강화
	일과 생활균형 지원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 위험요인 관리	하	2.5	재검토 필요
	일과 생활균형 지원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하	2.5	재검토 필요
	일과 생활균형 지원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하	2.75	재검토 필요

○ 대상이나 정책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필요

-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과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은 하나로 통합하여 베이비부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 제안
- 외국인 관련 사업 중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합 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이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외국인주민 긴급 지원을 합쳐서 운영
- 일생활균형 상담지원과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도 하나로 합쳐서 인구정책 기본 계획에 넣는 것이 적절

## 2)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 1) 인구정책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 방향

#### □ 추진체계 진단

-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내 각 전략과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
  - 4대 추진전략(청년 삶의 질 강화,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함께하는 노후생활, 인구구조 변화대응)은 대체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나, 각 전략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필요도와 효과성이 낮은 사업 다수 존재
  - 청년 삶의 질 강화에서는 7개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은 12개, 함께하는 노후 생활 13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13개 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해당 사업의 필요도와 효과성 자체가 낮은 측면도 있지만, 추진전략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됨
- 추진전략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 등의 추진 전략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 필요
  - 추진체계 개편에서는 기존 인구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반영하여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것이 필요

#### □ 인구정책 방향 및 전제 조건

-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재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원인과 결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틀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함
-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정책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고, 현재 틀을 벗어난 완전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

-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경기도는 2024-2028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틀은 마련되어 있음
  -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의 재편 및 재구조화는 시행계획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완전 재구조화보다는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재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됨
- 이 연구에서는 2025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자 함
  - 새로운 비전, 목표, 중점 분야 제시
  - 전략-분야-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 기존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재구조화(유지, 통합, 삭제)
  - 거버넌스 재구조화

## 2)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 □ 비전

-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정책 방향의 설정 필요

### □ (정책목표 1)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
  - 결혼 및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 정주·주거·청년 생활 조건 전반을 개선해 출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주요 추진 방향
  - 청소년~청년 연계 정책 신규 포함: 청소년기부터 이어지는 정책 연계성을 통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표 5-4] 재구조화 전략을 반영한 경기도 인구정책 체계

비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 정책의 일상화				
	목표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 지원 강화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	출산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고령친화 정책체계 구축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주요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청년 연계 정책 신규 포함</li> <li>• 출산·주거지원 등 유사 사업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서비스 기능 연계 및 전달 체계 개편</li> <li>• 가족 특성 기반 세분 정책 강화</li> <li>• 다층적 양육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노년 준비</li> <li>• 후기노인 대상 신규 정책 발굴</li> <li>• 고령 서비스 (일자리, 돌봄 등)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비혼가구 대상 정책 신규 포함</li> <li>• 인식개선 사업 다변화</li> <li>• 인구구조 변화 대응 통합 프로그램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지원 중심 사업 통합 정비</li> <li>• 정주 중심 실효성 강화</li> <li>• 전달체계 및 수요 반영 체계화</li> </ul>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지원</li> <li>• 임신 및 출산 지원</li> <li>• 난임 지원</li> <li>• 청년 역량 강화</li> <li>• 청년 기반 조성</li> <li>• 주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돌봄</li> <li>• 아동/청소년 양육 및 돌봄</li> <li>• 가족 친화/일 생활 균형</li> <li>• 경력단절 여성 지원</li> <li>• 양육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돌봄</li> <li>• 일자리/소득 보장</li> <li>• 건강 지원</li> <li>• 여가/문화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 지원</li> <li>• 1인 가구 지원</li> <li>• 경제활동 인구 확충/청년 일자리</li> <li>• 인구교육/인식 개선</li> <li>• 양성 평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정책 수립</li> <li>• 외국인주민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지원</li> <li>• 다문화 교육</li> </ul>

- 출산·주거지원 등 유사 사업 통합: 중복되거나 단편적인 사업들을 묶어 정책 효율성 제고
- 출산장려 사업 정비: 효과성 낮은 출산지원 사업 재검토 및 구조 개편

○ 중점 분야: 생애 초기 단계의 생활 기반 안정화 증진

- 결혼 지원
- 임신 및 출산 지원
- 난임 지원

- 청년 역량 강화
- 청년 기반조성
- 주거 지원

□ (정책목표 2) 다양한 가족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 획일적 양육지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 형태와 상황에 따른 지원체계 정비
  -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형태별 수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
- 주요 추진 방향
  - 돌봄서비스 기능 연계 및 전달체계 개편: 돌봄 공백과 중복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가족 특성 기반 세분화: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가정 등 대상 맞춤형 양육지원 설계
  - 다층적 지원 확대: 시간대별, 연령별, 긴급 돌봄 등 다양한 수요 대응
- 중점 분야: 가족 구성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돌봄시스템
  - 영유아 돌봄
  - 아동/청소년 양육 및 돌봄
  - 가족친화/일생활 균형
  - 경력단절 여성 지원
  - 양육환경 조성

□ (정책목표 3)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 고령친화정책 체계 구축
  - 베이비부머와 후기 노인 등 세부 집단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필요
  - 고령자 내부의 다양성 반영한 정책 전환
- 주요 추진 방향
  - 후기노인 대상 신규 정책 발굴: 건강, 돌봄, 고립 예방 등 맞춤형 지원
  - 고령 서비스 통합: 일자리·돌봄·문화 등 노인정책 간 연계 강화
  - 효과 미흡 사업 재정비: 기존의 반복적/형식적 지원 사업 정비
- 중점 분야: 고령층을 지원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 노인 돌봄

- 일자리/소득보장
- 건강 지원
- 여가/문화활동

#### □ (정책목표 4)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 ○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 1인 가구, 비혼, 중장년 단독 가구 등 새로운 생활 구조에 적합한 지원체계 마련

##### ○ 주요 추진 방향

- 1인·비혼가구 대상 정책 신규 포함: 세대주 중심 제도 한계 극복
- 인식개선 사업 다변화: '정상가족' 중심의 관점을 벗어난 포용적 문화 조성
- 구조 변화 대응 통합 프로그램: 일상생활, 돌봄, 경제적 지원까지 연결된 맞춤형 서비스 설계

##### ○ 중점 분야: 인식 개선 및 비전통적 가구 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강화

- 다양한 가족 지원
- 1인 가구 지원
- 경제활동 인구 확충/청년 일자리
- 인구교육/인식 개선
- 양성 평등

#### □ (정책목표 5)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

##### ○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정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

##### ○ 주요 추진 방향

- 정주 중심 실효성 강화: 언어, 일자리, 주거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기반 조성
- 전달체계 및 수요 반영 체계화: 외국인 지원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정비

##### ○ 중점 분야: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정착 및 지원 강화

- 외국인정책 수립
- 외국인주민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 교육

#### □ 추진체계 개선 주요 내용

- ‘청년 삶의 질 강화’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은 재구조화 후,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로 분류됨
  - 인구정책에 포함된 청년정책의 많은 부분이 일자리 지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 및 출산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와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로 분할됨
  - 틈새 없는 돌봄시스템 구축에는 돌봄뿐 아니라 임신이나 출산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부분은 돌봄이나 양육보다는 출산친화 환경 조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함께하는 노후 생활’은 대상자가 중장년이나 노인이기 때문에 ‘고령친화 정책 체계 구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노인 관련 정책은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기관이나 센터 등에 대한 지원 및 종사자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이는 생애주기별 구분에서 대상을 나누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구조화 결과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 새로운 추진체계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재구조화

-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관련도가 낮은 사업은 제외, 유사 사업 통합, 신규 사업 추가를 통해 추진전략 및 중점 분야별 사업 재구조화
- 기존 117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은 제외가 되었으며, 10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통합, 신규 사업 28개가 추가됨에 따라 총 131개 사업으로 구성

- 새롭게 재구조화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영역별 사업 특성을 보면 전체 131개 중 기존 사업 98개, 신규 28개, 통합 5개임
- 저출생 정책에서는 기존이 45개, 신규 6개, 통합 1개로 기존 사업의 비중이 높음
- 고령화 사업은 전체 35개 중 신규사업이 11개인데,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구분하여 신규로 제안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는 신규 사업은 11개인데,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sup>8)</sup>에서 제안한 사업 일부를 포함시킨 결과임

[표 5-5] 영역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분류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합계
기존	45	23	30	98
신규	6	11	11	28
통합	1	1	3	5
합계	52	35	44	131

- 추진전략별로는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가 3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와 고령친화 정책 체계 구축이 각각 34개,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15개,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11개 순임

[표 5-6] 추진전략별 인구정책 분류

추진전략	개수	비율(%)
출산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	34	26.0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37	28.2
고령친화 정책 체계 구축	34	26.0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11	8.4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15	11.5
합계	131	100.0

8) 유정균 외(2025). “경기도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 분야별로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40개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회통합과 포용성 확보 23개(17.6%), 자녀 양육 지원 19개(14.5%), 생애 건강 18개(13.7%)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7] 분야별 인구정책 분류

분야	개수	비율(%)
가족 형성 지원	8	6.1
자녀 양육 지원	19	14.5
돌봄 지원	8	6.1
생애 건강	18	13.7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40	30.5
교육 및 역량 개발	12	9.2
정주기반 및 지역 사회 구축	3	2.3
사회통합과 포용성 확보	23	17.6
합계	131	100.0

#### □ 기대효과

-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향상
-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없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정적 보호 기능
- 생애 단계별(예: 청년기-결혼기-양육기-중장년기) 변화에 대응하는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 제공
- 수요자의 삶의 흐름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수용성·정책 신뢰도 향상

[표 5-8]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반 강화

순서	사업명	생애주기	종류
1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청년	기존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중장년/노인	기존
3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기존
4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청년	기존
5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청년	기존
6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청년	기존
7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존
8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기존
9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청년	기존
10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청년	기존
11	경기청년포털 운영	청년	기존
12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청소년/청년	기존
13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청년	기존
1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청년	기존
1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청년	기존
16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청년	기존
17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청년	기존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청년/중장년	기존
19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20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21	한방난임사업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22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23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24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2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청년/중장년	기존
26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청년/중장년	기존
27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영유아	기존
28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제한폐지 포함)	청년/중장년	기존
30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31	기회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청년/중장년	기존
32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의 청년층 거주기간 확대	청년	신규
33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청년/중장년	신규
34	비혼인동거가구 및 혼외 출산 후 동거가구를 가족형태로 포함	청년/중장년	신규

[표 5-9]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고도화

순서	사업명	생애주기	종류
1	아동 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	아동	기존
2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동	기존
3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기존
4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타	기존
5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아동	기존
6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	영유아/아동	기존
7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아동/청소년	기존
8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아동	기존
9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기존
10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기존
11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아동	기존
1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기존
13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영유아	기존
14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아동/청년/중장년	기존
15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아동	기존
16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영유아/아동	기존
17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영유아	기존
18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영유아/아동/청소년	기존
19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영유아/아동	기존
2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기타	기존
21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전 생애주기	기존
22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영유아/청년/중장년	기존
23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기타	기존
24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기존
25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청소년	기존
26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27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기타	기존
28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확대	청년/중장년	기존
29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30	일생활균형 상담지원 및 플랫폼 운영	청년/중장년	통합
31	주4.5일제 시범사업	청년/중장년	기존
32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청년/중장년	기존
33	청소년수당 지급	청소년	신규
34	지역정착형 진로탐색 프로젝트	청소년	신규
35	청소년 정서/심리 건강 지원 사업	청소년	신규
36	청소년 의회 및 참여권 제도화 사업	청소년	신규
37	형제자매 돌봄 바우처	청소년	신규

[표 5-10]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고령 친화 정책 체계 구축

순서	사업명	생애주기	종류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노인	기존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기타	기존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기타	기존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노인	기존
5	어르신 안전 하우징	노인	기존
6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전 생애주기	기존
7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노인	기존
8	노인 자살예방사업	노인	기존
9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노인	기존
10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노인	기존
11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전 생애주기	기존
12	누구나 돌봄	전 생애주기	기존
13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기타	기존
14	노인 무료급식 지원	노인	기존
15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노인	기존
16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노인	기존
17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디지털 사업)	노인	기존
18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노인	기존
19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청년/중장년/노인	기존
20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기존
21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중장년	기존
22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도직접, 거점형)	중장년	기존
23	베이비부머 인턴십 프로그램	중장년	통합
24	노인 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	노인	신규
25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프로젝트	전기노인	신규
26	시니어 디지털 네비게이터 사업	전기노인	신규
27	세대연결 지역사회 봉사 매칭 플랫폼	전기노인	신규
28	미래 대비형 노후준비 설계 지원 사업	전기노인	신규
29	시니어 스마트 마을 시범사업	전기노인	신규
30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플랫폼 구축	후기노인	신규
31	인지저하 예방 및 치매 친화 공동체 조성	후기노인	신규
32	후기노인 주거 안전 강화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후기노인	신규
3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방문·모임형 정서 지원 사업	후기노인	신규
34	초고령 친화형 대중교통·이동지원 시스템	후기노인	신규

[표 5-11]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인구/가구 변화 대응 정책 전환

순서	사업명	생애주기	종류
1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청년/중장년	기존
2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3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	청년/중장년	기존
4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청년/중장년/노인	기존
5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전 생애주기	기존
6	경기도 성평등 캠페인 추진	전 생애주기	기존
7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8	청년 구직단념자 일·경험 드림 사업	청년	신규
9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청년/중장년	신규
10	신(新)취약 계층인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청년	신규
11	빈집의 주거기능 회복과 활용 방안의 확대 기반 시설 확충	기타	신규

[표 5-12] 추진전략 및 사업 특성별 리스트: 이주민 통합지원 기반 구축

순서	사업명	생애주기	종류
1	결혼이민자 교육 및 지원	청년/중장년	통합
2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청년/중장년	기존
3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	아동/청소년	통합
4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청년/중장년	기존
5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영유아/아동	기존
6	학령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아동/청소년	기존
7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	전 생애주기	기존
8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전 생애주기	기존
9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전 생애주기	통합
10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전 생애주기	기존
11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청년/중장년	신규
12	지역별 빈일자리실태조사 및 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	청년/중장년	신규
13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화	아동	신규
14	이주배경 학생 밀집 지역/학교 단위 통합적 지원	아동/청소년	신규
15	외국인 주거실태조사 및 소셜 믹스 정책	전 생애주기	신규

### 3)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구성 방안

#### □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 부서 현황

- 경기도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담당관임
- 경기도는 2019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과’단위 규모의 인구문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중임
- 인구정책담당관 내에는 인구정책팀, 인구기획팀, 인구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 1명, 팀장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그림 5-1]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

1.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 및 실·국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인구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관련, 중앙·민간·시군과의 협력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평가, 인센티브, 컨설팅 등)	12.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인구교육,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관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 □ 현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

- 첫째, 기획조정실 산하에 소속되어 있어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은 부재
- 둘째,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 수행과정에서 사업 주무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평가 결과의 반영이 어려움
- 셋째, 인구정책팀, 인구기획팀, 인구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집행 기능과 평가/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단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인구전략실 아래 관련 ‘과’를 포함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권한 강화 위해 ‘인구전략실’ 설치

-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
  - 인구전략실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자발적 협력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인구문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심에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질적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구전략실’ 설치
  - 인구전략실은 정책 집행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구축
  - ‘실’ 단위의 인구 관련 거버넌스 구축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초이며, 인구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서울시에 여성가족실이 있지만, 주로 저출생 및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구 전반에 관해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음
- 서울시는 여성가족실 산하 6개 과를 구성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
  - 저출생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 산하에는 4~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5-2] 서울시 저출생 대응 관련 조직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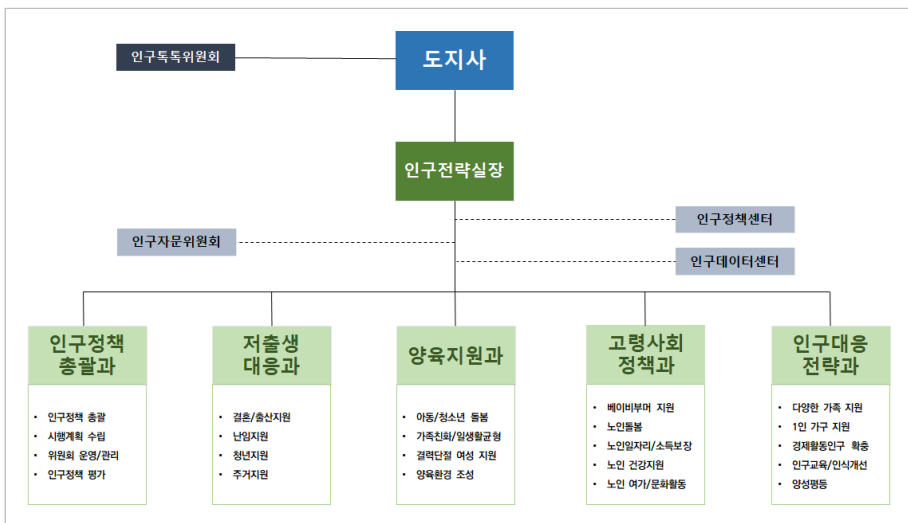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인구문제는 개별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명확한 정책 목표와 지향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population control policy)과 인구대응정책(population response policy)으로 구분 가능하며,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인구조정정책은 정책대상이 되는 인구변동요인에 따라 출산조절정책, 이민정책, 인구분산정책으로 세분화
  - 인구대응정책은 인구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주택, 자원개발, 고용, 교육, 복지 등)들이 해당
-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구성과 기능 설정

- 인구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환류 시스템, 장기적인 관점의 반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인구전략실 산하 기능별 5개의 과로 구성하였으며, 2개 위원회 및 2개 센터와의 협력 강화

[그림 5-3]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안)



- 인구전략실 산하의 '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
  - 인구정책 총괄과는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파악
  - 저출생 대응과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 지원부터 아동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 양육지원과는 아동·청소년 돌봄 및 일생활균형 지원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
  -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 인구대응 전략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로드맵을 작성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과 관련된 정책 지원
  - 이민정책의 경우, 최근 이민사회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부서를 바로 인구전략실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방안 필요
  - 현행 인구특독위원회는 역할을 강화하여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구조 대응 변화를 위한 주제도 포함하여 운영
  - 인구자문위원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확충해 인구전략에 대한 컨설팅 및 아젠다 발굴
  - 인구정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 인구자료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구데이터센터 구축

#### □ 인구전략실의 역할과 권한

- 인구전략실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로 필요한 관련 '과'들로 구성
- 인구전략실은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기획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수평적 구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반영이 어려움
  - 인구전략실에서 직접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통한 사업 평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기도 인구정책의 목표에 따라 필요한 '과'를 인구전략실 아래 설치하고, 각 '과'에서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경기', 양육을 함께하는 경기', '노후가 안정되는 경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경기'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를 인구전략실 아래로 편제
- 인구전략실에서는 저출생,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구조화
  -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고용, 교육, 주택, 가족,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개연성 높음
  - 생산가능인구와 돌봄인력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접근도 인구전략실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
- 즉, 경기도에서는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비, 축소사회 적응 방안,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
- 인구전략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범위
  - 인구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역할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인구전략실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이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
  - 기존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인구전략실 아래로 이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업무 및 기능은 새롭게 신설
-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방안
  - 인구전략실 아래에는 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별로 '과'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과'는 3~5개의 팀으로 구성
    - 인원은 인구전략실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 5명, 각 과별로 팀장 3~5명, 팀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팀원 3~5명의 규모로 구성
    -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인구전략실로 편제하며, 이민/외국인 정책의 경우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전략실로 편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인구전략실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평가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인구정책센터: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와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을 수행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을 일몰하거나 확대하는 데 활용
  - 경기연구원의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정책센터로 변경 검토
  - 인구데이터센터: 경기도 인구자료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취합하여 인구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인구변화 전망 및 연구 수행
  - 인구특특위원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을 신규 발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며, 저출생에서 나아가 고령화 및 이민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인구자문위원회: 인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경기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인구전략 컨설팅 수행

# 06

##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 1 결과 요약

- 경기도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재구조화 필요
- 경기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
- 특히 정책 대상의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정책체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
- 경기도가 추진한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정립
-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2025년 11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한계들을 지님
  - (생애주기 관점의 미비) 기존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나 청년 취업 등 국가적 현안 중심의 단발성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이 부족
  - (정책 대상의 세분화 부족 및 획일적 접근) 연령 기준으로 단순 구분하거나,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방식이 일반적임
  -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거버넌스 부재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 인구정책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가 상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됨에 따라 정책 조율과 일관된 추진이 어려움

-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개편 방안 및 인구정책 방향 제안
  -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내 각 전략과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필요도와 효과성이 낮은 사업 다수 존재
  - 추진전략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 등의 추진 전략을 개편하는 방안 필요
  -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정책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고, 현재 틀을 벗어난 완전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
  -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이 연구에서는 2025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자 함
    - 새로운 비전, 목표, 중점 분야 제시
    - 전략-분야-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 기존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재구조화(유지, 통합, 삭제)
    - 거버넌스 재구조화

## 2 정책 제언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인구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구조화 방안
  -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전환) 결혼-출산-양육-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주기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정책 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로 큰 틀에서 정책을 분류 하되, 동일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거나 제외 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경기도 인구정책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다섯 가지 정책 목표 및 중점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담당 부서 제시
  - (비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정책 방향 설정
  - (정책목표 1)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 (목표)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 (추진 방향)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성 강화
    - (중점 분야) 결혼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난임 지원, 청년 역량 강화, 청년 기반 조성, 주거 안정화 지원
  - (정책목표 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 (목표) 가족구성 형태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양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고도화

- (추진 방향) 돌봄 서비스의 공백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 (중점 분야) 영유아 돌봄 지원,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양육환경 개선

[그림 6-1] 재구조화 실행 위한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 ○ (정책목표 3)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 (목표) 베이비부머, 후기노인 등 고령층 세부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령친화 정책 마련
- (추진 방향) 건강관리,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중심으로 후기 노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중점 분야)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소득보장 강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대

### ○ (정책목표 4)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 (목표) 1인가구, 비혼가구, 중장년 단독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합한 지원 방안 마련
-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 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
- (중점 분야)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1인가구 생활지원 확대, 경제활동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정책목표 5)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

- (목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반 구축
- (추진 방향) 실질적 정주를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 반영 시스템 구축
- (중점 분야: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정착 및 지원 강화) 외국인정책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교육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추진체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구전략실' 신설 제안

- 정책 기획, 집행, 조정, 평가 기능을 통합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인구전략실」 설치 및 운영
- 산하에 기능별 전문 부서를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인구정책센터, 데이터센터, 자문위원회 등과 연계한 정책 개발 및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 강화
-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및 민관 협력 기반 강화
  - 주민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하여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기업 CEO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실효성 높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 추진
  -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정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민관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체계 구축
  - 민간 참여기업에 대한 인구정책 우수사례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 동기 강화

-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지원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수요 분석으로 정책을 선제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빅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한 주민 수요 예측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강화
-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정책 담당자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정기 실시
  - 데이터 분석, 정책 설계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 강화
  - 신규 공무원 교육 시 인구정책 설계, 평가, 인구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전문성 향상 지원
- 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
  - 경기도 내 시군 간 정책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운영
  - 정책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간 정책 격차 해소 및 균형 잡힌 정책 발전 유도
- 정책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인구정책 수립 및 개편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인구정책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통합·조정하거나 폐지하여 효율성 제고
- 도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수요자 체감형 정책 발굴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체계 개편 및 정책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됨
  - 향후 연구에서는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수요자 체감형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 필요
  - 성별 가치관 격차 해소를 위한 공론장 마련, 1자녀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무자녀·신혼부부 지원 확대,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과 보호체계 마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경기도(2024).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
- 경기도(2025).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김미곤·고제이·이철화·홍석철·전병목(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정균·어광수·이근복·박기덕·황은정·김재신·박지은(2025).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경기연구원.
- 이소영·이지혜·이철희(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외(2023).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병권·전용수·김신애·안수지·김선정(2023a).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저출산 대응 전략』, 국회예산정책처.
- 최병권·전용수·김애선·안수지·김선정·심록희(2023b).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원하는 가정 많은데 공급 부족...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한달”, 한국일보(2025년 3월 5일).
-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Abstract

This study offers a strategic plan for restructuring Gyeonggi Province's population polici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and long-term sustainability. Grounded in a diagnostic assessment of existing policy frameworks—including those addressing low birth rates and aging—it presents a reorganized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2025 Implementation Plan.

The study emphasizes the transition to a life cycle-based approach, ensuring comprehensive support across all stages of life—from birth and childcare to youth, adulthood, and old age.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precise policy targeting by reflecting divers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ithin population groups, as well as enhancing efficiency through the integration of overlapping or low-impact programs. A critical component is the strengthening of policy governan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control tower and the realignment of departments and responsibilities.

To enable effective coordination and execution, the study recommends the creation of a Population Strategy Office, which would integrate policy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unctions. The office would work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centers and advisory bodies to create a feedback loop for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this comprehensive restructuring, Gyeonggi Province aims to establish an integrated, future-oriented model for population policy governance.

**Keyword**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Population Policy, Restructuring, Implementation System



# 부록



# 부록

## 경기도민 저출생 대응 정책 평가 및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가족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 배경 질문 (10)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19세 이상 조사 참여 가능

- 1) 19~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

**SQ3에서 8) 경기 선택 시에만 조사 참여 가능**

**SQ3.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① 서울 | ⑦ 울산        | ⑬ 전남 |
| ② 부산 | ⑧ 경기        | ⑭ 경북 |
| ③ 대구 | ⑨ 강원        | ⑮ 경남 |
| ④ 인천 | ⑩ 충북        | ⑯ 제주 |
| ⑤ 광주 | ⑪ 충남(세종 포함) |      |
| ⑥ 대전 | ⑫ 전북        |      |

**SQ3-1.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01. 가평군 | 08. 김포시  | 15. 안산시 | 22. 오산시 | 29. 포천시 |
| 02. 고양시 | 09. 남양주시 | 16. 안성시 | 23. 용인시 | 30. 하남시 |
| 03. 과천시 | 10. 동두천시 | 17. 안양시 | 24. 의왕시 | 31. 화성시 |
| 04. 광명시 | 11. 부천시  | 18. 양주시 | 25. 의정부 |         |
| 05. 광주시 | 12. 성남시  | 19. 양평군 | 26. 이천시 |         |
| 06. 구리시 | 13. 수원시  | 20. 여주시 | 27. 파주시 |         |
| 07. 군포시 | 14. 시흥시  | 21. 연천군 | 28. 평택시 |         |

**SQ4.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생각하시며 이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자녀 없음 → 조사 중단
- ② 미취학 영유아
- ③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④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⑤ 중학생
- ⑥ 고등학생
- ⑦ 성인 자녀만 있음 → 조사 중단

**SQ5. 현재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미혼
- ② 유배우
- ③ 이혼 또는 사별

**SQ6. 귀하 가구의 총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포함)**

총 (        ) 명

**SQ7. 귀하 가구의 동거 자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출가 및 독립 자녀 제외)**

- ① 미취학 영유아 (        )명
- ② 초등학교 (        )명
- ③ 중학생 (        )명
- ④ 고등학생 (        )명
- ⑤ 성인 자녀 (        )명

**SQ8. 귀하 가구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세대 가구 : 한 가구 안에 세대가 1개만 있는 경우.  
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일반적인 가정, 1인 가구 등
- ② 2세대 가구 : 한 가구 안에 서로 다른 세대가 2개 있는 경우.  
예: 부모 + 결혼한 자녀 부부, 시부모 + 며느리·아들 가족
- ③ 3세대 이상 가구 : 한 가구 안에 서로 다른 세대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예: 조부모 + 부모 + 손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
- ④ 비친족 가구 :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  
예: 룸메이트, 직장 동료, 학생들끼리 함께 사는 경우
- ⑤ 기타 : 위 보기들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가구를 직접 작성.  
예: 시설 거주자, 공동생활 가구 등

- ① 1세대 가구
- ② 2세대 가구
- ③ 3세대 이상 가구
- ④ 비친족 가구
- ⑤ 기타 (        )

**SQ9.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 포함)
- ②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중퇴 포함)
- ⑤ 대학교(4년제)졸업(재학·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수료/졸업(재학·중퇴 포함)

**SQ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관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⑪ 전업주부                      |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⑫ 학생                        |
| ③ 사무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⑬ 무직                        |
| ④ 서비스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⑭ 기타 (                    ) |
| ⑤ 판매 종사자       | ⑩ 군인              |                             |

→ ⑪, ⑫, ⑬ 응답 시, SQ12.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이동

**SQ11.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③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근로자 (학습지 교사, 택배·배달기사 등)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
- ⑥ 무급 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SQ12.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임대수입, 이자, 보너스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

-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 ② 100-2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 ③ 200-3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SQ5. 혼인상태 ② 유배우인 경우만 응답**

**SQ13. 맞벌이 가구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맞벌이 가구
- ② 외벌이 가구

A.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13)

A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낫다
- ③ 안 해도 상관없다
- ④ 하지 않는 것이 낫다

A2. 귀하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편이 낫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A3.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원하는 미혼 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이를 가지려면 남성, 여성 모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 ② 여성에게는 관참은 일이다
- ③ 남성에게는 관참은 일이다
- ④ 여성, 남성 모두에게 관참은 일이다

A4.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0명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이상

A5. 가족의 다음과 같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 출산을 통해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 ②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 ③ 결혼을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
- ④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⑤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 ⑥ 기타( )

A6. 귀하는 자녀에 대한 돌봄(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부담 느끼지 않음	별로 부담 느끼지 않음	보통	다소 부담을 느낌	매우 부담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는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학비, 학원비, 용돈 등)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부담 느끼지 않음	별로 부담 느끼지 않음	보통	다소 부담을 느낌	매우 부담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SQ5. 혼인상태 ② 유배우인 경우만 응답

A8. (혼인상태 유배우인 경우만 응답)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임신 중인 경우는 '있음'으로 간주하여 응답)

- ① 있음 → A8-1로 이동
- ② 없음 → A8-2로 이동

A8-1.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 몇 명의 자녀를 더 가질 계획입니까?

명 → B1로 이동

A8-2 응답 후 B1으로 이동

A8-2.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2순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현재 자녀로 충분
- ② 나이/건강상 이유
- ③ 경제적 부담
- ④ 육아에 대한 부담
- ⑤ 본인이나 배우자가 원치 않음
- ⑥ 기타(            )

B. 저출생에 대한 인식

B1. 귀하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B2. 귀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2순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 ② 알·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 ③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④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 ⑤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 ⑥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 ⑦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 ⑧ 기타(            )

B3. 귀하는 다음의 저출생 정책에서 다음의 영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알·가정 양립	①	②	③	④	⑤
2	양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B4. 귀하는 다음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	①	②	③	④	⑤
2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	①	②	③	④	⑤
3	논치보지 않고 마음편하게 육아지원제도 사용	①	②	③	④	⑤

**B5. 귀하는 다음의 돌봄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출퇴근 시간, 병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①	②	③	④	⑤

**B6.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혼 청년
- ② 무자녀 부부(신혼 부부 등)
- ③ 한자녀 부부
- ④ 2자녀 이상 부부

**B7.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금 지원 확대
- ②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인프라 구축
- ③ 국민 인식(가치관) 제고
- ④ 청년 일자리 확대
- ⑤ 주거인프라 확대
- ⑥ 기타( )

**B8.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2순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양립 지원
- ②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적 시술 확대
- ③ 두 번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 정책 강화
- ④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 ⑤ 자녀양육 지원 강화
- ⑥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⑦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 ⑧ 보육시설 확충
- ⑨ 기타 ( )

**B9-1. 다음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척도]**

(필요도)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효과성)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응답 해주시시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임신과 출산의 돌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한방난임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분만회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제한폐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획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9-2. 다음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척도]**

(필요도)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효과성)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응답 해주시시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총한 아이 돌봄 지원	아동 인제나돌봄(초등 시설형)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족돌봄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동돌봄 기회소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위소득 150%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9-3. 다음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척도]**

(필요도)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효과성)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응답 해주시시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출생 보육환경 조성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맘대루 A+ 놀이터 설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 야외놀이놀이터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임산부와 영유아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영주차장 가족배려 우선주차면 설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9-4. 다음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척도]**

(필요도)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효과성) 출산을 제고(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응답 해주시시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 돌봄 확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민 고령화 대응 정책 평가 및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 배경 질문

□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 나이 : 만 □세

□ 현재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또는 사별

□ 가구원 수 : 총 □명

□ 가구형태

① 1세대 가구

② 2세대 가구

③ 3세대 이상 가구

④ 비친족 가구

⑤ 기타 ( )

□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 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 포함)

⑤ 대학교(4년제)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 수료/졸업(재학, 중퇴 포함)

□ 직업 (전업주부, 학생, 무직은 가구소득으로 이동)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전업주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 ( )

→ ⑪, ⑫, ⑬ 응답 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이동

▣ 고용 형태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③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근로자 (학습지 교사, 택배·배달기사 등)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
- ⑥ 무급 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 월평균 가구 소득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A. 부양

1. 귀하는 현재 학교(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귀하는 독립하지 못해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생활비, 의료지 지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보통	다소 부담을 느낌	매우 부담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 ① 한 분 이상 살아계심
-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모두 안 계심

4. 귀하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생활비, 의료지 지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보통	다소 부담을 느낌	매우 부담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정서 지원, 신체적 지원, 도구적 지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보통	다소 부담을 느낌	매우 부담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 B. 고령화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2.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임	매우 영향이 있을 것임
①	②	③	④

3. 노인은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세 )

4. 귀하는 노인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기준
- ② 연령
- ③ 기능 상태(신체적, 인지적)
- ④ 고용 상태(퇴직 또는 재취업 여부 등)
- ⑤ 가족 구성 형태(1인 가구, 노인 부부가구 등)
- ⑥ 기타 ( \_\_\_\_\_ )

## C. 정책 수요

5. 귀하의 현재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소득보장
- ② 건강
- ③ 돌봄
- ④ 일자리
- ⑤ 여가
- ⑥ 주거
- ⑦ 교통
- ⑧ 기타 ( \_\_\_\_\_ )

6.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노년기 소득보장 정책(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 ② 노년기 건강 지원 정책
- ③ 노년기 돌봄 정책
- ④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정책
- ⑤ 노년기 여가활동 지원
- ⑥ 노인 주거 지원 정책
- ⑦ 노인 교통 지원 정책
- ⑧ 기타 ( \_\_\_\_\_ )

7. 노년기 건강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건강 검진 및 질병 예방
- ②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
- ③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운동 지원
- ④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⑤ 영양 및 식생활 관리
- ⑥ 건강 정보 접근성 강화
- ⑦ 기타 (                    )

8. 노년기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예: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서비스 등)
- ②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예: 재가요양, 요양시설 접근성 향상 등)
- ③ 기초생활 및 일상지원 서비스 (예: 식사 배달, 가사 지원, 안전 확인 등)
- ④ 정신 건강 및 정서적 돌봄 (예: 말벗, 우울증·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 ⑤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예: 자조모임,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
- ⑥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예: IoT 기기, AI 돌봄로봇, 원격 모니터링 등)
- ⑦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예: 노인 맞춤형 주택 개조,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 ⑧ 이동 지원 서비스 (예: 무료 셔틀, 장애인콜택시, 병원 이동 서비스 등)
- ⑨ 기타 (                    )

9. 노년기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다양한 일자리 유형 확대
- ② 적성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매칭
- ③ 직무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④ 근로 조건 개선
- 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
- ⑥ 기타 (                    )

10. 노년기 여가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공간 및 시설 확충
- 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품질 개선
- ③ 이동 및 접근성 지원
- ④ 참여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⑤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⑥ 디지털 여가활동 접근성 강화
- ⑦ 여가활동비 지원
- ⑧ 기타 (            )

11. 노년기 주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②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안전 개선 지원
- ③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설계 보급
- ④ 커뮤니티형 고령자 주거 모델 확대
- ⑤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 ⑥ 기타 (            )

12. 노년기 교통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 ② 이동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 ③ 보행환경 개선
- ④ 의료·복지시설 방문 교통 지원
- ⑤ 교통 취약지역(농촌·산간 등) 맞춤형 지원
- ⑥ 교통정보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교육
- ⑦ 고령운전자 대상 면허 관리 및 대체교통 연계
- ⑧ 기타 (            )

13. 귀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 ② 세금 인상 및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 증가
- ③ 세대 간 갈등 증가
- ④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
- ⑤ 입시 경쟁 완화 및 진학 어려움 감소
- ⑥ 취업난 완화 및 경쟁 감소
- ⑦ 기타 (            )

### D.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

14. 다음은 경기도의 고령화 대응 정책입니다.

(필요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효과성) 고령사회 대비 또는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확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르신 안전 돌봄망 구축	응급안전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르신 안전 하우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노인 자살예방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돌봄매니저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누구나 돌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노인 무료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점 분야	사업명	필요도					효과성				
		전혀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르신 문화 생활 기회	경기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 지원(디지털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신중년 지원 체계 구축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급직접, 거점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베이비부머 인턴십(컨설팅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